creative commons

COMMONS DEED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dCollection

언론정보학석사학위논문

# 한국 선거 캠페인에서 후보자의 이념 포지셔닝:

## 중위유권자 대 선명성

2022년 2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언론정보학과

심 유 하

# 한국 선거 캠페인에서 후보자의 이념 포지셔닝:

## 중위유권자 대 선명성

지도교수 한 규 섭

이 논문을 언론정보학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21년 11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언론정보학과

심 유 하


심유하의 언론정보학 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21년 12월

위 원 장 이 철 주 (인)

부위원장 이 훈 (인)

위 원 한 규 섭 (인)

# 초 록

한국의 선거 후보자들은 어떤 포지셔닝을 취하는가? 여기에는 두 가지 가설이 있을 수 있다. 우선 중위 유권자(median voter)의 위치로 포지셔닝 할 것이란 가설이 성립할 수 있다. 즉 후보자들은 가장 많은 유권자들과의 정책적 거리를 최소화하는 것이 당선에 유리할 것이기 때문에 중위 유권자의 위치에 최대한 가깝게 포지셔닝 할 것이란 가설이다. 반면 방향성 모델(directional model)에 의하면 유권자들의 투표 관련 결정은 두 단계를 거쳐 형성된다. 우선 자신이 지지하는 진영을 결정한 후 그 진영에서 가장 극단적인 성향을 가진 후보에게 투표하게 된다는 것이다.

본 분석에서는 한국의 주요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들이 캠페인 기간 동안 어떤 포지셔닝을 취하는지 살펴보기 위해 지난 2017년 제19대 대통령 선거와 2018년 제7회 지방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약 15-30개 정책 사안에 대한 입장을 물어서 취합했다. 이후 일반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동일한 정책 사안에 대한 입장을 묻는 자체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2017년 한국사회조사에도 동일한 설문을 포함했다. 여기에 문항반응모델(item response model)을 적용하여 각 유권자들과 후보자들의 정책 입장을 동일한 축에서 비교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우선 선거과정에서 후보자들의 포지셔닝 전략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살펴봤다. 이를 위해 후보자의 정책성향 점수를 구하고 유권자들의 정책성향 점수의 분포와 비교함으로써 후보자들의 포지셔닝이 '방향성 모형' 또는 '근접 모형'에 더 가까운지 살펴봤다. 분석 결과 대통령 선거 및 지방선거 모두에서 양대 정당 중 더불어민주당 후보자들이 선명성을 강조하는 포지셔닝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자유한국당 후보들은 상대적으로 보수적인 위치에 포지셔닝을 했으나 선명성보다는 자유한국당의 평균적 지지층 또는 중위 유권자에게 어필하는 포지셔닝을 했다. 이러한 진영 간 차이는 본 연구가 이루어진 시기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등의 영향으로 보수진영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매우 비등하던 시점이었던 점이 작용한 것으로 해석 가능하다.

다음으로 지방선거에서 경합 지역일수록 후보자들의 선명성 경쟁이 더 치열해지는지 확인했다. 그 결과 양대 정당 모두 대선 득표율 차이가 많이 나는 지역, 즉 경합이 적은 지역에서 중도화 하는 경향이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특히 자유한국당 후보들이 대선 득표율 차이가 많이 나는 지역에서 중도화 하는 경향이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경합이 큰 지역에서 선명성 경쟁을 하는 경향이 나타나긴 했으나 큰 차이가 발견되진 않았다.

그렇다면 이러한 후보자들의 포지셔닝은 유권자들의 실제 정책 선호와 얼마나 상이한 결과를 낼까? 즉 이러한 선명성 경쟁이 대의민주주의에 가지는 함의는 무엇일까? 본 분석에서는 실제 투표결과와 유권자들의 정책 투표를 가정한 선거결과를 비교해 보았다. 분석결과 실제 선거 결과와 정책 투표를 상정한 선거 결과 간에 큰 괴리가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후보자들의 양극단화된 포지셔닝이 대의민주주의가 가정하는 후보자들의 대표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유권자들은 후보자들의 이러한 극단적 정책 입장을 인지하고 있을까? 본 분석에서는 유권자들이 인식하는 후보자들의 이념 성향과 후보자들의 실제 이념 성향이 얼마나 일치하는지를 확인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설문항목에 기재된 '응답자가 생각하는 후보자의 이념 성향 문항'(0-10점 척도)을 측정해 분석했다. 제19대 대통령 선거의 경우 유권자들이 가진 양대 정당 후보자의 이념 위치와 실제 후보자의 정책선호 위치 사이에는 상당한 괴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유권자들은 더불어민주당 후보자들의 입장을 실제보다 훨씬 중도에 가깝게 인식하고 있었다. 반면 자유한국당의 경우 유권자들이 인식하는 후보자들의 성향이 실제보다 더 극단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선거에서도 마찬가지로 유권자들은 더불어민주당의 후보들을 실제보다 온건한 성향으로 인식했으며, 자유한국당 후보들을 극단적인 성향으로 인식했다. 다만 지방선거의 경우 자유한국당 후보들이 실제로 극단적으로 응답해 유권자들의 인식과 유사했다. 이러한 체계적인 인식상의 오류는 2017년 당시 한국 사회에 확산한 보수 심판 분위기로 인해 응답자들이 자신이 선호하는 후보자들의 정책 입장을 '온건' 성향으로 평가하고 불선호하는 후보자들을 '극단' 성향으로 인식하는 투사

(projection) 현상으로 해석할 수 있다. 즉 유권자들은 후보자들의 정책입장에 따라 투표 결정을 하기보다는 지지하는 후보를 실제보다 '중도'에 가깝다고 인식하며 지지하지 않는 후보를 실제보다 '극단'에 가깝다고 인식하는 경향이 있던 것으로 보인다.

결론적으로 정치엘리트들의 선명성 경쟁이 존재하며, 유권자들이 가진 후보자들의 실제 정책 입장에 대한 인식에는 체계적인 오류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 이러한 선명성 경쟁이 대의민주주의에 가지는 함의는 분명했다. 선출된 후보들과 유권자들의 정책 선호와의 사이에는 분명한 괴리가 존재했다. 이에 따라 정치엘리트들은 매우 양극단화된 선택지를 제시하게 될 가능성이 높고 이는 유권자들의 정치적 양극단화를 더욱 조장하는 결과로 이어져 전반적인 정치적 양극단화 현상이 더욱 심화되는 악순환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

**주요어 : 후보자 포지셔닝, 중위투표자, 선명성 경쟁, 정치적 양극화, 문항반응이론, 정책투표, 공간모델**

**학 번 :** 2013-22841

<목 차>

**제1장 문제제기** ····· 1

**제2장 이론적 논의** ····· 4

제1절 정치적 양극단화 ····· 4

제2절 후보자 포지셔닝 ····· 9

**제3장 연구가설 및 연구질문** ····· 13

**제4장 연구방법** ····· 17

제1절 분석자료 및 분석대상 ····· 17

제2절 분석방법 ····· 23

**제5장 분석결과** ····· 29

제1절 정책문항 및 유권자 정책선호 기술통계 ····· 29

제2절 후보자 포지셔닝 ····· 34

제3절 후보자 포지셔닝: 경합에 따른 선명성 강조 ····· 45

제4절 가상 득표율 對 실제 득표율 ····· 49

제5절 후보자의 실제 정책 입장과 유권자의 인식 ····· 54

**제6장 논의 및 결론** ····· 58

제1절 연구 결과 요약 ····· 58

제2절 연구 결과의 함의와 한계 ····· 61

**제7장 참고문헌** ····· 63

**부록** ····· 69

**Abstract** ····· 102

# <표 목차>

<표 1> 설문조사 표본: 인구학적 특성 ····· 18

<표 2> 설문문항 분류 ····· 19

<표 3> 설문 문항별 기술통계 ····· 21

<표 4> 대선 및 광역단체장 선거 후보자 명단 ····· 22

<표 5> 문항반응모형 유형 ····· 26

<표 6> 각 데이터 설문문항 성향 점수 ····· 30

<표 7> 유권자의 정책성향 퍼센타일 분포 ····· 32

<표 8> 인구통계학적 정보에 따른 정책입장 ····· 33

<표 9> 제19대 대통령 선거 후보들 정책 입장 ····· 35

<표 10> 제7회 지방선거 각 정당 후보들 정책입장 ····· 36

<표 11> 제19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정책 입장점수와 퍼센타일 ····· 37

<표 12> 제7회 지방선거 정당별 정책입장과 퍼센타일 ····· 41

<표 13> 제7회 지방선거의 지역별 후보자 정책입장과 퍼센타일 ····· 43

<표 14> 경합 정도에 따른 포지셔닝 ····· 46

<표 15> 서울에서 영남/호남 후보자들의 포지셔닝 ····· 47

<표 16> 제19대 대통령선거 가상 득표율 對 실제 득표율 ····· 50

<표 17> 제7회 지방선거 가상 득표율 對 실제 득표율 ····· 51

<표 18> 제7회 지방선거 실제 당선자 수와 정책선호 기반 '가상' 당선자 수 ···· 53

<표 19> 제19대 대통령선거에서 후보자의 실제 정책입장과 유권자의 인식 ····· 55

<표 20> 제7회 지방선거에서 후보자의 실제 정책입장과 유권자의 인식 ····· 56

# <그림 목차>

<그림 1> 대선연구 1: Rasch model / LTM model / TPM 모형 적용 결과 ····· 27

<그림 2> 대선연구 2: Rasch model / LTM model / TPM 모형 적용 결과 ····· 27

<그림 3> 지방선거 연구: Rasch model / LTM model / TPM 모형 적용 결과 ····· 27

<그림 4> 제19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정책입장 ····· 40

# 제 1 장 문제제기

세계적으로 정치적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 특히 2020년 치러진 미국 대통령 선거는 미국 사회의 극단적 분열과 심각한 양극화 현상을 여지없이 드러냈다. 미국 대선을 앞두고 발표된 국제위기그룹(International Crisis Group, ICG) 보고서에는 미국 내에서 발생하는 인종차별, 혐오범죄, 무장집단의 공격 등 대통령 선거일 전후로 나타나는 일련의 폭력적인 사건들에 대한 경고가 담겼다. 실제로 미국에서 선거결과가 나오기 전에 총기 판매가 급증했으며 일부 상점들이 창문에 보호시설을 설치하는 등 공화당과 민주당 지지자들 간 내전에 대비하는 모습까지 보이기도 했다. 이런 정치적 양극화가 투표율 상승을 견인한 측면도 있지만 후보 간 정책 대결보다는 정치적 양극단화를 조장하고 사회적 분열을 초래한 점을 간과할 수 없다.

한국도 정치적 양극단화가 심각한 상황이다. 한국행정연구원에서 조사한 '사회갈등지수를 통해 본 한국의 사회통합 수준'을 살펴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하위권으로 나타났으며 OECD 36~37개 회원국 중 2005년 31위(1.082), 2010년 32위(0.984), 2015년 32위(1.025)를 차지했다(박준, 정동재, 2018). 우리나라 국민들은 사회에 존재하는 다양한 유형의 갈등 중에서도 진보와 보수 간의 이념 갈등을 가장 심각한 갈등이라고 인식하고 있었으며(김문길 외, 2019), 학계에서도 국회와 정당, 정치엘리트 차원의 이념적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꾸준히 제시되고 있다(강원택, 2012; 가상준, 2016; 정동준, 2017; 한규섭, 김상범, 2021).

미국과 한국 모두 정치엘리트 차원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는 데는 학계의 이견이 없다. 특히 1990년대 이후 미국 정치엘리트 차원의 양극화가 심화됐다는 내용의 많은 연구가 축적되었고 학자들 사이에서 일정 수준의 합의가 이루어졌다(Fleisher & Bond, 2004; McCarty, Poole & Rosenthal, 2016; Theriault, 2006). 한국의 경우에도 최근 다양한 연

구를 통해 정치 엘리트들 간의 양극단화가 심화되고 있다는 결과들이 보고되고 있다. 지역감정의 영향이 압도적이던 시대에는 정당 간 이념적 차별성이 크지 않았으나 2000년대에 접어들면서 진보-보수 간 이념 갈등이 심화되면서 정당 간 이념 격차가 증가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반면, 정치엘리트와는 달리 유권자들의 정치적 양극단화가 얼마나 진행되었는가에 대해서는 학계에서 상당한 논란이 있으며 아직까지 일관된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했다. 나아가 최근에는 이러한 유권자를 둘러싼 학계의 논쟁이 유권자들의 정치 양극화는 '사회정체성화' 됐다는 결론으로 수렴하고 있다. 이는 정치적 양극단화가 일상생활의 영역으로까지 확장되었음을 시사한다.

그렇다면 한국의 선거 후보자들은 유권자들의 양극단화를 조장하는가? 많은 학자들은 선거 정치를 정치적 양극단화의 주범으로 지목한다. 가령 이내영(2011)은 한국 사회에서 진보보수 간 이념갈등이 심화되는 주된 이유는 정치엘리트들 때문이며 이들의 이념적 갈등이 증폭되어 일반 유권자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제로섬 게임이라는 선거의 속성상 승자 독식이 불가피하고 전통적인 지지층을 규합하기 위해 매우 극단적인 선택지를 유권자들에게 제시하는 것이 일반화 되어 있다는 비판이다. 또 정당 정치의 약화와 함께 상시적 캠페인(permanent campaigning)이 고착화되면서 비 선거기간에도 정치엘리트들의 이러한 행태가 지속될 수밖에 없다. 한국도 1987년 민주화 이후 지방선거가 도입되는 등 거의 매년 중요한 선거가 있다. 따라서 자기 진영 유권자들을 결속시키는 과정이라 볼 수 있는 선거 캠페인이 반복적이고 상시적인 일상이 되어왔다. 만약 캠페인 기간 동안 후보자들이 극단적인 입장을 취하는 것이 일반적인 포지셔닝 전략이라면 선거의 이러한 양극단화 기능을 더욱 강화시키는 기재로 작동할 것이 분명하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 선거 캠페인에서 후보자들의 포지셔닝 전략을 살펴본다. 선거 정치가 유권자들의 정치적 양극단화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증명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과제이며 본 논문의 범위를 넘어선다. 대신 본 연구에서는 이런 연구 방향의 첫 번째 단계로서 한국 선거 정치에서 후보자들이 유권자들에 비해 얼마나 극단적인 포지셔닝을 하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이는 선거 정치가 유권자 양극단화에 미치는 영향을 보이기 위한 전제 조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만약 후보자들이 유권자들에 비해 특별히 극단적인 포지셔닝을 하지 않는다면 선거 정치와 정치적 양극단화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한 가설은 성립조차 되기 어려울 것이다.

# 제 2 장 이론적 논의

## 제1절 정치적 양극단화

미국과 한국 모두 정치엘리트 차원의 양극화가 심화되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가 축적되었고 학자들 사이에서 일정 수준의 합의가 이루어졌다(Fleisher & Bond, 2004; McCarty, Poole, & Rosenthal, 2016; Theriault, 2006). 대표적으로 메카시, 풀, 로젠탈(2016) 등의 연구자들은 미국 의회에서 의원들의 표결 기록을 분석하여 지난 50년간 공화당과 민주당 간 입장 차이가 지속적으로 벌어지고 있음을 경험적으로 증명했다.

한국의 경우에도 2000년대에 접어들면서 진보-보수 간 이념 갈등이 심화되면서 정당 간 이념 격차가 증가하고 있다. 이내영(2011)은 이전 국회에 비해서 17대, 18대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의 중도성향 비중이 줄어들었다고 주장했다. 강원택(2012)과 가상준(2014)은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2000년도 이후 국회의 양극화가 심화되기 시작해서 19대 국회에서 가장 심각해졌다고 밝혔다. 정동준(2017) 역시 2002년부터 2016년까지 유권자와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비교 분석하며 여당과 일반 유권자와의 이념적 거리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정부와 정치엘리트 차원의 이념 성향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음을 증명했다. 한규섭과 김상범(2021)은 국회의 표결결과를 분석해 두 주요 정당 간 성향 차이가[1] 지난 2017년 이후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음을 확인했으며, 또 지난 1987년 민주화 이후 주요 정당 간 공동발의도 줄어들고 있음을 밝혔다.

반면, 정치엘리트와는 달리 유권자들의 정치적 양극단화가 얼마나 진행되었는가에 대해서는 학계에서 상당한 논란이 있어왔다. 아브라모위츠와 선더스(2008)는 몇몇 주요한 정책에 대한 정당 지지자들 간 입장의 차이가 과거에 비해 벌어지고 있다는 점 등을 들어 일

[1] 정치엘리트의 양극화 지수의 범위는 0~2이며, 양대 정당 간 평균 입장의 차이를 의미한다.

반 유권자들 차원의 양극단화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주장한다(Abramowitz & Saunders, 2008). 즉 정치엘리트와 마찬가지로 일반 유권자 차원에서도 이념적 성향이 양극화되며 중도층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다. 국내에서도 정치권의 이념 갈등이 심화되면서 유권자들이 지지하는 정당을 상대 정당에 비해 더 감정적으로 선호하는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으며, 지지 정당에 따라 일관되고 동질적인 정치적 태도를 가지려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다수 존재한다(길정아, 하상응, 2019; 장승진, 서정규 2019; 정동준, 2016, 2018). 길정아(2019)는 이와 같은 유권자의 정서적 양극화가 투표에도 상당한 영향을 끼치고 있음을 경험적으로 증명한 바 있다.

한편 몇몇 학자들은 유권자 차원의 양극화는 전혀 근거가 없는 이야기이며, 만약 양극화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가 과장되었다고 주장한다(Dalton, 2013; Fiorina & Abrams, 2008). 이 주장에 따르면 유권자 차원에서 보이는 양극화 현상은 이념적 성향의 양극화보다는 당파적 배열(partisan sorting)에 가깝다. 즉 진보 성향의 유권자 중에서 민주당을 지지하는 비율이 늘어났고, 보수 성향의 유권자 중에서 공화당을 지지하는 비율이 늘어났기 때문에 과거에 비해서 유권자의 이념 지형에는 유의미한 변화가 없었지만 양극화가 심화된 것처럼 보이는 것이라는 것이다(Levendusky, 2009; Fiorina, 2017).

미국의 연구들과 마찬가지로 국내 선행연구들에서도 정치엘리트 차원의 양극화가 심화되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별다른 이견이 존재하지 않지만 일반 유권자 차원에서 양극화가 심화되었는지에 대해서는 논쟁이 존재한다(윤성이, 2006; 이내영, 2011; 이재묵, 2013). 윤성이(2006)는 한국의 진보 보수 간 이념적 갈등은 실제에 비해 과장되고 부풀려져 있다고 주장하며, 정치권의 '편향성의 동원(mobilization of bias)'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다수의 유권자들은 이념적으로 중도 성향임에도 불구하고 정치엘리트들에 의해서 이념적 편향에 동원됨에 따라 한국 사회의 이념적 양극화가 확대되고 심화된 것처럼 보인다는 것이다. 한미 양국의 정당 양극화를 비교한 이재묵(2013)의 연구에서도 두 나라 동일하게 이념적 양극화가 유권자 차원에서 보다는 정치엘리트 수준에서 발견되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보고서에서도 이념 성향에서는 유권자들의 여론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지 않았고, 오히려 유권자의 내재적 선호 및 인구통계적 특성이 이념 성향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윤성이, 2006; 이내영, 2011; 임원혁 외, 2019; 정동준, 2018).

최근에는 이러한 유권자를 둘러싼 학계의 논쟁이 유권자들의 정치 양극화가 '사회적 정체성화' 됐다는 결론으로 수렴한다. 아이옌가 외(2012)에 따르면 정책선호 면에서는 민주당과 공화당 지지자들 간의 차이가 커졌다고 보기 어렵지만 감정온도계를 활용한 문항에서는 상대정당에 대한 감정이 과거에 비해 많이 나빠졌다(Iyengar, Sood & Lelkes, 2012). 아이옌가 외(2018)의 다른 연구에서도 1973년에 미국의 신혼부부들 중 약 54%가 같은 정당을 지지했지만 2010년에는 이 비율이 74%까지 올라간 것을 확인했다(Iyengar, Konitzer & Tedin, 2018). 이는 정치적 양극단화가 일상생활의 영역으로까지 확장되었음을 시사한다. 이처럼 정치적 양극단화에 대한 논쟁은 이제는 단순히 정치 분야에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며 일상생활의 영역으로까지 확대되어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한국에서도 정서적 양극화가 심각한 수준이라는 연구결과들이 속속 보고되고 있다. 유권자들이 지지하는 정당을 상대 정당에 비해 더 '감정적'으로 선호하는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으며, 지지 정당에 따라 일관되고 동질적인 정치적 태도를 가지려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길정아, 하상응, 2019; 장승진, 서정규 2019; 정동준, 2016, 2018). 장승진, 장한일(2020)의 연구에 따르면 유권자 본인이 지지하는 정당과 지지하지 않는 정당에 대해 느끼는 감정적 차이가 클수록 상대 진영 사람들을 차별하고('내 집단 선호'), 그들의 도덕적·지적 능력에 대해 의구심을 품는 것('집단 우월감')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경향은 정치지식이 높은 사람에게서 더 두드러졌다. 이러한 결과는 미국과 마찬가지로 당파적 양극화의 심화가 단순히 정치적인 논쟁에만 국한되지 않고 우리 삶 곳곳에 침투해 있음을 실증적으로 보여준 결과라고 해석할 수 있다.

이렇게 한국 사회의 정치적 양극단화가 사회적 정체성화 된 원인으로 미디어가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 한국은 다른 국가들과는 달리 공영방송이 존재하며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공영방송의 경영진이 교체되고 특정 노조가 어용화 되는 등 정치적인 영향을 받는다. 또 종합편성채널들이 비교적 강한 정파성을 지니고 있다. 이처럼 공영방송의 정치적 중립이 훼손되고 다양한 채널들의 이념적 대립이 존재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대안적 미디어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높아졌으며 그 결과 수많은 신생 매체들이 등장하게 됐다.

또한 포털 사이트의 뉴스 유통이 언론사 수의 기하급수적인 증가를 초래했으며, 다수의 군소 언론사가 이념 마케팅을 하며 편파적이고 자극적인 뉴스를 쏟아내기 시작했다. 특히 최근 유튜브를 통한 뉴스 노출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데[2] 유튜브를 포함한 소셜 미디어에서는 극단적인 논리와 진영 간 갈등을 조장하는 콘텐츠가 여과 없이 유통될 가능성이 높다. 최근에는 기성 미디어에 불만이 많은 보수 유권자들이 유튜브 이용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러한 현상은 과거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 재임 기간에 진보 유권자들의 트위터상 존재감이 압도적으로 높았던 것과 유사하다(한규섭, 2021).

이처럼 군소 언론사가 넘쳐나고 경쟁이 치열한 미디어 시장에서 생존하기 위한 가장 쉬운 방법은 바로 진영논리를 활용한 이념 마케팅이다. 같은 진영에 있는 최소한의 뉴스 소비자를 확보할 수 있는 가장 용이한 방법이기 때문이다(한규섭, 2021). 로이터 저널리즘 연구소의 '디지털 뉴스 리포트 2020'에 의하면 한국의 유권자들은 특히 '선택적 노출'의 경향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응답자의 44%가 '나와 같은 관점을 공유하는 언론사의 뉴스'를 선호한다고 응답해서 전체 40개국 평균 응답률 28%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었다. 특히 정치에 관심이 많거나 정치성향이 확고한 응답자들일수록 같은 관점의 뉴스를 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었다. 또 '나와 반대되는 관점의 뉴스를 선호한다'고 응답한 한국 응답률도 4%에 불과해 조사 대상국 중 최하위 수준이었다(박아란 외, 2020).

한국의 뉴스 신뢰도는 전체 조사대상국 40개국 중 최하위였으며, 매우 진보적이거나 매우 보수적인 사람일수록 불신 비율이 중도성향의 사람들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저널리즘의 독립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한국 응답자 비율은 55%로 전체 조사국 40개국

[2] 로이터저널리즘연구소의 '디지털 뉴스 리포트 2020'에 따르면 전체 조사대상 40개국의 유튜브를 통한 뉴스 이용률은 평균 27%였지만, 한국은 45%로 무려 18%p 높았다.

중 38위였다. 이는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언론의 편파적인 보도를 문제 삼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언론의 정파성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거나 아니면 이미 기정사실로 받아들였다고 해석할 수 있다. 세계적으로 정치 양극화가 심화하면서 유튜브, 페이스북, 트위터 등 인터넷과 소셜미디어가 확증 편향을 증폭하는 반향실(echo chamber)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정치적 이념이나 신념이 비슷한 사람들끼리 결집하며 집단 극화가 증폭되고 있는 상황이다(박아란 외, 2020).

## 제2절 후보자 포지셔닝

대의민주주의의 이상에 부합하는 투표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유권자들이 정책에 대한 이해와 선호를 갖고 있어야 하는 동시에 후보자들의 정책적 입장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유권자들은 후보자들의 정책에 대해 큰 관심이 없으며, 일반 유권자들이 갖고 있는 후보자들의 대한 정보는 대개 모호하고 파편적이기 때문에 후보자의 정책을 명확하게 인지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어떤 후보자들은 당선되기 위해서 일부러 전략적으로 자신의 정책적 입장을 밝히지 않는 경우도 있으며, 선거 국면에서 유리한 내용만 중점적으로 부각 시기키도 한다(Shepsle, 1972; Page, 1978). 또한 언론은 후보자들의 정책이나 공약보다는 후보자 개인의 이슈나 흥미 위주로 보도하는 것이 일반적이다(Patterson, 1980).

이러한 유권자들의 정치적 결정이 내려지는 환경을 고려했을 때 후보와 정당의 이념성향에 대한 인식은 유권자 자신의 선호 및 고정관념 등 주관적 요인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는 유권자 자신과 유사한 정책적 입장을 갖고 있고, 반대하는 후보는 자신과 반대 입장을 갖고 있다고 믿는 '투사효과'도 이러한 주관적 요인의 하나로 해석할 수 있다(Conover & Feldman, 1989). 유권자들의 투표 결정이 유권자의 주관적인 인식 속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후보자들의 정책과 유권자들의 인식 사이에는 괴리가 존재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후보자들이 어떠한 정책 입장을 취하느냐는 매우 중요한 캠페인 커뮤니케이션 행위일 수밖에 없다. 즉 후보자 포지셔닝은 후보자가 어떤 사람이며 어떤 지향점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유권자가 가지는 후보자의 이미지, 즉 하나의 상(象)을 확립하는 중요한 도구가 된다(최용주, 2008).

후보자들의 포지셔닝이 하나의 캠페인 커뮤니케이션 행위라면 전략적 포지셔닝을 위해 유권자들의 정치적 결정이 이루어지는 기저 메커니즘에 대한 후보자들의 인식이 중요할 수밖에 없다. 유권자들이 후보자들의 정책입장 및 이념성향에 대한 인식을 형성하는 방식

을 설명하는 데에는 두 가지 대표적 가설이 존재한다. 근접이론(Proximity Model)과 방향성 이론(Directional Model)이다.

근접이론 모형에서 유권자는 이념 또는 정책적 '거리'가 가까운 후보자에게 투표할수록 큰 효용을 느낀다. 즉 유권자의 위치가 어느 후보자의 이념 또는 정책적 위치에 가까울수록 해당 후보를 선호한다고 보는 것이다. 이런 가정 하에서는 중위 유권자(median voter)의 위치가 득표를 최대화하는 지점이기 때문에 서로 경쟁하는 후보자들은 중위 유권자의 위치를 취하려는 경향이 있다는 가설이 성립할 수 있다(Downs, 1957; 강원택, 2010). 이는 유권자의 분포가 평균적인 유권자를 중심으로 정규분포의 형태를 보이는 단봉형의 좌우대칭인 상황에서, 어차피 후보자 진영에 있는 유권자들은 자신을 지지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더 많은 유권자의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중위 유권자의 입장을 취하게 된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근접이론의 가정 하에서는 경쟁하는 양대 정당이 중도를 향해 수렴하기 때문에 서로 차별성 없는 정책입장을 표방하여 다양성 제고에는 저해요인이 될지언정 양극단화를 조장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실증 연구에서는 이러한 근접 모형을 뒷받침할 만한 결과가 도출되지 않는 경우도 상당히 많았다. 중위투표자 이론(median voter theorem)에서는 두 정당 또는 후보자가 유권자들의 이념에 대한 완전한 지식을 가지고 선거에 이기기 위해서 일차원적 공간에서 경쟁한다고 가정하면 중위투표자(median voter)의 입장에서 균형점이 형성된다는 결론에 도달한다(Downs, 1957). 그러나 많은 연구자들이 두 정당이 경쟁하는 상황에서도 실제로 후보들이 중위 유권자 입장으로 수렴하지 않는다는 경험적 결과를 내 놓았다(Sullivan & Minns, 1976; Poole & Rosenthal, 2000). 이 연구들은 정책추구적 후보(Wittman, 1983; Calvert, 1985), 제3정당의 출현가능성(Palfrey, 1984), 공천제도의 역할(Aldrich, 1995; Burden, 2004), 정당활동가의 역할(Schofield, 2003, 2006; Moon, 2004; Aldrich, 2011), 소외로 인한 유권자의 기권(Hinich & Ordeshook, 1970; Adams & Merrill, 2003; Adams, Merrill, & Grofman, 2005), 정치제도의 역할(Cox, 1990, 1997)과 같은

요인들을 그에 대한 설명으로 제시했다.

중위 유권자 이론과는 정 반대로 방향성 모형(directional model)은 후보자들이 양극단에 해당하는 정책 입장을 취할 것이라고 예측한다. 방향성 모형은 유권자의 의사 결정이 두 단계에 걸쳐 일어난다고 본다. 유권자들은 우선 자기 진영과 경쟁 진영을 구분하는 중간지점을 선정한다. 이후 자신이 속한 방향과 같은 방향이면서 양 진영을 가르는 중간 지점에서 더 멀수록 후보에 대한 효용이 증가한다고 본다. 즉 유권자들은 그 차원에서 특정 편에 대해서 가장 강렬한 정당이나 후보를 선택한다. 이는 득표 최대화 지점이 양극단에 위치한 유권자에 있음을 의미한다(Rabinowitz & Macdonald, 1989). 가령 낙태 관련 사안이 있을 때 유권자들은 어느 정당이 나의 입장과 유사한지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보다는 어느 정당이 우리 편인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것이다(Macdonald, Listhaug & Rabinowitz, 1991). 이는 정책에 대한 이념적 방향성이 불분명한 중립적 태도는 유권자에게 유인과 자극을 줄 수 없기 때문일 수 있다(강원택, 2010).

결국 방향성 모형에서는 유권자가 자신과 이념적으로 가까운 후보에게 투표하는 것이 아니라 이념적으로 동일한 방향을 갖고 있으면서 가장 강한 입장을 취하는 후보에게 투표한다고 예상한다. 만약 방향성 모형에서 상정하는 것과 같이 후보자의 이념이 분명할수록 유권자들의 지지가 더 커진다면 서로 경쟁하는 후보들은 중도로 수렴하기 보다는 양극단에 포지셔닝 할 동기가 커지게 될 것이다. 규범적인 차원에서 보면 결과적으로 이는 유권자들의 양극단화를 강화하는 효과를 가질 것이다. 이처럼 방향성 이론에서는 정당의 이념이 분명할수록 유권자들의 지지가 더 커지기 때문에 서로 경쟁하는 두 후보나 정당은 중도로 수렴하기 보다는 양극단에 포지셔닝 하게 된다.

실제로 다운스 모형에 대한 중요한 비판중 하나는 활동가(activists)들의 역할을 간과한다는 점이다. 즉 활동가들이 제공하는 재정적·인적 자원들은 후보자들에게 캠페인에서 매우 중요한 정치적 자산이 될 수 있다. 반면 활동가들은 일반적인 유권자들보다 급진적인 이념 성향 및 정책 입장을 가진 경우가 많다. 따라서 후보자가 과도하게 ‘온건’한 정책입장

을 취하면 중도층의 온건한 유권자들의 표를 얻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활동가들로부터 기대할 수 있는 선거자원이 감소하기 때문에 표와 자원 간 상쇄(tradeoff)효과가 나타난다는 것이다(Poole & Rosenthal, 1984a, 1984b, 1991; Wright & Berkman, 1986; Wright, 1989, 1994; Aldrich, 1995; Moon, 2004). 결국 이러한 상쇄효과 때문에 서로 경쟁하는 후보들의 정책입장이 중위투표자 입장으로 수렴하기 어려울 것이란 비판이다(Moon, 2004). 이러한 시각에서 보면 오히려 앞서 기술한 방향성 모형이 더 설득력 있는 것으로 해석 가능하다.

# 제3장 연구가설 및 연구질문

본 연구에서는 우선 한국의 선거 후보자들이 어떤 포지셔닝 전략을 실현하는지 검증한다.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여기에는 두 가지 경쟁적 가설이 성립할 수 있다. 중위투표자 이론(median voter theorem)이나 근접성 모형에 따르면 두 정당 또는 두 후보자가 유권자들의 이념에 대한 완전한 지식을 가지고 선거에 이기기 위해서 일차원적 공간에서 경쟁한다면, 이들 모두 중위투표자(median voter)의 입장을 균형점(equilibrium)에서 선택한다(Downs, 1957).

반면 방향성 모형(directional model)은 후보자들이 양극단에 해당하는 정책 입장을 취할 것이라고 예측한다. 앞서 자세히 기술한 바와 같이 방향성 모형은 우선 자신이 속한 방향과 같은 방향이면서 양 진영을 가르는 중간 지점에서 더 멀수록 후보에 대한 효용이 증가한다고 본다(Rabinowitz & Macdonald, 1989). 한국과 같이 유권자들이 양극단화 되어 있는 환경에서 좌든 우든 방향성을 정하지 않는 것은 매우 어려우리라 예상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두 모형 중 단순 근접 모형보다는 방향성 모형이 더 한국의 선거 후보자들의 행동을 설명하는데 유용하지 않을까 예상한다. 따라서 연구가설 1을 아래와 같이 도출할 수 있다.

**<연구가설 1> 양대 정당의 후보자들은 중위 유권자보다 극단에 가까운 포지셔닝을 할 것이다.**

방향성 모형에 따르면 <연구가설 1>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후보자들은 각 진영의 중위 유권자 위치보다 극단에 더 가까운 포지셔닝을 취할 가능성이 있다. 방향성 모형에서는 유권자들이 자신의 진영 후보 중 가장 극단적인 입장을 취하는 후보자에 투표할 것이라 예

측한다. 따라서 만약 후보자들이 방향성 모형이 상정하는 유권자의 모습에 대한 인식을 공유한다면 중위 유권자에서 멀게 포지셔닝을 할 뿐 아니라 해당 진영의 중위 유권자에 해당하는 유권자보다도 극단에 가까운 포지셔닝을 하는 것이 득표율 극대화를 위한 최선의 전략이라 인식할 가능성이 있다. 더구나 한국 선거의 특성상 진보와 보수를 대표하는 두 거대 정당의 후보들 외에도 복수의 다른 후보들이 출마하여 다자 구도를 형성하는 경우가 많다. 이럴 경우 선명성 경쟁이 특히 치열해 질 가능성이 있다. 즉 만약 방향성 모형이 후보자들의 행동을 설명한다면 두 거대 정당의 후보는 각기 자기 진영에 출마한 다른 후보가 존재할 것이고 이들 보다 더 극단에 가깝게 포지셔닝 할 동기가 존재한다고 예상해 볼 수 있다. 따라서 아래와 같은 <연구가설 2>를 도출할 수 있다.

**<연구가설 2> 양대 정당의 후보자들은 해당 진영의 중위 유권자보다 극단에 가까운 포지셔닝을 할 것이다.**

후보자들의 극단적 포지셔닝은 득표율 극대화를 위한 전략적 선택인가? 즉 만약 후보자들이 방향성 모형에서 예측하는 바와 같이 극단에 가까운 포지셔닝을 한다면 이러한 행동이 이기기 위한 동기로부터 출발하는가? 이 질문에 대한 확실한 답을 하기는 어렵지만 간접적인 검증은 가능할 것이다. 만약 후보자들의 극단적 포지셔닝의 경향이 더 치열한 경합이 벌어지는 상황에서 더 자주 나온다면 이는 후보자들이 방향성 모형에서 상정하는 유권자의 행동 양식이 후보자들의 믿음과 상당 부분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반면 경합이 치열해 질수록 가운데로 몰리는 경향이 나타날 수도 있다. 따라서 아래와 같은 <연구가설 3>이 도출될 수 있다.

**<연구가설 3> 후보자들은 경합이 치열해질수록 양극단에 가까운 포지셔닝을 할 것이다.**

위의 세 가설 외에 본 연구에서는 몇 가지 규범적 함의가 있는 연구질문에 대한 답을 탐색한다. 우선 실제 선거 결과와 유권자들의 정책 선호를 비교한다. 이를 통해 후보자들의 포지셔닝의 결과가 유권자들의 선호를 얼마나 잘 대표하는지 살펴본다.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후보자들이 근접 모형에서 상정하는 유권자의 행동을 상정하고 포지셔닝을 한다면 전체 유권자 중 중위 유권자에 해당하는 유권자의 위치에 포지셔닝 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당선자들의 정책 입장과 유권자의 정책 선호가 상당히 일치할 것으로 예상한다. 반면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후보자들이 방향성 모형이 상정하는 유권자를 상정하고 행동한다면 선거 결과와 유권자들의 정책 선호 간에 상당한 정도의 괴리가 존재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따라서 아래와 같은 <연구질문 1>을 도출할 수 있다.

**<연구질문 1> 선거 결과는 유권자의 정책선호를 얼마나 잘 대표하는가?**

마지막으로 유권자 선택의 기저에 존재하는 작동원리를 살펴본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만약 극단적 또는 중위권 유권자 지향의 포지셔닝을 하는 후보자들이 궁극적으로 선거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높았다면 유권자들의 선택은 후보자들의 정책 입장에 대한 정확한 인식에 근거한 선택일까? 아니면 유권자들이 가진 후보자들의 정책 입장에 대한 인식과 실제 후보자들의 입장 사이에 상당한 괴리가 존재할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후보자의 포지셔닝이 어떤 작동원리를 통해 효과를 가지는가에 시사점이 있다. 만약 방향성 모형이 맞다면 유권자들이 극단적 포지셔닝을 하는 후보자들의 성향을 충분히 인지한 상황에서 그들을 지지하는 현상이 나타날 것이다. 즉 해당 후보들이 극단적 성향을 가진 것이 자신들의 선호에 부합하기 때문에 해당 후보를 선호할 것이다. 반면 만약 많은 유권자들의 후보자 성향에 대한 인식과 실제 후보자의 성향에 상당한 괴리가 존재한다면 방향성 모형의 설명력이 약하다고 추론할 수 있다. 이는 진영논리에 기인한 일종의 '투사효과'로 해석 될 수 있을 것이다. 즉 유권자들은 특정한 정책 입장을 가

진 후보를 선호하기 보다는 지지하는 후보자의 정책 입장이 자신 또는 전체 유권자를 더 잘 대표한다고 믿는 현상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 <연구 질문 2> 유권자들이 인식하는 후보자들의 정책입장과 실제 정책입장은 얼마나 큰 차이를 보이는가?

이 두 가지 경쟁적 설명이 한국 정치와 대의민주주의에 가지는 함의는 무척 다르다. 만약 현실이 전자에 가깝다면 이는 후보자를 탓할 문제가 아닐 것이다. 반면 현실이 후자에 가깝다면 이는 커뮤니케이션의 문제로 볼 수 있다. 후보자의 실제 정책입장과 성향을 유권자가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 체계가 필요한 문제라고 볼 수 있다. 여기에는 언론이나 미디어의 역할이 중요할 것이며 이를 위한 제도적 보완장치 마련을 위한 논의가 필요한 문제라고 볼 수 있다.

# 제4장 연구방법

## 제1절 분석자료 및 분석대상

본 연구의 핵심은 후보자들의 정책 입장과 유권자들의 정책 선호를 비교하여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제19대 대통령선거와 제7회 지방선거에서 다양한 사안을 선정하여 각 후보자 캠프로부터 후보자의 입장을 취합하고 여론조사 업체에 의뢰해 일반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동일한 정책 사안에 대한 입장을 물었다. 마지막으로 지방선거의 경우 경합에 따라 후보자의 극단적인 포지셔닝이 늘어나는지 또는 줄어드는지 확인한다.

이를 위해 본 논문에서는 총 세 개의 설문 데이터를 활용한다. 이 중 둘은 지난 2017년 제19대 대통령 선거 기간 동안 실시되었으며 나머지 한 개의 설문조사는 지난 2018년 제7회 지방선거 기간 동안 실시되었다. 2017년 대통령 선거 설문조사의 경우 첫 번째 설문조사는 문화일보와 함께 리얼미터에 의뢰하여 2017년 3월 28일부터 30일까지 전국 유권자 1,00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바 있다(대선연구 1), 두 번째 설문조사는 서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가 칸타퍼블릭에 의뢰하여 2017년 8월 22일부터 9월 3일까지 전국 유권자 1,200명을 대상으로 대면면접방식으로 조사했다(대선연구 2). 마지막으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기간 동안 수집된 데이터는 문화일보와 함께 리얼미터에 의뢰해 2018년 5월 11일부터 18일까지 16개 광역단체(세종시 제외)에 거주하는 유권자 8,000명을 상대로 조사했다(지방선거 연구). 각 광역단체별로 표본 크기는 350명부터 750명이었다.[3] 온라인 조사였던 까닭에 대통령 선거 당시 조사와 마찬가지로 완벽한 확률적 대표성을 가지는 표본이라고 볼 수는 없었으나 각 광역단체마다 성/연령등 기본적인 인구학적 변인들로 층화하여 쿼타 샘플을 추출하였다. 대통령 선거는 정보가 충분한 전형적인 고정보 선거(high stimulus election)인 반면 지방선거는 저정보 선거(low stimulus election)로 볼 수 있다. 또 조사

[3] 각 광역단체별 표본 속성은 부록에 제시하였다.

모드 또한 온라인 조사, 모바일 조사, 그리고 대면면접 조사로 다양했다. 이러한 맥락적, 조사방법론적 다양성은 본 연구 결과의 일반화 가능성을 높인다.

<표 1> 설문조사 표본: 인구학적 특성

| | | 대선연구1 | 대선연구2 | 지방선거 연구 |
|---|---|---|---|---|
| **조사방법** | | 스마트폰 | 대인면접 | 온라인 |
| **성별** | 남성 | 601(59.6%) | 594(49.5%) | 4,000(50.4%) |
| | 여성 | 408(40.4%) | 606(50.5%) | 3,931(49.6%) |
| **나이** | 20·30대 | 365(36.1%) | 424(35.3%) | 3,268(41.2%) |
| | 40·50대 | 445(44.1%) | 485(40.4%) | 3,481(43.9%) |
| | 60대 이상 | 199(19.7%) | 291(24.3%) | 1,182(14.9%) |
| **소득수준** | 월 600만원 미만 | 1,061(88.4%) | 847(70.8%) | 6,145(77.5%) |
| | 월 600만원 이상 | 139(11.6%) | 353(29.4%) | 1,786(22.6%) |
| **교육수준** | 고등학교 졸업 이하 | 199(39.5%) | 662(55.3%) | 1,988(25.1%) |
| | 대학교 재학 이상 | 610(60.5%) | 538(44.8%) | 5,943(74.9%) |
| **정당지지** | 자유한국당 | 93(10.1%) | 201(16.8%) | - |
| | 더불어민주당 | 277(30.2%) | 501(41.8%) | - |
| | 국민의당(2017), 민주평화당(2018) | 119(13.0%) | 73(6.1%) | - |
| | 바른정당(2017), 바른미래당(2018) | 80(8.7%) | 48(4.05%) | - |
| | 정의당 | 284(31.0%) | 32(2.7%) | - |
| **거주지역** | 수도권 | 616(61.1%) | 965(80.4%) | 2,024(25.5%) |
| | 비수도권 | 393(39.1%) | 235(19.6%) | 5,007(74.5%) |
| N | | 1,009 | 1,200 | 7,931 |

세 설문조사 모두 경제, 사회, 외교·안보 등 주요 정책 이슈에 대한 입장을 묻는 설문을 각각 21개, 14개, 20개 포함했다. 지방선거 설문에서는 일반적인 정책 설문 외에 '가치관' 또는 '이념'을 측정하는 설문 6개가 추가로 포함되었다. 또 지방선거라는 속성을 고려, 각 광역단체마다 5개의 지역 이슈에 대한 설문이 포함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지역정책 관련 문항 5개를 제외하고 일반 정책 문항 20개와 이념(가치관)을 묻는 문항 6개를 합쳐 총 26개 문항을 활용했다. 세 조사는 총 21개, 14개, 31개의 정책 또는 이념 관련 문항을 포함했다(<표 2> 참조).[4]

<표 2> 설문문항 분류

| | 제19대 대통령선거 (2017년) | | 제7회 지방선거 (2018년) |
|---|---|---|---|
| | 대선연구 1 | 대선연구 2 | |
| 조사방법 | 스마트폰 | 대인면접 | 온라인 |
| 조사기관 | 리얼미터 | 칸타 퍼블릭 | 리얼미터 |
| 응답자(명) | 1,009 | 1,200 | 8,000 |
| 정책질문(개) | | | |
| · 이념(가치관) | 0 | 0 | 6 |
| · 일반적인 정책 | 21 | 14 | 20 |
| · 지역 정책 | 0 | 0 | 5 |
| · 총 개수 | 21 | 14 | 31 |

모든 문항은 이항 응답으로 측정되었다. 일부 문항은 특정 정책에 대해 "찬성" 또는 "반대" 하는지 여부를 물었고 다른 설문들에서는 같은 사안에 대한 두 가지 상반된 입장을 제시한 후 응답자의 입장에 대해 물었다.

[4] 모든 정책 설문문항들은 부록에 제시했다.

대선연구의 경우 대선연구 1에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에 대한 응답이 응답자들 간 이견이 가장 적었으며 “최저임금 1만원으로 인상”, “재벌 순환출자 금지” 등의 문항에서도 비교적 이견이 적었다. 반면 “원자력 발전소 의존도 축소” 문항에서는 가장 의견이 갈렸으며 “국정원 국내기능 폐지”, “일반해고제 도입” 등의 문항에서도 비교적 의견이 갈렸다. 대선연구 2에서는 “한·일 위안부 합의 폐기”에 대한 응답이 응답자들 간 이견이 가장 적었으며 “기본소득 보장”, “법인세 인상”등의 문항에서도 비교적 이견이 적었다. 반면 “일반해고제 도입” 문항에서는 의견이 첨예하게 갈렸으며 “전교조 합법화”, “노동이사제 도입” 등의 문항에서도 비교적 의견이 갈렸다.

지방선거의 경우 16개 지역별 응답을 평균 냈는데 “건강보험 진료범위 확대”에 대한 응답이 응답자들 간 이견이 적었으며 “양성평등 교육 의무화”, “한국 경제 불공정 여부” 등의 문항에서도 비교적 이견이 적었다. 반면 “미세먼지 저감조치(2부제) 실시” 문항에서는 의견이 첨예하게 갈렸으며 “군 복무기간 단축”, “국가 안보가 사생활·자유보다 중요함” 등의 문항에서도 비교적 의견이 갈렸다(<표 3> 참조).

<표 3> 설문 문항별 기술통계

| 대선연구 1 (문화일보) | 보수적인 응답 | 대선연구 2 (CPC) | 보수적인 응답 | 지방선거 연구 (문화일보) | 보수적인 응답 |
|---|---|---|---|---|---|
| 한국의 핵무장 | 62.8% | 한국의 핵무장 | 68.3% | 포털 댓글 규제 | 70.3% |
| 사드 배치 추진 | 58.9% | 사드 배치 추진 | 64.5% | 이민자 한국 사회 위협 여부 | 64.5% |
| 개성공단 즉각 재개 | 58.0% | 원자력 발전소 의존도 축소 | 60.4% | 주한미군 철수 | 57.7% |
| 교육감 직선제 폐지 | 55.6% | 공무원 증원 | 56.0% | 국공립대 통합 | 55.8% |
| 공무원 성과연봉제 확대 | 52.5% | 전교조 합법화 | 53.3% | 동성애 수용 여부 | 53.8% |
| 일반해고제 도입 | 52.1% | 일반해고제 도입 | 47.4% | 국가 안보가 사생활·자유보다 중요함 | 51.5% |
| 원자력 발전소 의존도 축소 | 50.4% | 노동이사제 도입 | 44.5% | 군 복무기간 단축 | 50.9% |
| 국정원 국내기능 폐지 | 48.1% | 자사고 특목고 폐지 | 41.9% | 미세먼지 저감조치(2부제) 실시 | 50.4% |
| 전교조 합법화 | 46.2% | 국정원 국내기능 폐지 | 39.1% | 청년수당 확대 | 46.6% |
| 생계형 부채 탕감 | 44.2% | 전경련 해체 | 38.7% | 파주 제2개성공단 | 43.0% |
| 자사고 특목고 폐지 | 43.4% | 최저임금 1만원으로 인상 | 35.3% | 노동이사제 | 40.2% |
| 노동이사제 도입 | 42.4% | 법인세 인상 | 32.3% | 탈원전 | 38.9% |
| 법인세 인상 | 37.8% | 기본소득 보장 | 30.3% | 최저임금 1만원 인상 | 36.0% |
| 전시작전권 조기 전환 | 37.6% | 한·일 위안부 합의 폐기 | 29.7% | 특목고 폐지 | 35.9% |
| 검찰 수사권 분리 | 32.2% | | | 토지공개념 | 34.4% |
| 한·일위안부합의폐기 | 30.0% | | |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 32.7% |
| 전경련 해체 | 27.7% | | | 임신중절(낙태) 허용 | 31.2% |
| 기본소득 보장 | 23.2% | | | 부동산 초과이익 환수제 | 26.4% |
| 재벌 순환출자 금지 | 20.9% | | | 가상화폐 규제 | 24.5% |
| 최저임금 1만원으로 인상 | 15.3% | | | 근로시간 단축 | 23.2% |
|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 8.5% | | | 정부 복지 해로움 | 22.9% |
| | | | | 공공기관 블라인드채용 | 19.2% |
| | | | | 정부의 기업규제 | 16.9% |
| | | | | 한국 경제 불공정 여부 | 13.8% |
| | | | | 양성평등 교육 의무화 | 11.6% |
| | | | | 건강보험 진료범위 확대 | 8.6% |

제19대 대선과 제7회 지방선거를 앞두고 문화일보 정치부의 도움을 받아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들에게도 유권자와 동일한 정책 문항에 대한 입장을 받아서 취합했다. 제19대 대통령선거에서는 원내 5당 대선후보들, 그리고 지방선거에서는 세종시를 제외한 16개 광역단체장 선거에 출마한 5개 원내 정당 후보들의 입장을 취합했다.[5] 지방선거에서는 총 52명의 후보자들이 입장을 제출했다.

<표 4> 대선 및 광역단체장 선거 후보자 명단

<제19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명단>

| 지역 | 더불어민주당 | 자유한국당 | 국민의당 | 바른정당 | 정의당 |
|---|---|---|---|---|---|
| 전국 | 문재인 | 홍준표 | 안철수 | 유승민 | 심상정 |

<제7회 지방선거 후보자 명단>

| 지역 | 더불어민주당 | 자유한국당 | 바른미래당 | 민주평화당 | 정의당 |
|---|---|---|---|---|---|
| 서울 | 박원순 | 김문수 | 안철수 | | 김종민 |
| 부산 | 오거돈 | 서병수 | 이성권 | | 박주미 |
| 대구 | 임대윤 | 권영진 | 김형기 | | |
| 인천 | 박남춘 | 유정복 | 문병호 | | 김응호 |
| 광주 | 이용섭 | | 전덕영 | | 나경채 |
| 대전 | 허태정 | 박성효 | 남충희 | | 김윤기 |
| 울산 | 송철호 | 김기현 | 이영희 | | |
| 세종 | 이춘희 | 송아영 | 허철회 | | |
| 경기 | 이재명 | 남경필 | 김영환 | | 이홍우 |
| 강원 | 최문순 | 정창수 | | | |
| 충북 | 이시종 | 박경국 | 신용한 | | |
| 충남 | 양승조 | 이인제 | | | |
| 전북 | 송하진 | 신재봉 | | 임정엽 | 권태홍 |
| 전남 | 김영록 | | 박매호 | 민영삼 | 노형태 |
| 경북 | 오중기 | 이철우 | 권오을 | | 박창호 |
| 경남 | 김경수 | 김태호 | 김유근 | | |
| 제주 | 문대림 | 김방훈 | 장성철 | | |

[5] 제주의 경우에만 무소속 원희룡 후보의 점수도 취합했다. 모든 후보자들의 정책 입장은 부록에 제공하였다.

## 제2절 분석방법

### 문항반응이론(Item response theory, IRT)

유권자들과 동일한 정책문항에 대한 후보자들의 입장을 취합했기 때문에 유권자들의 정책 입장 분포와 후보자 정책 입장 분포를 직접 비교할 수 있게 했다는 점이 본 연구의 중요한 특징이다. 이를 위해 본 분석에서는 문항반응이론(item response theory, IRT)에 기반한 모델을 적용하여 각 정책문항에 대한 응답에 근거하여 모든 응답자들의 이념 성향 점수를 추정한다. 문항반응이론은 문항별로 얼마나 많은 응답자가 찬성 또는 반대 의견을 보였는지를 감안해서 응답자의 고유 성향을 계량하고 점수를 계산하는 방식이다. 다수의 응답자와 반대되는 선택을 한 경우에는 점수 추정에 특히 큰 영향을 주게 된다.

흔히 국가 공인 시험에서 문항반응이론을 적용하여 응시자의 실제 실력에 가장 근접한 점수를 산출하고 있다(강태훈, 2010; 성태제, 2001). 문항반응모형을 적용한 분석은 문항 추정치의 적합도를 파악할 수 있고(Neumann, Neumann, & Nehm, 2011), 실시하지 않은 문항에 대한 피험자의 문제해결 여부를 예측할 수 있으며(Embretson & Reise, 2000), 피험자의 능력 수준과 문항의 특성들과의 관계가 상세하게 제시되고 있어 피험자의 능력 수준에 따라 어느 문항이 더 효과적으로 피험자의 수준을 판별할 수 있는지 결정하여 피험자의 능력 수준에 맞는 검사지를 제작하는데 도움을 준다(Long, Wendt, & Dunne, 2011; Clements, Sarama, & Liu, 2008). 이러한 문항반응이론은 문항의 난이도, 변별도, 추측도 구성에 의한 모형과 수리적 접근에 의한 문항반응모형으로 구성된다.

문항반응모형의 가장 중요한 특성은 문항모수(difficulty parameter)와 피험자 능력모수(ability parameter)가 변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문항모수의 불변성은 문항 난이도, 변별도, 추측도와 같이 문항의 특성을 나타내는 값으로서 피험자에 따라 변하지 않는다. 문항반응모형의 적용을 통해 피험자의 검사점수가 검사 특성에 따라 달라지고 문항의 특성이

피험자 집단에 따라 달라지는 고전적 검사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기 때문에 문제은행의 구축, 검사 동등화, 컴퓨터 적응 검사 등 다양한 영역에서 널리 적용되고 있다(성태제, 2009).

정치 영역에서도 의회의 표결기록 등에 기반을 두어 이념 성향(ideal point)를 추정할 때 문항반응모형이 많이 활용되고 있다. 특히 클린턴, 잭맨, 리버스(2004)는 문항반응모형을 베이지언 기법으로 추정하는 모형을 활용, 미국 상원의원들의 이념성향(ideal point)을 추정한 바 있다(Clinton, Jackman & Rivers, 2004). 저자들의 연구에서 각 법안은 설문 문항이나 시험 문제에 해당하고 의원들은 '피험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의원들의 이념성향 추정값은 피험자들의 능력모수(ability parameter)를 추정하는 것과 유사하다. 반면 법안 성향 추정값들은 설문 문항의 난이도 추정값(difficulty parameter)와 유사한 해석이 가능하다. 마찬가지로 본 연구의 각 정책 설문들은 저자들의 연구에서 법안들에 해당하며 후보자들을 포함한 모든 설문 응답자들은 의원들에 해당한다. 따라서 표결 기록 분석에서와 유사한 논리를 적용하여 후보자들을 포함한 모든 설문 응답자들의 이념 성향 추정값을 도출해 낼 수 있다.

본 분석의 문항반응모델은 우선 일차원성을 가정한다. 즉 정책 설문들이 하나의 기저 속성을 측정한다고 가정하는 것이다. 다른 속성들이 응답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본 분석에서는 가장 중요한 하나의 속성에만 초점을 맞추어 분석하는 것이다. 대부분의 문항반응모형을 활용한 분석에서 적용하는 가정이다. 다른 한 가지 가정은 어떤 속성을 가진 응답자가 한 문항에 대해 응답한 결과가 다른 문항에 대한 응답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지역독립성' 가정이다(성태제, 2009).

문항반응모형

문항반응모형에서는 각 문항을 문항의 난이도, 변별도, 추측도 3개의 척도로 모델링 가능하다. 문항난이도(item difficulty)는 문항의 쉽고 어려운 정도를 지칭한다. 즉 문항난이도는 문항이 어느 능력 수준에서 기능하는가를 나타내는 지수로, 로지스틱모형에 의해 추정되는 문항특성곡선에서 Y축의 최고 확률값인 1.0과 최하값 사이의 중간값에 대응하는 X축의 값을 의미한다(박진아, 2010). 문항변별도(item discrimination)는 각 문항이 피험자의 능력 수준을 변별하는 정도를 지칭한다. 즉 문항의 응답에 따라 상위 능력을 가진 피험자와 하위 능력을 가진 피험자가 얼마나 잘 구분되었는지를 파악하는 지표로, 문항특성곡선에서 문항난이도에 대응하는 기울기의 값을 뜻한다. 문항추측도(item guessing)는 피험자가 능력과 상관없이 추측으로 정답을 맞힐 수 있는 확률을 지칭한다. 즉 능력이 전혀 없음에도 문항의 답을 맞히는 확률로, 로지스틱모형에 의해 추정되는 문항특성곡선에서 X축인 능력의 범위가 -3이하일 때 문항을 맞힐 확률의 값을 의미한다(성태제, 2009).

본 분석에는 응답이 0과 1로 채점되는 문항에 사용되는 이분문항반응모형을 적용한다. 이분문항반응모형에는 대표적으로 1모수(Rasch Model), 2모수(LTM), 3모수(TPM) 로지스틱 모형이 있다. 1모수 로지스틱 모형은 문항의 난이도 모수만을 모형에서 추정하는 반면 2모수 로지스틱 모형은 난이도 모수와 함께 변별도 모수를 추정한다. 마지막으로 3모수 로지스틱 모형은 추가적으로 추측도 모수도 함께 추정한다. 다시 말해 1모수 모형은 2모수 모형에서 변별도 모수를 모두 동일하게 고정시킨 경우이며, 2모수 모형은 3모수 모형에서 추측도 모수를 0으로 고정시킨 모형이다. 이를 표로 나타내면 아래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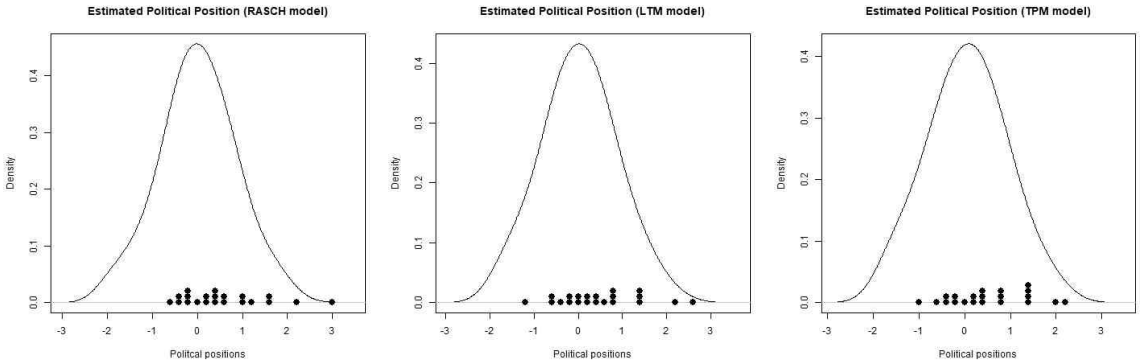
<표 5> 문항반응모형 유형

| 방법론 | 특징 |
|---|---|
| Rasch Model | 1모수 모형, 문항의 난이도만을 추정하는 모델 |
| LTM Model | 2모수 모형, 문항의 난이도, 변별도를 추정하는 모델 |
| TPM Model | 3모수 모형, 문항의 난이도, 변별도, 추측도를 추정하는 모델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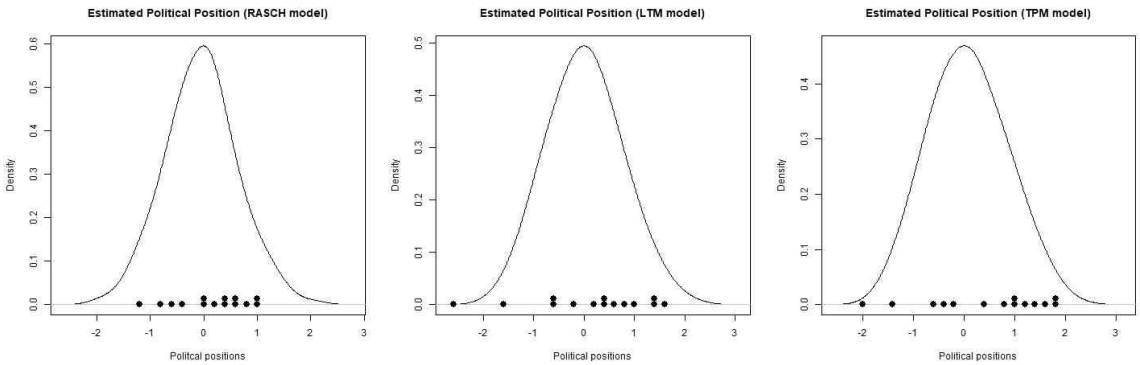
문항반응모델에서는 정책 문항의 난이도, 변별도, 추측도를 추정할 수 있다. 본 연구의 맥락에서 '난이도'는 해당 정책 문항이 진보 또는 보수 성향을 갖는지를 보여주는 추정값이며, '변별도' 모수는 해당 정책 문항이 보수와 진보 성향 응답자를 얼마나 잘 구분하는지를 보여주는 추정값이라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추측도'는 해당 문항을 응답자들이 얼마나 명료하게 이해하고 선택했는지를 보여주는 추정값 정도로 해석할 수 있다.

우선 본격적인 분석에 앞서 세 모델(Rasch model, LTM model, TPM model) 중에 어떤 모형이 본 연구에 활용되는 자료에 적용시 가장 설명력이 높은지를 확인해 보았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 활용되는 세 데이터에 세 유형의 문항반응모형을 모두 적용해 보았다(<그림 1~3>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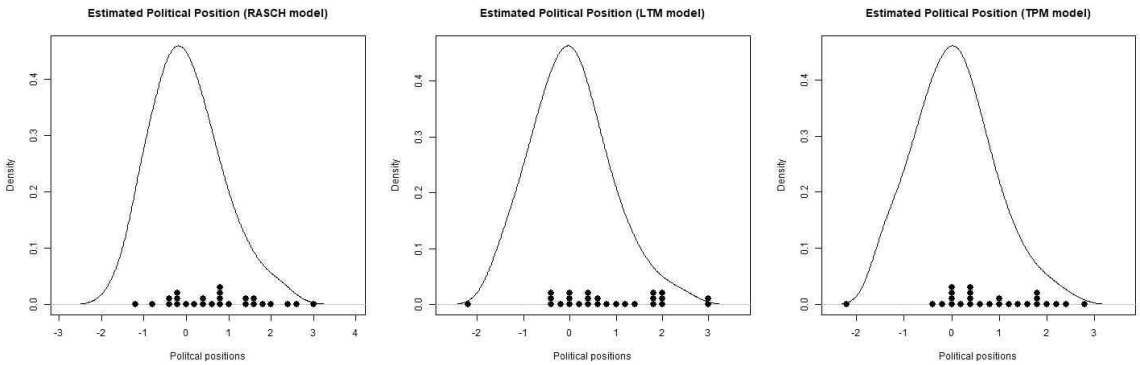
<그림 1> 대선연구 1: Rasch model / LTM model / TPM 모형 적용 결과




<그림 2> 대선연구 2: Rasch model / LTM model / TPM 모형 적용 결과




<그림 3> 지방선거 연구: Rasch model / LTM model / TPM 모형 적용 결과



위 그림에서 실선은 설문에 응답한 유권자들의 모수 추정값의 분포이며 점은 정책 문항들의 모수 추정값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X축은 유권자의 정치 성향을 -4부터 4까지의 범위(-4, 4)[6]로 표현한 것으로 음의 값을 가질수록 진보, 양의 값을 가질수록 보수 성향임을 의미한다. 또한 Y축은 특정 X축 상의 값에 위치한 유권자와 문항의 밀도를 표현한 것으로 값이 클수록 해당 X축 상의 값에 해당하는 성향을 가진 유권자 혹은 문항이 많았다는 것을 뜻한다.

위 <그림 1~3> 모델링 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Rasch 모델로 모델링 한 결과는 전반적으로 한 쪽으로 쏠린 형태를 보인다. 반면 2PL(LTM)과 3PL(TPM) 모형을 적용시 Rasch 모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편향이 줄어들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단일 모수로 모델링하는 Rasch 모델보다 2개 또는 3개의 모수를 포함하는 2PL, 3PL 모형이 본 연구에 활용되는 데이터에 더 적합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2PL 모형에 비해 3PL 모형에서 문항의 분포가 상대적으로 더 고르게 나타나는 경향도 보인다. 이는 3PL 모형이 서로 다른 문항의 특성을 비교적 더 잘 모형화한다는 의미로 해석 가능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3PL(TPM) 모형을 적용하도록 한다.

요약하면 본 연구에서는 앞에서 설명한 이분문항모델에 기반하여 각 문항에 대한 응답을 0 또는 1로 코딩하고 로지스틱 모형에 근거해 TPM(3모수 모형) 함수를 적용하였다. 또 이 모형으로부터 추정된 모수들로부터 후보자들과 유권자들과 후보자들의 정책성향 점수를 계산했다. 이를 통해 제19대 대통령선거와 제7회 지방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들과 당시 유권자들의 정책 성향 분포를 비교할 수 있게 된다.

[6] (-4, 4) 범위는 IRT에서 일반적으로 모델링할 때 사용하는 값의 범위로, 본 연구에서는 해당 범위 값을 수정하지 않고 사용했다.

# 제5장 분석결과

## 제1절 정책문항 및 유권자 정책선호 기술통계

문항반응모형에서 문항 모수의 추정값을 통해 어떤 문항이 '진보성향'의 응답자들이 동의할 가능성이 높은지, '보수성향'의 응답자들이 동의할 가능성이 높은지를 유추할 수 있다. 문항 모수의 추정값이 음수이면 해당 문항이 진보성향의 문항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양수이면 보수성향의 문항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우선 제19대 대통령선거 서울대 폴랩·문화일보 데이터(대선연구 1)의 경우 총 21개 정책 문항 중 진보성향의 문항이 7개, 보수성향의 문항이 14개로 나타났다. 가장 진보적인 문항은 "한국의 핵무장"(-1.093), "교육감 직선제 폐지"(-0.528), "공무원 성과연봉제 확대"(-0.374) 순이었다. 반면 가장 보수적인 문항은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2.193), "최저임금 1만원 인상"(2.025), "재벌 순환출자 금지"(1.433) 순으로 나타났다.

서울대 사회발전연구소 데이터(대선연구 2)의 경우는 진보성향의 문항이 5개, 보수성향의 문항이 9개였다. 가장 진보적인 문항은 "한국의 핵무장"(-2.042), "사드 배치 추진"(-1.459), "원자력 발전소 의존도 축소(-0.607)" 순이었으며, 보수적인 문항은 "한·일 위안부 합의 폐기"(1.740), "전경련 해체"(1.731), "법인세 인상"(1.555) 순으로 나타났다.

제7회 지방선거 서울대 폴랩·문화일보 데이터(지방선거 연구)는 16개 지역별로 문항을 각각 구한 뒤 평균을 냈으며 진보성향의 문항이 2개, 보수성향의 문항이 24개로 나타났다. 가장 진보적인 문항은 "이민자 한국 사회 위협 여부"(-0.886), "군 복무기간 단축"(-0.007), "주한미군 철수"(0.010) 순이었으며 보수적인 문항은 "포털 댓글 규제"(2.657), "한국 경제 불공정 여부"(2.187), "임신중절(낙태) 허용"(2.119) 순으로 나타났다(<표 6> 참조).

<표 6> 각 데이터 설문문항 성향 점수

| 대선연구1 | | | 대선연구 2 | | | 지방선거 연구[7] | | |
|---|---|---|---|---|---|---|---|---|
| **No.** | **문항** | **점수** | **No.** | **문항** | **점수** | **No.** | **문항** | **점수** |
| 1 | 한국의 핵무장 | -1.093 | 1 | 한국의 핵무장 | -2.042 | 1 | 이민자 한국 사회 위협 여부 | -0.886 |
| 2 | 교육감 직선제 폐지 | -0.528 | 2 | 사드 배치 추진 | -1.459 | 2 | 군 복무기간 단축 | -0.007 |
| 3 | 공무원 성과연봉제 확대 | -0.374 | 3 | 원자력 발전소 의존도 축소 | -0.607 | 3 | 주한미군 철수 | 0.010 |
| 4 | 사드 배치 추진 | -0.354 | 4 | 공무원 증원 | -0.440 | 4 | 국공립대 통합 | 0.092 |
| 5 | 개성공단 즉각 재개 | -0.288 | 5 | 전교조 합법화 | -0.135 | 5 | 청년수당 확대 | 0.227 |
| 6 | 일반해고제 도입 | -0.201 | 6 | 노동이사제 도입 | 0.370 | 6 | 파주 제2개성공단 | 0.391 |
| 7 | 원자력 발전소 의존도 축소 | -0.010 | 7 | 국정원 국내기능 폐지 | 0.819 | 7 | 미세먼지 저감조치(2부제)실시 | 0.398 |
| 8 | 전교조 합법화 | 0.155 | 8 | 일반해고제 도입 | 0.904 | 8 | 동성애 수용 여부 | 0.440 |
| 9 | 국정원 국내기능 폐지 | 0.229 | 9 | 최저임금 1만원 인상 | 0.931 | 9 | 탈원전 | 0.479 |
| 10 | 자사고 특목고 폐지 | 0.460 | 10 | 자사고 특목고 폐지 | 1.125 | 10 | 노동이사제 | 0.484 |
| 11 | 전시작전권 조기 전환 | 0.472 | 11 | 기본소득 보장 | 1.405 | 11 | 최저임금1만원인상 | 0.546 |
| 12 | 노동이사제 도입 | 0.496 | 12 | 법인세 인상 | 1.555 | 12 |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 0.649 |
| 13 | 법인세 인상 | 0.744 | 13 | 전경련 해체 | 1.731 | 13 | 국가 안보가 자유보다 중요 | 0.702 |
| 14 | 한·일 위안부 합의 폐기 | 0.823 | 14 | 한·일 위안부 합의 폐기 | 1.740 | 14 | 토지공개념 | 0.786 |
| 15 | 전경련 해체 | 0.899 | | | | 15 | 특목고 폐지 | 0.978 |
| 16 | 검찰 수사권 분리 | 1.334 | | | | 16 | 근로시간 단축 | 1.080 |
| 17 | 생계형 부채 탕감 | 1.369 | | | | 17 | 부동산 초과 이익 환수제 | 1.294 |
| 18 | 기본소득 보장 | 1.383 | | | | 18 | 공공기관 블라인드채용 | 1.399 |
| 19 | 재벌 순환출자 금지 | 1.433 | | | | 19 | 정부의 기업규제 | 1.734 |
| 20 | 최저임금 1만원으로 인상 | 2.025 | | | | 20 | 양성평등 교육 의무화 | 1.790 |
| 21 |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 2.193 | | | | 21 | 가상화폐 규제 | 1.795 |
| | | | | | | 22 | 정부 복지 해로움 | 1.929 |

| | | | | | | | | |
|---|---|---|---|---|---|---|---|---|
| | | | | | | 23 | 건강보험 진료범위 확대 | 1.930 |
| | | | | | | 24 | 임신중절(낙태)허용 | 2.119 |
| | | | | | | 25 | 한국 경제 불공정 여부 | 2.187 |
| | | | | | | 26 | 포털 댓글 규제 | 2.657 |
| 평균 0.532, 표준편차 0.873 | | | 평균 0.421, 표준편차 1.195 | | | 평균 0.969, 표준편차 0.853 | | |

[7] 각 광역단체별 설문 문항 성향 점수값은 부록에 제시하였다.

유권자들의 응답을 바탕으로 유권자들의 정책선호 점수를 살펴보았다. 우선 세 데이터 모두 전체 평균이 0보다 조금 큰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 진보-보수 진영의 '극좌'(1 퍼센타일)와 '극우'(99 퍼센타일)의 값의 절댓값을 비교했을 때, 극좌(1 퍼센타일)보다 극우(99 퍼센타일)에 해당하는 값의 절댓값이 더 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 유권자들의 전체 유권자 분포에서 극우에 해당하는 유권자들의 정책선호가 상대적으로 더 극단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8]

<표 7> 유권자의 정책성향 퍼센타일 분포

<대선연구 1>

| 최소값 | 1% | 5% | 25% | 50% |
|---|---|---|---|---|
| -1.71 | -1.62 | -1.16 | -0.40 | 0.12 |
| 75% | 90% | 95% | 99% | 최대값 |
| 0.66 | 1.17 | 1.50 | 1.96 | 2.32 |

<대선연구 2>

| 최소값 | 1% | 5% | 25% | 50% |
|---|---|---|---|---|
| -1.59 | -1.39 | -1.02 | -0.42 | 0.11 |
| 75% | 90% | 95% | 99% | 최대값 |
| 0.60 | 1.07 | 1.33 | 1.72 | 2.16 |

<지방선거 연구>[9]

| 최소값 | 1% | 5% | 25% | 50% |
|---|---|---|---|---|
| -1.63 | -1.54 | -1.24 | -0.51 | 0.07 |
| 75% | 90% | 95% | 99% | 최대값 |
| 0.64 | 1.19 | 1.54 | 2.15 | 2.56 |

8 이것은 상대적인 개념으로서 우리나라 보수 유권자들의 정책 선호 자체가 극단적이라고 얘기할 근거는 되지 못한다.
9 지방선거 연구의 경우 지역별로 나온 수치를 평균 낸 값이다.

다음으로 유권자들의 인구통계학적 정보에 따른 정책입장 점수를 살펴보았다. 우선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대선연구 1에서는 40대가 가장 진보적이었으며, 대선연구 2와 지방선거 연구에서는 19세-20대가 가장 진보적으로 나타났다. 세 데이터 모두 60세 이상이 가장 보수적이었다. 성별은 세 데이터 모두 남성이 여성보다 보수적으로 나타났다. 지지정당별 정책입장은 정의당 지지자가 대선연구 1과 2 모두에서 가장 진보적으로 나타났으며,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자유한국당 순으로 동일하게 나타났다.

<표 8> 인구통계학적 정보에 따른 정책입장

| | | 대선연구1 | 대선연구2 | 지방선거연구 |
|---|---|---|---|---|
| 나이 | 19-29 | 0.168 | -0.256 | -0.052 |
| | 30-39 | -0.080 | 0.035 | -0.041 |
| | 40-49 | -0.147 | 0.098 | -0.051 |
| | 50-59 | -0.023 | 0.133 | 0.124 |
| | 60세 이상 | 0.353 | 0.237 | 0.268 |
| 성별 | 남성 | 0.074 | 0.108 | 0.116 |
| | 여성 | 0.020 | 0.039 | -0.057 |
| 지지정당 | 더불어민주당 | -0.456 | -0.093 | |
| | 자유한국당 | 0.853 | 0.476 | |
| | 국민의당 | 0.128 | 0.249 | |
| | 바른정당 | 0.491 | 0.308 | |
| | 정의당 | -0.731 | -0.549 | |
| 이념성향 | 진보 | -0.401 | -0.210 | -0.298 |
| | 중도 | 0.074 | 0.063 | 0.052 |
| | 보수 | 0.629 | 0.547 | 0.540 |

## 제 2 절 후보자 포지셔닝

이제 본격적으로 후보자의 포지셔닝 전략을 살펴본다. 이를 위해 후보자의 정책성향 점수를 구하고 유권자들의 정책성향 점수의 분포와 비교함으로써 후보자들의 포지셔닝이 '방향성 모형' 또는 '근접 모형'에 더 가까운지 살펴본다.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제19대 대통령 선거와 제7회 지방선거에서 각 후보자들의 캠프에서 후보자의 정책 입장을 취합하였다. 일부 정책 문항에서는 후보자들이 '찬성' 또는 '반대'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자신의 입장을 주관식 질문처럼 답변한 경우도 있었다. 이럴 경우 답변을 최대한 '찬성'과 '반대'로 재코딩했다.

제19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했던 후보자들의 입장에서 한 가지 주목할 점은 범보수 후보들로 분류될 수 있는 홍준표(자유한국당), 안철수(국민의당), 유승민(바른정당) 후보들이 상당수의 정책 입장에서 다른 입장을 밝힌 반면에 문재인(더불어민주당), 심상정(정의당) 후보는 모든 정책 사안에서 동일한 입장을 밝혔다는 점이다(<표 9> 참조).

제7회 지방선거에 출마했던 후보자들의 입장을 소속 정당 후보들의 다수 입장으로 정리해 보면 <표 10>과 같다. 흥미로운 점은 제19대 대선 후보들 가운데 문재인(더불어민주당), 심상정(정의당) 후보가 모든 정책 사안에서 동일한 입장을 밝혔던 것과는 달리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후보들 간에 입장 차이가 있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대선과 지방선거와의 차이는 미래 연구에서 다루어질 내용으로 남겨 두기로 하고 본 연구에서는 본격적으로 다루지 않는다. 이는 지방선거의 특성상 지역 유권자들의 성향이 어느 정도 반영된 것이라 추론해 볼 수 있다. 또 2017년 대선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 직후라는 시기적 특성이 반영된 결과일 수도 있다.[10]

[10] 지방선거 후보자들의 지역별 정책 입장은 부록에 첨부하였다.

<표 9> 제19대 대통령 선거 후보들 정책 입장

| | 문재인<br>(더불어민주당) | 홍준표<br>(자유한국당) | 안철수<br>(국민의당) | 유승민<br>(바른정당) | 심상정<br>(정의당) |
|---|---|---|---|---|---|
| 개성공단 즉각 재개 | 찬성 | 반대 | 반대 | 반대 | 찬성 |
| 사드 배치 추진 | 반대 | 찬성 | 찬성 | 찬성 | 반대 |
| 한·일 위안부 합의 폐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한국의 핵무장 | 반대 | 찬성 | 반대 | 반대 | 반대 |
| 전시작전권 조기 전환 | 찬성 | 반대 | 반대 | 반대 | 찬성 |
| 전경련 해체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공무원 성과연봉제 확대 | 반대 | 찬성 | 반대 | 반대 | 반대 |
| 일반해고제 도입 | 반대 | 찬성 | 반대 | 찬성 | 반대 |
| 법인세 인상 | 찬성 | 반대 | 찬성 | 찬성 | 찬성 |
| 노동이사제 도입 | 찬성 | 반대 | 찬성 | 반대 | 찬성 |
|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최저임금 1만원으로 인상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생계형 부채 탕감 | 찬성 | 찬성 | 반대 | 반대 | 찬성 |
| 재벌 순환출자 금지 | 찬성 | 찬성 | 반대 | 찬성 | 찬성 |
| 원자력 발전소 의존도 축소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기본소득 보장 | 찬성 | 찬성 | 반대 | 반대 | 찬성 |
| 교육감 직선제 폐지 | 반대 | 찬성 | 반대 | 반대 | 반대 |
| 자사고 특목고 폐지 | 찬성 | 찬성 | 반대 | 찬성 | 찬성 |
| 전교조 합법화 | 찬성 | 반대 | 찬성 | 반대 | 찬성 |
| 국정원 국내기능 폐지 | 찬성 | 반대 | 찬성 | 반대 | 찬성 |
| 검찰 수사권 분리 | 찬성 | 찬성 | 찬성 | 반대 | 찬성 |

**<표 10> 제7회 지방선거 각 정당 후보들 정책입장**

| | 더불어민주당 후보들 | 자유한국당 후보들 | 바른미래당 후보들 | 민주평화당 후보들 | 정의당 후보들 |
|---|---|---|---|---|---|
| 정부 기업규제 필요 | 찬성 | 반대 | 반대 | 찬성 | 찬성 |
| 정부 복지 필요 | 반대 | 반대 | 반대 | 반대 | 반대 |
| 한국 경제 체제 | 찬성 | 반대 | 찬성 | 찬성 | 찬성 |
| 이민자 증가 | 반대 | 반대 | 반대 | 반대 | 반대 |
| 동성애 | 반대 | 반대 | 반대 | 반대 | 찬성 |
| 국가안보 vs 사생활·자유 | 찬성 | 찬성 | 찬성 | 반대 | 반대 |
| 토지공개념 | 찬성 | 반대 | 반대 | 찬성 | 찬성 |
| 포털사이트 댓글 규제 | 반대 | 찬성 | 반대 | 찬성 | 반대 |
| 특목고 폐지 | 찬성 | 반대 | 반대 | 찬성 | 찬성 |
| 최저임금 인상 | 찬성 | 반대 | 반대 | 반대 | 찬성 |
| 국민건강보험 진료범위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 찬성 | 반대 | 반대 | 반대 | 찬성 |
| 가상화폐 규제 | 찬성 | 반대 | 반대 | 반대 | 찬성 |
|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근로시간 단축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노동이사제 | 찬성 | 반대 | 반대 | 찬성 | 찬성 |
| 공공기관 블라인드 채용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양성평등 교육 의무화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군 복무기간 단축 | 찬성 | 반대 | 반대 | 찬성 | 찬성 |
| 주한미군 철수 | 반대 | 반대 | 반대 | 반대 | 찬성 |
| 임신중절 허용 | 반대 | 반대 | 찬성 | 반대 | 찬성 |
| 청년수당 확대 | 찬성 | 찬성 | 반대 | 찬성 | 찬성 |
| 차량 2부제실시 | 찬성 | 반대 | 찬성 | 반대 | 찬성 |
| 국공립대 통합 | 찬성 | 반대 | 반대 | 찬성 | 찬성 |
| 탈원전 | 찬성 | 반대 | 찬성 | 찬성 | 찬성 |
| 파주 제2개성공단 | 찬성 | 반대 | 찬성 | 찬성 | 찬성 |

다음으로 본격적인 가설 검증을 위해 문항반응모형을 적용하여 후보자들과 응답자들의 정책선호 점수를 함께 추정한 결과 후보자들의 정책선호는 아래와 같았다. 정책입장 점수는 정책입장을 좌우로 놓고 봤을 때 0(중도)을 기준으로 음(-)으로 갈수록 진보 성향, 양(+)으로 갈수록 보수 성향임을 보여준다. 제19대 대통령선거에서는 대선연구 1과 2 모두 정책입장이 왼쪽부터 심상정·문재인, 안철수, 홍준표, 유승민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게 이들 후보들의 이념성향에 대해 가지고 있는 인식과 유사했다. 단, 예외는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가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와 큰 차이가 없었다는 점이었다. 이는 홍준표 후보가 일반적인 인식보다 진보적인 정책 입장을 보인 것에 기인한다. 이는 보수 후보들의 경우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태를 거치며 보수 심판 분위기로 인해 다소 중도적인 입장을 보인 것으로 해석 가능하다.

<표 11> 제 19 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정책 입장점수와 퍼센타일

| | | 심상정 | 문재인 | 안철수 | 홍준표 | 유승민 |
|---|---|---|---|---|---|---|
| 대선연구1 | 정책입장점수 | -1.625 | -1.625 | -0.051 | 0.547 | 0.759 |
| | 퍼센타일[11] | 1 | 1 | 47 | 70 | 78 |
| 대선연구2 | 정책입장점수 | -1.394 | -1.394 | 0.095 | 0.587 | 0.651 |
| | 퍼센타일 | 1 | 1 | 48 | 74 | 79 |

[11] 퍼센타일(Percentile)은 데이터의 연속적인 값을 100으로 등분했을 때 나오는 값의 하나로서 값이 1부터 100 중 어디에 위치하는지를 보여준다.

우선 대선연구 1에서는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와 정의당 심상정 후보의 경우 모든 문항에 대해 동일하게 답변을 했기 때문에 문항반응모형에서 추정된 정책입장 점수가 동일하게 -1.625점이었으며, 전체 유권자 분포에서 약 1 퍼센타일에 위치하여 매우 진보적인 정책 선호를 가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중위 유권자의 위치(0.122)보다 가장 왼편의 유권자 위치(-1.710)에 훨씬 가까운 위치였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의 정책입장 점수는 0.547점이었으며 이는 70 퍼센타일에 해당했다. 이는 전체 유권자 중 가장 오른쪽에 위치한 유권자(2.318)보다 중위 유권자 위치(0.122)에 더 가까웠다. 홍준표 후보가 세간에 알려진 것 보다 상대적으로 진보적인 정책입장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즉 대선연구 1에 근거하여 검증해 보면 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가설1과 부합하는 포지셔닝을 한 반면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그렇지 않았다.

대선연구 2에서도 유사한 경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와 정의당 심상정 후보의 정책입장 점수는 동일하게 -1.394점이었으며, 1 퍼센타일에 위치했다. 이는 중위 유권자의 위치(0.113)보다 가장 왼편의 유권자 위치(-1.591)에 훨씬 가까운 위치였다. 반면,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의 정책입장 점수는 0.587점이며 74 퍼센타일에 해당했다. 대선연구 1과 마찬가지로 홍준표 후보는 유권자 중 가장 오른쪽에 위치한 유권자(2.163)보다 중위 유권자 위치(0.113)에 더 가까웠다. 결론적으로 대선연구 1, 2에서 모두 문재인 후보는 가설1에서 설정한 것처럼 중위권 유권자보다 극단에 가까운 포지셔닝을 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 홍준표 후보는 중위권 후보에 약간 더 가까운 포지셔닝을 하여 가설1에 부합하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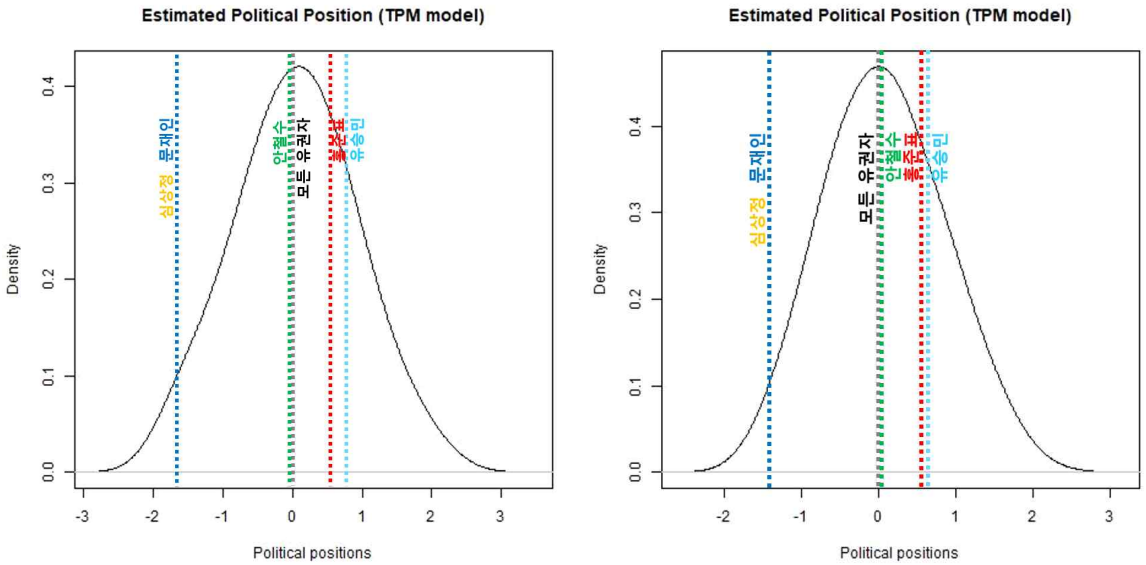
그렇다면 대선 후보들의 포지셔닝은 소속 정당의 지지자들에게 맞추어져 있을까? 지금까지는 대선 후보들이 중위 유권자와 극단 중 어디에 더 가까운 포지셔닝을 했는지 살펴보았다.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대선연구 1에서 문재인 후보의 정책입장 점수는 -1.625점(1 퍼센타일)에 해당했던 반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의 평균 정책입장은 -0.456점(28 퍼센타일)이었다. 따라서 문재인 후보는 민주당 지지자들보다 극단에 더 가까운 포지셔닝을

한 것으로 나타나 명백하게 방향성 모형에 부합하는 포지셔닝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의 정책입장 점수는 0.547점이었으며 이는 70 퍼센타일에 해당했고 자유한국당 유권자 평균은 약 0.853(82 퍼센타일)이었다. 따라서 홍준표 후보는 자유한국당 지지층에 가깝게 포지셔닝 한 것으로 나타나 방향성 모형에서 상정하는 포지셔닝과는 거리가 멀었다.

대선연구 2에서도 유사한 경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의 정책입장은 -1.394(1 퍼센타일)이었던 반면 더불어민주당 유권자 평균은 -0.093(43 퍼센타일)이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의 정책입장은 0.587이며 74 퍼센타일에 해당했고 평균적인 자유한국당 유권자의 정책입장은 0.476이며 70 퍼센타일에 해당했다. 대선연구 1에서와 마찬가지로 문재인 후보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보다 극단에 더 가까운 포지셔닝을 했던 반면 홍준표 후보는 자유한국당 지지층에 매우 가깝게 포지셔닝 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문재인 후보는 가설2에 부합하는 포지셔닝을 했던 반면 홍준표 후보는 그렇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다른 후보들의 포지셔닝을 살펴보면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의 정책입장 점수는 대선연구 1과 2에서 0.759점과 0.651점이었으며 이는 각각 78, 79 퍼센타일에 해당했다. 반면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의 경우 정책입장 점수는 -0.051점과 0.095점으로 47 퍼센타일과 48 퍼센타일에 해당하여 가장 중위유권자에 가까운 포지셔닝을 했다. 모든 후보자들의 정책입장은 아래 그림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4> 제 19 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정책입장




대선연구1 대선연구2

다음으로, 제7회 지방선거에서 세종시를 제외한 전국 16개 광역단체장 선거에 출마한 후보 중 52명을 대상으로 가설1과 2를 검증해 보았다. 우선 52명 후보들의 정책입장의 정당별 평균을 살펴보면 정의당 후보들의 정책입장은 -1.625점이었으며 이는 출마한 광역단체 유권자와 비교하여 약 1 퍼센타일에 해당하는 위치였고 모든 정당 중에 가장 진보적인 포지셔닝을 했음을 알 수 있다. 노동정당의 특성이 잘 드러나는 포지셔닝이라 할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의 평균 정책입장은 -1.062점이며, 이는 평균적으로 출마한 광역단체 유권자의 5 퍼센타일에 해당하는 위치였다. 광역단체장 선거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은 정의당과는 다소 차별화 되는 포지셔닝을 해서 대선 데이터와 차이가 있었다. 민주평화당 후보들의 평균 정책입장 점수는 -0.377점으로 27 퍼센타일에 위치해, 원내 5대 정당 중 상대적으로 중도에 가장 가까운 위치에 포지셔닝 했음을 알 수 있다. 바른미래당 후보들의 평균 정책입장 점수는 0.889점이며, 83 퍼센타일에 위치해 중도 보수 정도의 위치에 했고, 자유한국당 후보들의 경우 1.284점으로 91 퍼센타일에 위치해 원내 5대 정당 중 가장 보수적으로 포지셔닝 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정당간 차이는 문항반응모형으로부터 비교적 합리적인 정책입장 추정값이 도출되었다는 것을 시사한다.

<표 12> 제 7 회 지방선거 정당별 정책입장과 퍼센타일

| | 정의당 | 더불어민주당 | 민주평화당 | 바른미래당 | 자유한국당 |
|---|---|---|---|---|---|
| 정책입장점수 | -1.625 | -1.062 | -0.377 | 0.889 | 1.284 |
| 퍼센타일 | 1 | 5 | 27 | 83 | 91 |

세종시를 제외한 16개 광역단체장 후보들의 정책입장 위치를 해당 광역단체 유권자들과 비교해 보았다.[12] 우선 양대 거대 정당 후보들을 해당 광역단체의 중위 유권자와 비교할 경우 민주당 후보들 16명 중 14명(87.5%)이 중위 유권자보다는 극단에 더 가까운 포지셔닝을 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예외적으로 전남과 전북 도지사 선거에 출마한 민주당 후보들만이 극단보다 중위 유권자에 가까운 포지셔닝을 했다. 두 지역의 민주당 후보들의 정책입장은 각각 전남 0.254(58 퍼센타일), 전북 -0.211(34 퍼센타일)로 중위 유권자의 위치에 가까웠다. 이 두 지역은 민주당의 텃밭으로서 유권자들의 성향 자체가 상당히 진보적이다. 따라서 민주당 후보들이 이들 두 지역에서 중위 유권자에 가까운 성향을 보인 것은 어쩌면 자연스러운 것일 수 있다. 실제로 지난 2018년 지방선거에 이 두 광역단체장 선거에 자유한국당은 후보자를 내지 않았다.

반면 자유한국당 후보들의 경우는 13명 중 10명(76.9%)의 후보가 중위 유권자보다 극단에 더 가까운 성향을 보였다. 서울, 부산, 대구, 인천, 울산, 강원, 충남, 경북, 경남, 제주에 출마한 자유한국당 후보들이 이런 방향성 모형에 부합하는 성향을 보였다. 반면 나머지 3곳(대전, 경기, 충북)에 출마한 자유한국당 후보들은 오히려 중위 유권자에 가까운 포지셔닝을 한 것을 알 수 있었다. 지방선거에서도 민주당의 경우 분명한 방향성 모형에 부합하는 포지셔닝을 한 반면 자유한국당 후보들은 상대적으로 그런 경향이 약했다. 따라

[12] 조사대상이었던 후보자 55명 중 52명이 조사에 응했으며(94.5%), 자유한국당 후보(전북) 1명, 바른미래당 후보(광주, 울산) 2명이 응답하지 않았다. 광주, 전남의 경우 자유한국당 후보가 없었으며, 전북의 경우는 자유한국당 후보가 응답하지 않았다.

서 민주당 후보들은 가설1에 부합하는 포지셔닝을 보인 반면 자유한국당 후보들은 그런 경향이 비교적 약했다고 볼 수 있다.

양대 거대 정당 후보들을 각 정당 평균적 지지자들과 비교할 경우 전북과 전남을 제외한 모든 민주당 후보들 (16명 중 14명(87.5%))이 평균적 민주당 지지자보다 극단에 더 가까운 포지셔닝을 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가장 진보적인 성향을 가지 두 지역에서는 중위 유권자에게 어필하는 포지셔닝을 함으로써 모든 유권자들에게 어필하는 전략을 구사한 반면 나머지 지역에서는 선명성을 강조한 것이다.

반면 자유한국당 후보들은 13명 중 9명(69.2%)의 후보만이 해당 광역단체의 지지층보다 극단에 가까운 성향을 보였다. 서울, 부산, 대구, 인천, 울산, 강원, 경북, 경남, 제주에 출마한 자유한국당 후보들만이 방향성 모형에 부합하는 성향을 보였다. 반면 나머지 4곳(대전, 경기, 충북, 충남)에 출마한 자유한국당 후보들은 선명성을 강조하기 보다는 지지층에 어필하는 포지셔닝을 했다. 결론적으로 가설1과 마찬가지로 민주당 후보자들은 가설2에 어느 정도 부합하는 전략적 선택을 했던 반면 자유한국당 후보들은 상대적으로 그런 경향이 덜했다.

<표 13> 제7회 지방선거의 지역별 후보자 정책입장과 퍼센타일

| ■서울 | 더불어민주당 | 자유한국당 | 바른미래당 | 정의당 |
|---|---|---|---|---|
| Policy Position (IRT) | -0.997 | 1.232 | 0.669 | -1.646 |
| Percentile Rank | 6 | 90 | 76 | 1 |
| ■부산 | 더불어민주당 | 자유한국당 | 바른미래당 | 정의당 |
| Policy Position (IRT) | -1.066 | 1.053 | 0.287 | -1.501 |
| Percentile Rank | 5 | 87 | 60 | 1 |
| ■대구 | 더불어민주당 | 자유한국당 | 바른미래당 | |
| Policy Position (IRT) | -1.184 | 0.892 | -0.155 | |
| Percentile Rank | 3 | 83 | 37 | |
| ■인천 | 더불어민주당 | 자유한국당 | 바른미래당 | 정의당 |
| Policy Position (IRT) | -0.710 | 1.321 | 0.097 | -1.385 |
| Percentile Rank | 14 | 92 | 51 | 1 |
| ■광주 | 더불어민주당 | 정의당 | | |
| Policy Position (IRT) | -0.853 | -1.466 | | |
| Percentile Rank | 10 | 1 | | |
| ■대전 | 더불어민주당 | 자유한국당 | 바른미래당 | 정의당 |
| Policy Position (IRT) | -0.698 | 0.288 | 1.610 | -1.724 |
| Percentile Rank | 14 | 60 | 95 | 1 |
| ■울산 | 더불어민주당 | 자유한국당 | | |
| Policy Position (IRT) | -1.329 | 1.048 | | |
| Percentile Rank | 2 | 87 | | |
| ■경기 | 더불어민주당 | 자유한국당 | 바른미래당 | 정의당 |
| Policy Position (IRT) | -1.014 | 0.275 | 0.994 | -1.476 |
| Percentile Rank | 6 | 59 | 86 | 1 |
| ■강원 | 더불어민주당 | 자유한국당 | | |
| Policy Position (IRT) | -1.439 | 1.372 | | |
| Percentile Rank | 1 | 93 | | |
| ■충북 | 더불어민주당 | 자유한국당 | 바른미래당 | |
| Policy Position (IRT) | -1.126 | 0.171 | 0.904 | |
| Percentile Rank | 4 | 54 | 84 | |

| | | | | |
|---|---|---|---|---|
| ■충남 | 더불어민주당 | 자유한국당 | | |
| Policy Position (IRT) | -0.595 | 0.764 | | |
| Percentile Rank | 18 | 79 | | |
| ■전북 | 더불어민주당 | 민주평화당 | 정의당 | |
| Policy Position (IRT) | -0.211 | -0.148 | -0.830 | |
| Percentile Rank | 34 | 37 | 10 | |
| ■전남 | 더불어민주당 | 바른미래당 | 민주평화당 | 정의당 |
| Policy Position (IRT) | 0.254 | 0.360 | -0.579 | -1.120 |
| Percentile Rank | 58 | 64 | 18 | 4 |
| ■경북 | 더불어민주당 | 자유한국당 | 바른미래당 | 정의당 |
| Policy Position (IRT) | -1.508 | 1.529 | 0.424 | -1.746 |
| Percentile Rank | 1 | 95 | 67 | 1 |
| ■경남 | 더불어민주당 | 자유한국당 | 바른미래당 | |
| Policy Position (IRT) | -1.149 | 0.975 | 0.956 | |
| Percentile Rank | 4 | 85 | 85 | |
| ■제주 | 더불어민주당 | 자유한국당 | 바른미래당 | 무소속 |
| Policy Position (IRT) | -1.223 | 1.157 | 0.926 | 0.495 |
| Percentile Rank | 3 | 89 | 84 | 70 |

위 결과를 요약하면 대선 및 지방선거 모두에서 두 거대정당 중 민주당 후보자들은 선명성을 강조하는 포지셔닝을 했다. 반면 자유한국당 후보들은 상대적으로 보수적인 위치에 포지셔닝을 하긴 했으나 선명성 보다는 자유한국당의 평균적 지지층 또는 중위 유권자에게 어필하는 포지셔닝을 했다. 즉 민주당 후보자들의 경우 가설1과 2에 부합한 포지셔닝을 했던 반면 자유한국당 후보들에게는 가설1과 2가 성립하지 않았다. 이는 2017년과 2018년 당시 보수 심판 분위기가 지배적인 상황에서 자유한국당 후보들이 전략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 제3절 후보자 포지셔닝: 경합에 따른 선명성 강조

지금까지 2017년 대선과 2018년 지방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들이 선명성을 강조하는 포지셔닝을 했는지 살펴보았다. 이 절에서는 과연 이러한 포지셔닝이 후보자들의 의식적인 전략적 선택의 결과였는지를 살펴본다. 사실 이를 검증해 볼 좋은 방법은 존재하지 않는다. 본 연구에서는 경합이 치열한 지역에서 후보자들의 선명성 강조 경향성이 높아지는지 여부를 간접적인 방법으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절에서는 전통적인 경합지역으로 분류될수록 선명성을 강조하는 포지셔닝이 늘어나는지 살펴보았다. 경합이 예상될수록 후보자들이 선명성 경쟁을 보인다면 후보자들이 일반적으로 방향성 모형에서 상정하는 유권자의 행동 양식을 믿는다는 것을 시사한다. 반면 오히려 경합이 예상될수록 극단적인 포지셔닝을 지양하는 경향성이 나타난다면 일방적 몰표를 주는 투표행태가 극단적인 포지셔닝을 부추기는 결과로 이어졌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를 위해 16개 광역단체장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들을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지난 2017년 대선에서 범여권 후보(문재인, 심상정)들과 범야권 후보(홍준표, 안철수, 유승민)들이 얻은 득표율 차이를 구하여 이를 해당 지역에서 어느 정도의 경합이 예상되는지에 대한 척도로 삼았다. 해당 광역단체장 선거에서 얼마나 경합이 일어났는지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실제 선거 결과를 활용하는 편이 가장 정확한 척도일 수 있다. 그러나 이는 후보자들의 전략적 포지셔닝의 효과가 반영된 것이기 때문에 내생성(endogeniety)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본 분석에서는 2018년 광역단체장 선거 결과를 사용하는 대신 2017년 대통령 선거 결과를 활용하였다. 논쟁적이지만 선거 당시 후보자들이 해당 지역에서 어느 정도 경합이 예상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과 가장 유사한 척도로 볼 수 있다.

다음으로 얼마나 경합이 예상되는지에 따라 후보자의 포지셔닝이 얼마나 더 극단적인 방향으로 변화하는지 살펴보기 위해서 각 후보의 소속 정당과 19대 대선 득표율 차이값[13]의 교차항을 회귀모형에 포함하였다. 대선 득표율 차이가 크다는 것은 영남, 호남처럼 경합이 적은 지역을 의미하고, 득표율 차이가 작다는 것은 수도권처럼 경합이 큰 지역을 의미한다. 조사에 응한 후보자 수자가 52명에 불과하기 때문에 많은 독립변수를 포함한 회귀모형을 적용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은 상황에서 모든 주요 정당과 대선득표율 차이의 교차항을 포함함으로써 각 정당의 후보자들이 경합 정도에 따라 어떻게 전략적 포지셔닝을 했는지 살펴볼 수 있는 모형이라 볼 수 있다(<표 14> 참조).

<표 14> 경합 정도에 따른 포지셔닝

| | b | s.e. | t | P>\|t\| |
|---|---|---|---|---|
| 상수항 | -0.279* | 0.141 | -1.975 | 0.054 |
| **더불어민주당 x 대선득표율차이** | 0.018* | 0.01 | 1.708 | 0.094 |
| **자유한국당 x 대선득표율차이** | -0.042*** | 0.014 | -2.995 | 0.004 |
| **정의당 x 대선득표율차이** | 0.001 | 0.013 | 0.075 | 0.941 |

*p<0.1; **p<0.05; ***p<0.01

회귀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자유한국당 후보들이 대선 득표율 차이가 많이 나는 지역, 즉 범여권 대선후보들의 득표율이 높았던 지역에서 ‘중도화’ 하는 경향(b=-0.042, $p$ <0.01)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에서도 범야권 대선후보들의 득표율이 높았던 지역에서 어느 정도 ‘중도화’ 하는 경향(b=0.018, $p$ <0.1)이 있었지만 자유한국당 후보들에 비해서는 약했다. 반면 정의당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13] 대선득표율차이 값은 제19대 대통령 선거의 득표 결과를 활용했다. 대선득표율차이=(더불어민주당+정의당)-(자유한국당+국민의당+바른정당).

다만 영남/호남처럼 경합이 적은 지역의 유권자들은 전반적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 보수적이거나 진보적인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이 지역 후보자들을 중위 유권자에 맞춘다는 것이 결국은 극단에 가는 것과 같은 의미가 될 수 있다. 가령 호남 지역의 유권자들은 서울 지역의 유권자들보다 전반적으로 진보적이기 때문에 호남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후보자가 모든 정책입장에서 서울의 더불어민주당 후보자와 똑같이 응답했다고 하더라도 서울에서는 호남 지역 후보자가 진보적인 포지셔닝을 한 것이 되지만 호남에서는 상대적으로 중도적인 포지셔닝을 한 것처럼 보이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분석을 하면 경합이 낮은 지역은 중도화 하고 경합이 높은 지역은 선명성 경쟁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 현상이 생길 수 있다. 즉 "선거 전략"으로서 경합지역에서 선명성 경쟁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지역 유권자의 성향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것인지 식별이 안 된다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따라서 이 문제를 다루기 위해 경합이 큰 지역인 서울의 유권자들에 비해서 영남/호남 후보자들이 어느 정도의 포지셔닝을 했는지 추가로 살펴보기로 한다. 가령 전남/광주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서울 유권자에 놓고 계산했을 때 서울의 더불어민주당 후보에 비해서 더 중도에 위치하는지 확인해 보고자 한다.

<표 15> 서울에서 영남/호남 후보자들의 포지셔닝

| | 더불어민주당 | | | 자유한국당 | | |
|---|---|---|---|---|---|---|
| 서울 | 서울후보 | 광주후보 | 전남후보 | 서울후보 | 대구후보 | 경북후보 |
| Policy Position | -0.997 | -0.970 | 0.126 | 1.232 | 1.018 | 1.407 |
| Percentile Rank | 6 | 10 | 54 | 90 | 86 | 93 |

분석 결과 서울에서 더불어민주당의 광주 후보와 전남 후보가 서울 후보에 비해 더 중간으로 포지셔닝 했으며, 자유한국당의 대구 후보가 서울 후보에 비해 중간으로 포지셔닝 하는 경향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경북 후보의 경우는 반대로 더 선명한 포지셔닝

을 했다. 결과적으로 전남, 광주, 대구 후보의 경우는 방향성 자체는 서울에 출마한 해당 정당 후보들보다 가운데 쪽으로 이동해서 가설 3에 부합하는 경향성이 나타나긴 했지만 큰 차이가 나지 않아서 유의미하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경북 후보의 경우는 가설 3이 성립하지 않았다.

## 제4절 가상 득표율 對 실제 득표율

이 절에서는 <연구 질문 1>에 대한 답을 탐색해 보고자 한다. 즉 지금까지 자세히 기술한 후보자들의 포지셔닝이 유권자 정책선호의 대표성에 어떤 영향을 주는 살펴본다. 이를 통해 한국의 선거 후보자들의 포지셔닝이 민주주의에 가지는 함의가 무엇인지 살펴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를 위해 한국의 유권자들이 자신의 정책선호에 완벽하게 일치하는 '완벽한' 정책투표를 했다면 도출되었을 '가상' 득표율을 계산하고 이를 실제 득표율과 비교해 본다. 즉 '가상'의 득표율은 각 유권자가 자신의 정책 성향과 가장 가까운 정책 성향을 가진 후보자에게 투표하는 가상의 상황을 상정한 것이다. 2017년 대선 후보들 중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와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모든 정책문항에 동일하게 응답하였기 때문에 둘의 득표율을 합산하여 '가상'의 득표율과 실제 득표율을 계산했다.

우선 2017년 대통령 선거의 실제 선거 결과와 '완벽한' 정책 투표에 근거한 가상의 결과를 비교해 보았다. 대선연구 1에서 당선자인 문재인·심상정 후보의 '가상' 득표율은 11.6% 정도였던 반면 실제 득표율은 47.3%였다. 따라서 문재인·심상정 후보에게 투표한 47.3%의 유권자 중 거의 70%(전체 유권자 중 36%)의 유권자들은 자신의 정책선호가 최대한 반영되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앞 절에서 밝혔듯이 정책입장 면에서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가 가장 중도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가상'의 득표율로 보면 안철수 후보(44.1%), 유승민 후보(26.0%)는 물론 심지어 홍준표 후보(18.4%)도 당선자인 문재인·심상정 후보보다 유권자들과의 정책선호 일치도가 높았다. 또 정책입장을 기준으로 보면 안철수 후보가 선출되어야 가장 많은 유권자들이 자신의 정책선호가 대표될 수 있으나 실제로는 안철수 후보의 득표율은 21.4%에 불과하여 3위에 머물렀다. 예상 득표율이 11.6%에 불과했던 문재인 후보가 실제 득표율에선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대선연구 2의 결과도 유사했다. 대선연구 2에서 당선자인 문재인·심상정 후보의 '가상' 득표율은 14.6%였다. 즉 '가상' 득표율보다 무려 32.7% 포인트 더 높은 득표율을 기록한 것이다. 그만큼 범여권 후보들의 포지셔닝은 유권자의 정책선호와는 동떨어졌다. 대선연구 2에서는 안철수 후보(48.2%), 유승민 후보(24.7%), 문재인·심상정 후보(14.6%), 홍준표 후보(12.5%)의 순으로 유권자들과의 정책 선호 일치도가 높았다.

<표 16> 제19대 대통령선거 가상 득표율 對 실제 득표율

| | 대선연구1 (n=1,009) | | | | |
|---|---|---|---|---|---|
| | 문재인+심상정 | 홍준표 | 안철수 | 유승민 | 합계 |
| 가상 득표율 | 11.6% | 18.4% | 44.1% | 26.0% | 100.0% |
| 실제 득표율 | 47.3% | 24.0% | 21.4% | 6.8% | 100.0% |
| | 대선연구2 (n=1,200) | | | | |
| | 문재인+심상정 | 홍준표 | 안철수 | 유승민 | 합계 |
| 가상 득표율 | 14.6% | 12.5% | 48.2% | 24.7% | 100.0% |
| 실제 득표율 | 47.3% | 24.0% | 21.4% | 6.8% | 100.0% |

다음으로, 제7회 지방선거에서 광역단체장 후보들의 '가상' 득표율과 실제 득표율을 비교해 보았다. 16개 광역단체장 선거에서 당선자를 기준으로 보면 평균 24.9% 정도 '가상' 득표율보다 실제 득표율이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당선자들의 평균 득표율이 60.1% 정도였던 점을 감안하면 이는 상당한 차이라고 볼 수 있다. 광주광역시의 이용섭 당선자를 제외하면 모든 당선자가 실제 득표율이 '가상' 득표율보다 높았다. 이용섭 당선자의 경우 실제 득표율이 84.1%이었고 실질적인 경쟁이 정의당 후보 외에는 없었던 상황이어서 예외적인 사례로 볼 수 있다. 흥미로운 점은 여당과 야당의 텃밭이라 할 수 있는 전남(54.8%)과 전북(50.7%), 경북(35.6%) 순으로 불일치도가 가장 높았다. 또 이재명 경기지사도 불일치도가 무려 30.1%에 달했다.

<표 17> 제 7 회 지방선거 가상 득표율 對 실제 득표율

| ■서울 | 더불어민주당 | 자유한국당 | 바른미래당 | 정의당 |
|---|---|---|---|---|
| **가상득표율(%)** | 33.26% | 17.93% | 41.20% | 7.61% |
| **실제득표율(%)** | 52.79% | 23.34% | 19.55% | 1.64% |
| **■부산** | 더불어민주당 | 자유한국당 | 바른미래당 | 정의당 |
| **가상득표율(%)** | 24.76% | 24.43% | 42.49% | 8.32% |
| **실제득표율(%)** | 55.23% | 37.16% | 3.96% | 2.07% |
| **■대구** | 더불어민주당 | 자유한국당 | 바른미래당 | |
| **가상득표율(%)** | 23.93% | 34.38% | 41.69% | |
| **실제득표율(%)** | 39.75% | 53.73% | 6.50% | |
| **■인천** | 더불어민주당 | 자유한국당 | 바른미래당 | 정의당 |
| **가상득표율(%)** | 23.23% | 23.51% | 39.13% | 14.13% |
| **실제득표율(%)** | 57.66% | 35.44% | 4.06% | 2.82% |
| **■광주** | 더불어민주당 | 정의당 | | |
| **가상득표율(%)** | 86.14% | 13.86% | | |
| **실제득표율(%)** | 84.07% | 5.99% | | |
| **■대전** | 더불어민주당 | 자유한국당 | 바른미래당 | 정의당 |
| **가상득표율(%)** | 27.32% | 39.34% | 19.13% | 14.21% |
| **실제득표율(%)** | 56.41% | 32.16% | 8.78% | 2.63% |
| **■울산** | 더불어민주당 | 자유한국당 | | |
| **가상득표율(%)** | 40.32% | 59.68% | | |
| **실제득표율(%)** | 52.88% | 40.07% | | |
| **■경기** | 더불어민주당 | 자유한국당 | 바른미래당 | 정의당 |
| **가상득표율(%)** | 26.32% | 41.12% | 24.21% | 8.35% |
| **실제득표율(%)** | 56.40% | 35.51% | 4.81% | 2.54% |
| **■강원** | 더불어민주당 | 자유한국당 | | |
| **가상득표율(%)** | 45.07% | 54.93% | | |
| **실제득표율(%)** | 64.73% | 35.26% | | |

| ■충북 | 더불어민주당 | 자유한국당 | 바른미래당 | |
|---|---|---|---|---|
| 가상득표율(%) | 28.77% | 41.67% | 29.56% | |
| 실제득표율(%) | 61.15% | 29.66% | 9.17% | |
| ■충남 | 더불어민주당 | 자유한국당 | | |
| 가상득표율(%) | 51.88% | 48.12% | | |
| 실제득표율(%) | 62.55% | 35.1% | | |
| ■전북 | 더불어민주당 | 민주평화당 | 정의당 | |
| 가상득표율(%) | 19.84% | 51.90% | 28.26% | |
| 실제득표율(%) | 70.57% | 19.11% | 5.43% | |
| ■전남 | 더불어민주당 | 바른미래당 | 민주평화당 | 정의당 |
| 가상득표율(%) | 22.24% | 33.27% | 25.68% | 18.81% |
| 실제득표율(%) | 77.08% | 3.84% | 10.58% | 3.57% |
| ■경북 | 더불어민주당 | 자유한국당 | 바른미래당 | 정의당 |
| 가상득표율(%) | 23.01% | 16.55% | 51.82% | 8.61% |
| 실제득표율(%) | 34.32% | 52.11% | 10.19% | 3.36% |
| ■경남 | 더불어민주당 | 자유한국당 | 바른미래당 | |
| 가상득표율(%) | 42.21% | 18.28% | 39.50% | |
| 실제득표율(%) | 52.81% | 42.95% | 4.23% | |
| ■제주 | 더불어민주당 | 자유한국당 | 바른미래당 | 무소속 |
| 가상득표율(%) | 26.67% | 17.96% | 14.63% | 40.74% |
| 실제득표율(%) | 40.01% | 3.26% | 1.45% | 51.72% |

완전한 정책투표를 가정한 '가상'의 선거 결과와 실제 선거 결과를 비교해 보았다. 모든 유권자들이 완벽한 정책투표를 했다면, 더불어민주당은 3개의 광역단체장 선거에서만 가장 많은 유권자의 정책 선호를 대표했으나 실제로는 13곳에서 당선됐다. 자유한국당의 경우 5개 광역단체에서 유권자 정책선호를 가장 잘 대표했으나 실제로는 2곳에서 승리했다. 바른미래당의 경우 6곳에서 유권자 정책선호를 가장 잘 대표했으나 실제로는 당선지역

이 아예 없었다. 민주평화당의 경우도 1곳에서 유권자 정책선호를 가장 잘 대표했으나 실제로는 당선지역이 아예 없었다. 이처럼 유권자들의 정책 선호와 실제 선거에서 정당후보 지지 사이에 큰 차이가 나타나는 것은 후보자들의 포지셔닝이 유권자들의 정책 선호를 대표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는 유권자들이 후보자를 선택할 때 후보자의 정책 입장보다는 후보자가 속해있는 정당이나 후보자 개인의 경쟁력 등 정책 이외의 요인들에 의해서 투표를 결정한다는 인식이 후보자들에게 있기 때문일 것이다.

<표 18> 제7회 지방선거 실제 당선자 수와 정책선호 기반 '가상' 당선자 수

| | 더불어민주당 (+10) | 자유한국당 (-3) | 바른미래당 (-6) | 민주평화당 (-1) | 정의당 (0) | 무소속 (0) |
|---|---|---|---|---|---|---|
| 가상 당선자 수 | 3 | 5 | 6 | 1 | 0 | 1 |
| 실제 당선자 수 | 13 | 2 | 0 | 0 | 0 | 1 |

결론적으로 현재 한국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들의 포지셔닝은 유권자의 정책선호를 대표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모든 유권자들이 정책 투표를 했다면 도출되었을 '가상'의 선거결과와 실제 선거 결과와의 사이에는 매우 큰 격차가 있었다. 물론 모든 유권자가 정책 투표를 하는 상황은 전혀 현실적이지 못하고 규범적으로도 바람직한지 논쟁적일 수 있다. 그러나 현재 후보자들의 포지셔닝은 어떤 기준으로 봐도 대의민주주의에서 바람직한 수준의 대표성을 제공하기에는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 제5절 후보자의 실제 정책 입장과 유권자의 인식

이 절에서는 <연구 질문 2>에 대한 답을 탐색하기 위해 유권자들이 인식하고 있는 주요 후보들의 이념위치와 실제 후보자의 정책입장 간에 차이를 살펴본다. 이를 위해 설문 응답자들이 평가한 후보자의 이념성향(voter ratings)[14] (0~10점)을 분석, 유권자들이 인식하는 후보자들의 이념위치의 척도로 활용했다. 이를 후보자들이 밝힌 정책입장과 비교하여 유권자들의 인식에 존재하는 체계적인 오류가 있는지 탐색한다. 이를 통해 앞서 기술한 진보진영 후보자들의 극단적 포지셔닝이 실제로 방향성 모형에서 상정하는 유권자의 행태에 기인하는지 탐색해 본다. 특히 만약 유권자들이 진보 후보자들의 성향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다면 이는 방향성 모형에서 상정하는 유권자의 행동에 부합하는 것으로 해석 가능할 것이다.

우선 대선연구 1의 응답자들은 정의당 심상정 후보(3.135)가 가장 진보적일 것이라고 판단했으며, 다음으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3.508),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4.424),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5.821),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6.954) 순으로 진보적일 것이라고 평가했다. 대선연구 2에서도 정의당 심상정 후보(2.790),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3.021),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4.944),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5.889),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7.974) 순으로 진보적이라고 평가했다. 두 조사 모두에서 동일한 결과가 나왔다는 것은 유권자가 바라보는 후보자의 정책 입장이 일관성이 높다는 것을 보여준다.

유권자들의 인식과 실제 후보자들의 정책 입장 사이에는 큰 괴리가 존재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대선연구 1의 결과를 살펴보면 정의당 심상정 후보와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의 경우 실제 정책입장으로 보면 전체 유권자 중 1 퍼센타일에 해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응답자들은 두 후보를 진보진영의 중간 정도의 성향(34 퍼센타일)으로 평가했다. 대선

[14] 유권자가 바라보는 정치인의 이념 성향 문항을 11점(0~10점) 척도로 측정했으며, 0은 매우 진보를, 10은 매우 보수를 나타낸다. Voter Ratings는 모든 유권자가 각 후보자에 매긴 점수에서 평균을 취한 값이다.

연구 2에서는 유권자들이 심상정 후보를 9 퍼센타일, 문재인 후보를 24 퍼센타일이라고 응답함으로써 실제보다 훨씬 '온건한' 성향으로 인식했다. 이렇게 진보정당 대선 후보들의 경우 유권자은 실제보다 상대적으로 '온건한' 성향으로 인식하는 체계적인 오류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대선연구 1(85 대 70 퍼센타일)과 2(94 대 74 퍼센타일) 모두에서 응답자들이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를 실제 정책입장보다 훨씬 극단적인 성향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이러한 체계적인 인식상의 오류는 2017년 당시 한국 사회에 확산한 보수 심판 분위기로 인해 응답자들이 자신이 선호하는 후보자들의 정책 입장을 '온건' 성향으로 평가하고 불선호하는 후보자들을 '극단' 성향으로 인식하는 투사(projection) 현상으로 해석할 수 있다. 반면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와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의 경우 후보자의 응답과 유권자의 인식에 큰 차이가 없는 것을 알 수 있다. 호불호가 갈리지 않은 두 후보의 경우 유사한 '투사효과'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19> 제19대 대통령선거에서 후보자의 실제 정책입장과 유권자의 인식

| | **대선연구1** | | | | |
|---|---|---|---|---|---|
| | 심상정 | 문재인 | 안철수 | 유승민 | 홍준표 |
| 유권자 인식 (0~10점) | 3.135 | 3.508 | 4.424 | 5.821 | 6.954 |
| 유권자 인식 (퍼센타일) | 34 | 34 | 44 | 75 | 85 |
| 실제 정책입장 (퍼센타일) | 1 | 1 | 47 | 78 | 70 |
| | **대선연구2** | | | | |
| | 심상정 | 문재인 | 안철수 | 유승민 | 홍준표 |
| 유권자 인식 (0~10점) | 2.790 | 3.021 | 4.944 | 5.889 | 7.974 |
| 유권자 인식 (퍼센타일) | 9 | 24 | 45 | 74 | 94 |
| 실제 정책입장 (퍼센타일) | 1 | 1 | 48 | 79 | 74 |

다음으로, 2018년 6·13 지방선거에서 후보자의 이념위치에 대한 유권자의 평가를 살펴보았다. 유권자들은 평균적으로 정의당(3.441) 후보들이 가장 진보적일 것이라고 평가했으며, 더불어민주당(3.540), 민주평화당(4.569), 바른미래당(5.840), 자유한국당(7.553) 후보들 순으로 응답했다. 정의당 후보들의 실제정책 입장의 평균은 1 퍼센타일,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의 평균은 5 퍼센타일이었다. 후보자들의 실제 정책입장은 정의당 후보들이 민주당 후보들보다 진보적이었지만 유권자들의 인식은 정의당과 더불어민주당이 동일하게 28 퍼센타일 정도에 해당했다. 이는 두 정당 후보들 모두 실제보다 '온건한' 성향으로 인식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며 이는 진보정당의 대선후보들에게서 나타났던 '투사' 현상과 일맥상통하는 결과로 볼 수 있다. 민주평화당의 경우도 후보자들의 실제 정책입장은 27 퍼센타일에 해당했지만 유권자들의 인식은 중도에 가까운 41 퍼센타일이었다. 결과적으로, 진보정당 후보들의 경우 후보자의 실제 정책입장보다 유권자은 상대적으로 '온건한' 것으로 인식하는 체계적 오류가 나타났다.

반면 지방선거 연구의 경우 자유한국당 후보들은 평균적으로 91 펴센타일 정도에 해당했으며 유권자들의 인식도 90 펴센타일에 해당해 거의 유사했다. 바른미래당의 경우는 후보들은 평균적으로 83 펴센타일에 해당했으며 유권자들의 인식은 74 펴센타일에 해당했다.

<표 20> 제7회 지방선거에서 후보자의 실제 정책입장과 유권자의 인식

| | 정의당 | 더불어민주당 | 민주평화당 | 바른미래당 | 자유한국당 |
|---|---|---|---|---|---|
| 유권자 인식 (0~10점) | 3.441 | 3.540 | 4.569 | 5.840 | 7.553 |
| 유권자 인식 (퍼센타일) | 28 | 28 | 41 | 74 | 90 |
| 실제 정책입장 (퍼센타일) | 1 | 5 | 27 | 83 | 91 |

요약하면 대선에서 유권자들은 진보정당의 후보들은 실제보다 ‘온건한’ 성향으로 인식한 반면 보수정당 후보들은 실제보다 더 ‘극단적’인 성향으로 인식했다. 이러한 체계적인 인식오류는 잘 알려진 ‘투사’ 현상으로 보인다. 즉 유권자들은 후보자들의 정책입장에 따라 투표 결정을 하기 보다는 지지하는 후보를 실제보다 ‘중도’에 가깝다고 인식하며 지지하지 않는 후보를 실제보다 ‘극단’에 가깝다고 인식하는 경향이 있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결과는 ‘방향성 모형’에서 상정하는 유권자의 모습과는 상이한 것으로 보인다. 즉 유권자들은 자기 진영의 후보자들 중 가장 극단적인 후보에게 투표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의 성향에 대해 체계적인 오류를 가진 것으로 해석 가능하다.

지방선거에서도 마찬가지로 유권자들은 진보정당의 후보들을 실제보다 ‘온건한’ 성향으로 인식했으며, 보수정당의 후보들의 경우는 자유한국당 후보들은 거의 유사하게 인식하고 있었으며 바른미래당은 후보들을 실제보다 온건하게 인식했다. 각 광역단체별 후보자의 실제 정책입장과 유권자의 인식점수는 부록에 제시하였다.

# 제 6 장 논의 및 결론

## 제1절 연구 결과 요약

본 연구에서는 한국 선거 정치에서 후보자들의 포지셔닝 전략을 살펴봤다. 앞에서 주지했듯 선거 정치가 유권자들의 정치적 양극단화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증명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과제이며 본 논문의 범위를 넘어선다. 대신 본 연구에서는 이런 연구 방향의 첫 번째 단계로서 한국 선거 정치에서 후보자들이 유권자들에 비해 얼마나 극단적인 포지셔닝을 하는지 여부를 살펴봤다. 이는 선거 정치가 유권자 양극단화에 미치는 영향을 보이기 위한 전제 조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후보자들이 유권자들에 비해 특별히 극단적인 포지셔닝을 하지 않는다면 선거 정치와 정치적 양극단화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한 가설은 성립조차 되기 어려웠을 것이다.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선거 과정에서 후보자들의 포지셔닝 전략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살펴봤다. 이를 위해 후보자의 정책성향 점수를 구하고 유권자들의 정책성향 점수의 분포와 비교함으로써 후보자들의 포지셔닝이 '방향성 모형' 또는 '근접 모형'에 더 가까운지 살펴봤다. 분석 결과 대선 및 지방선거 모두에서 두 거대정당 중 민주당 후보자들은 선명성을 강조하는 포지셔닝을 했다. 반면 자유한국당 후보들은 상대적으로 보수적인 위치에 포지셔닝을 하긴 했으나 선명성보다는 자유한국당의 평균적 지지층 또는 중위 유권자에게 어필하는 포지셔닝을 했다. 즉 민주당 후보자들의 경우 가설1과 2에 부합한 포지셔닝을 했던 반면 자유한국당 후보들에게는 가설1과 2가 성립하지 않았다. 이는 2017년과 2018년 당시 보수 심판 분위기가 지배적인 상황에서 자유한국당 후보들이 전략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다음으로 지방선거에서 경합에 따라 상대 정당의 포지셔닝 전략이 달라지는지 여부를 확인했다. 그 결과 양대 정당 모두 대선 득표율 차이가 많이 나는 지역(특정 정당이 지속적으로 유리한 지역), 즉 경합이 적은 지역에서 중도화 하는 경향이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자유한국당 후보들이 대선 득표율 차이가 많이 나는 지역에서 중도화 하는 경향이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더불어민주당 등 진보정당의 후보들은 당시 한반도 해빙 기류 등이 진보정당 후보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었기에 비교적 선명한 정책입장을 유지할 수 있었지만, 자유한국당 후보들은 한국 사회에 확산한 보수 심판 분위기가 작용한 영향으로 득표율 차이가 많이 나는 지역에서는 이념적으로 선명한 정책 포지셔닝 입장을 취하기보다는 전략적으로 중도화 전략을 취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또 경합이 큰 지역에서 선명성 경쟁을 하는 경향이 나타나긴 했으나 큰 차이가 발견되진 않아서 가설 3은 성립하지 않았다.

다음으로 이러한 후보자들의 포지셔닝이 유권자들의 실제 정책 선호와 얼마나 상이한 결과를 내는지를 확인해봤다. 이를 위해 본 분석에서는 실제 투표결과와 유권자들의 정책 투표를 가정한 선거결과와 비교해 보았다. 분석 결과 실제 선거 결과와 정책 투표를 상정한 선거 결과 간에는 큰 괴리가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후보자들의 양극단화된 포지셔닝이 대의민주주의가 가정하는 후보자들의 대표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유권자들은 후보자들의 이러한 극단적 정책 입장을 인지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유권자들이 인식하는 후보자들의 이념 성향과 후보자들의 실제 이념 성향이 얼마나 일치하는지를 분석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설문항목에 기재된 '응답자가 생각하는 후보자의 이념 성향 문항' (0-10점 척도)로 측정해 분석했다. 제19대 대통령 선거의 경우 유권자들이 가진 양대 정당 후보자의 이념 위치와 실제 후보자의 정책선호 위치 사이에는 상당한 괴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유권자들은 더불어민주당 후보자들의 입장을 실제보다 훨씬 중도에 가깝게 인식하고 있었다. 반면 자유한국당의 경우 유권자들이 인식

하는 후보자들의 성향이 실제보다 더 극단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선거에서도 마찬가지로 유권자들은 더불어민주당의 후보들을 실제보다 온건한 성향으로 인식했으며, 자유한국당 후보들을 극단적인 성향으로 인식했다. 다만 지방선거의 경우 자유한국당 후보들이 실제로 극단적으로 응답해 유권자들의 인식과 유사했다.

결론적으로 정치엘리트들의 선명성 경쟁이 매우 심각한 상황이며 유권자들이 가진 후보자들의 실제 정책 입장에 대한 인식에는 체계적인 오류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 이러한 선명성 경쟁이 대의민주주의에 가지는 함의는 분명했다. 선출된 후보들과 유권자들의 정책 선호와의 사이에는 분명한 괴리가 존재했다. 이에 따라 정치엘리트들은 매우 양극단화된 선택지를 제시하게 될 가능성이 높고 이는 유권자들의 정치적 양극단화를 더욱 조장하는 결과로 이어져 전반적인 정치적 양극단화 현상이 더욱 심화되는 악순환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 제2절 연구 결과의 함의와 한계

본 연구 결과는 몇 가지 주요한 정치적 함의를 갖고 있다. 첫 번째로, 한국 선거 과정의 특수성을 후보자의 관점에서 살펴봤다는 점이다. 기존의 한국의 선거 연구는 대부분 유권자 중심에서 이뤄져왔고, 특히 후보자의 포지셔닝에 초점을 맞춘 연구는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후보자의 입장을 직접 조사해서 한국 선거 캠페인에서 후보자의 포지셔닝 전략이 유권자 양극단화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봤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나아가 일반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동일한 정책 사안에 대한 입장을 묻는 자체 설문 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2017년 한국사회조사에도 동일한 설문을 포함해서 각 유권자들과 후보자들의 정책 입장을 동일한 축에서 비교가 가능하도록 하였다는 점이 본 연구의 중요한 특징이다.

또 모든 데이터를 문항반응이론(IRT)을 통해 분석했다는 점이 본 연구의 유용한 점이다. 문항반응이론은 각 응답자의 문항별 응답분포를 고려해 정책 선호를 계량화하기 때문에 문항반응이론을 바탕으로 추정된 정책입장 점수는 상대적으로 정확하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문항반응이론 모델링을 통해서 비교적 정확하게 가설을 검증했고, 나아가 이 분석 결과를 토대로 회귀분석 등 다른 통계를 접목해서 또 다른 유의미한 결과들을 도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몇 가지 한계점이 존재한다. 첫 번째로, 제19대 대통령 선거와 제7회 지방선거 데이터만을 이용해서 분석했기 때문에 다양한 선거를 다루지 못했다는 점이다. 선거마다 고유의 특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총선 데이터 등을 포함해서 선거 별로 후보자 포지셔닝 전략이 어떻게 달라지는 지를 비교하면 더 심층적인 연구가 가능할 것이다. 또 미국 등 다른 나라에 비해서 한국은 후보자의 수가 적고, 그나마도 소수 정당의 경우는 후보를 내지 않는 지역이 많기 때문에 대표성을 지니기가 어렵다는 점이 아쉽다. 대통령 선거나 지방선거의 광역단체장 후보 수에 비해서 총선의 경우에는 후보자 수가 훨씬 많기

때문에 총선 후보자를 대상으로 같은 연구를 진행한다면 더 다각적인 분석이 가능할 것이다. 또 지방선거의 경우 본 연구에서는 광역의원만 포함했지만 기초의원들까지 확대할 수 있다면 더 심층적인 분석이 가능할 것이다.

다음으로 지방선거 데이터의 경우 조사 대상이었던 후보자 55명 중 52명이 조사에 응해서(94.5%) 모든 후보에게 응답을 받지 못했다는 점도 아쉽다. 그나마 답변을 제공한 후보자들 중에서도 어떤 후보자들은 일부 문항에 대해 모호하게 답변하거나 무응답 하기도 했다. 이러한 경우에는 무응답으로 처리하거나, 정당의 다수의견으로 코딩했는데 데이터의 정확성면에서 아쉬운 부분이다.

마지막으로 분석에 포함된 세 개의 데이터가 조사된 시기가 당시 한국 사회에 확산한 보수 심판 분위기로 인해 영향을 받았던 시점이라는 점이 아쉽다. 제19대 대통령선거와 제7회 지방선거가 치러진 2017~2018년은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초반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 고공행진이 이어지고 있던 상황이며, 한반도 해빙 기류 등이 진보정당 후보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었던 시기다. 반면, 보수정당의 경우 탄핵과 정권교체 등을 경험하고도 혁신적인 변화를 보여주지 못하고 오히려 당 지도부의 말실수, 일부 의원들의 막말과 극우 행보 등으로 유권자들에게 외면당했던 시기다. 보수정당의 지지율이 높았던 시기에 조사된 결과도 추가한다면 더 다각적이고 심층적인 결과가 도출될 것이다.

하지만 기존에 한국 선거연구에서 거의 이뤄지지 않았던 후보자 입장을 중심으로 분석을 진행했다는 점, 각 유권자들과 후보자들의 정책 입장을 동일한 축에서 비교가 가능하도록 하였다는 점, 그리고 문항반응이론을 바탕으로 모델링 한 결과를 통해 가설을 검증하고, 이 분석결과를 토대로 회귀분석 등 다른 통계를 접목해서 유의미한 결과들을 도출해낸 사례를 만들어 냈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를 찾고자 한다.

# 참고문헌

## 1. 국문


가상준. (2014). 한국 국회는 양극화되고 있는가? *의정논총, 9*(2), 247-272.

가상준. (2016). 정책영역별로 본 국회 양극화. *OUGHTOPIA The Journal of Social Paradigm Studies, 31*(1), 327-354.

강원택. (2010). *한국 선거정치의 변화와 지속 : 이념, 이슈, 캠페인과 투표참여 / 강원택 지음.*

강원택. (2012). 제19대 국회의원의 이념 성향과 정책 태도. *의정연구, 36,* 5.

강태훈. (2010). IRT summed-score linking to achieve comparability between observed test scores. *교육평가연구, 23*(2), 509-528.

길정아. (2019). 정부신뢰와 정부불신, 그리고 투표 참여: 유권자의 이념성향과 정당호감도에 따른 차별적 유인. *의정연구, 57,* 103-139.

길정아, & 하상응. (2019). 당파적 편향에 따른 책임 귀속: 여야간 갈등인식과 정당 호감도를 중심으로. *의정연구, 25*(1), 45-78.

김문길, 우선희, 곽윤경, 정해식, 이정윤, & 김미곤. (2019). 사회통합 실태 진단 및 대응 방안 연구 (Ⅵ)--사회통합 상태 진단.

박아란, 이소은, & 한국언론진흥재단. (2020). *디지털 뉴스 리포트 2020 한국 = Digital News Report in Korea 2020 / 박아란, 이소은 [연구] ; 한국언론진흥재단 [편].*

박준, & 정동재. (2018). 사회갈등지수와 갈등비용 추정. *기본연구과제, 2018*, 3448-3765.

박진아. (2010). 고용보험법 적용 국내 기업 e러닝의 학업성취도 측정 문항에 대한 양호도 검증.

성태제. (2001). *문항반응이론의 이해와 적용 / 성태제.*

성태제. (2009). *교육평가의 기초 = Educational Evaluation / 성태제 저.*

윤성이. (2006). 한국사회 이념갈등의 실체와 변화. *국가전략, 12*(4), 163-182.

이내영. (2011). 한국사회 이념갈등의 원인: 국민들의 양극화인가, 정치엘리트들의 양극화인가? *한국정당학회보, 10*(2), 251-287.

이재묵. (2013). 정당 양극화를 통해 바라본 한미 정당 비교. 한국정당학회 하계 학술회의 자료집.

임원혁, 이창근, 정세은, & 최동욱. (2019). 한국의 여론양극화 양상과 기제에 관한 연구. *한국개발연구원, 3.*

장승진, & 서정규. (2019). 당파적 양극화의 이원적 구조: 정치적 정체성, 정책선호, 그리고 정치적 세련도. *한국정당학회보, 18*(3), 5-29.

장승진, & 장한일. (2020). 당파적 양극화의 비정치적 효과. *한국정치학회보, 54*(5), 153-175.

정동준. (2016). 2016 년 국회의원 선거 이후 시민들의 통일의식 변화: 이념적 양극화인가, 당파적 편향인가?. *한국정치학회보, 50*(5), 131-161.

정동준. (2017). 한국 정치공간의 시민과 대표 간 이념적 일치: 개념화와 측정. *의정연구, 51*, 68.

정동준. (2018). 2018년 지방선거 이후 유권자들의 정치 양극화. *OUGHTOPIA The Journal of Social Paradigm Studies, 33*(3), 143-180.

최용주. (2008). 정치마케팅 관점에서의 정치광고에 관한 연구: 대통령선거 TV 정치광고를 중심으로. *한국광고홍보학보, 10*(1), 229-267.

한규섭, & 김상범. (2021). A First Look at the Rise of Elite Polarization in S. Korea. *한국개발연구원 국제정책대학원 2020-21 Korea-U.S. Policy Dialogue: Political Polarization 세미나 발제문.*

한규섭. (2021). 사회·정치적 양극단화와 언론의 책임. *언론중재, 159,* 28-35.

## 2. 영문


Abramowitz, A. I., & Saunders, K. L. (2008). Is polarization a myth?. *The Journal of Politics, 70*(2), 542-555.

Adams, J., & Merrill III, S. (2003). Voter turnout and candidate strategies in American elections. *The Journal of Politics, 65*(1), 161-189.

Adams, J. F., Merrill III, S., & Grofman, B. (2005). *A unified theory of party competition: A cross-national analysis integrating spatial and behavioral factors.* Cambridge University Press.

Aldrich, J. H. (1995). *Why parties?: The origin and transformation of political parties in America.* University of Chicago Press.

Aldrich, J. H. (2011). *Why Parties?: a second look.* University of Chicago Press.

Burden, B. C. (2004). Candidate positioning in US congressional elections. *British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211-227.

Calvert, R. L. (1985). Robustness of the multidimensional voting model: Candidate motivations, uncertainty, and convergence.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69-95.

Clements, D. H., Sarama, J. H., & Liu, X. H. (2008). Development of a measure of early mathematics achievement using the Rasch model: The Research-Based Early Maths Assessment. *Educational Psychology, 28*(4), 457-482.

Clinton, J., Jackman, S., & Rivers, D. (2004). The statistical analysis of roll call data.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98*(2), 355-370.

Conover, P. J., & Feldman, S. (1989). Candidate perception in an ambiguous world: Campaigns, cues, and inference processes.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912-940.

Cox, G. W. (1990). Centripetal and centrifugal incentives in electoral systems.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903-935.

Cox, G. W. (1997). *Making votes count: strategic coordination in the world's electoral systems.* Cambridge University Press.

Dalton, R. J. (2013). *Citizen politics: Public opinion and political parties in advanced industrial democracies.* Cq Press.

Downs, A. (1957). An economic theory of democracy.

Embretson, S. E., & Reise, S. P. (2000). Item response theory for psychologists. Maheah.

Fiorina, M. P., & Abrams, S. J. (2008). Political polarization in the American public. *Annu. Rev. Polit. Sci., 11*, 563-588.

Fiorina, M. P. (2017). *Unstable Majorities: Polarization, Party Sorting, and Political Stalemate.* Hoover Press.

Fleisher, R., & Bond, J. R. (2004). The shrinking middle in the US Congress. *British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429-451.

Hinich, M. J., & Ordeshook, P. C. (1970). Plurality maximization vs vote maximization: A spatial analysis with variable participation. *The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64*(3), 772-791.

Iyengar, S., Sood, G., & Lelkes, Y. (2012). Affect, not ideologya social identity perspective on polarization. *Public opinion quarterly, 76*(3), 405-431.

Iyengar, S., Konitzer, T., & Tedin, K. (2018). The home as a political fortress: Family agreement in an era of polarization. *The Journal of Politics*, *80*(4), 1326-1338.

Levendusky, M. (2009). *The partisan sort: How liberals became Democrats and conservatives became Republicans.* University of Chicago Press.

Long, C., Wendt, H., & Dunne, T. (2011). Applying Rasch measurement in mathematics education research: Steps towards a triangulated investigation into proficiency in the multiplicative conceptual field. *Educational Research and Evaluation, 17*(5), 387-407.

Macdonald, S. E., Listhaug, O., & Rabinowitz, G. (1991). Issues and party support in multiparty systems. *The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1107-1131.

McCarty, N., Poole, K. T., & Rosenthal, H. (2016). *Polarized America: The dance of ideology and unequal riches*. mit Press.

Moon, W. (2004). Party activists, campaign resources and candidate position taking: Theory, tests and applications. *British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611-633.

Neumann, I., Neumann, K., & Nehm, R. (2011). Evaluating instrument quality in science education: Rasch-based analyses of a nature of science test. *International Journal of Science Education, 33*(10), 1373-1405.

Page, B. I. (1978). Choices and echoes in presidential elections: Rational man and electoral democracy.

Palfrey, T. R. (1984). Spatial equilibrium with entry. *The Review of Economic Studies, 51*(1), 139-156.

Patterson, T. E. (1980). *The mass media election: How Americans choose their president*. Praeger.

Poole, K. T., & Rosenthal, H. (1984a). The polarization of American politics. *The journal of politics, 46*(4), 1061-1079.

Poole, K. T., & Rosenthal, H. (1984b). US presidential elections 1968-80: A spatial analysis.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282-312.

Poole, K. T., & Rosenthal, H. (1991). Patterns of congressional voting.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228-278.

Poole, K. T., & Rosenthal, H. (2000). Congress: A political-economic history of roll call voting. Oxford University Press on Demand.

Rabinowitz, G., & Macdonald, S. E. (1989). A directional theory of issue voting. *The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93-121.

Schofield, N. (2003). Valence competition in the spatial stochastic model. *Journal of Theoretical Politics*, 15(4), 371-383.

Schofield, N. (2006). Equilibria in the spatial stochastic model of voting with party activists. *Review of Economic Design, 10*(3), 183-203.

Shepsle, K. A. (1972). The strategy of ambiguity: Uncertainty and electoral competition.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66*(2), 555-568.

Sullivan, J. L., & Minns, D. R. (1976). Ideological distance between candidates: An empirical examination.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439-468.

Theriault, S. M. (2006). Party polarization in the US Congress: Member replacement and member adaptation. *Party Politics, 12*(4), 483-503.

Wittman, D. (1983). Candidate motivation: A synthesis of alternative theories. *The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142-157.

Wright, G. C., & Berkman, M. B. (1986). Candidates and policy in United States Senate elections. *The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567-588.

Wright, G. C. (1989). Policy voting in the US Senate: Who is Represented?. *Legislative Studies Quarterly*, 465-486.

Wright, G. C. (1994). The Meaning of 'Party'in Congressional Roll Call Voting. *In annual meeting of the Midwest Political Association, Chicago*.

# 부록

## 부록 1. 설문 문항 목록

<대선연구1 정책설문 문항>

### 제1장. 일반 정책 부문

**◈ 국정원 국내정보 수집 기능 찬반 ◈**

**문01.** 귀하께서는 국가정보원의 국내 정보 수집 업무 기능을 폐지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1번. 그렇다 2번. 아니다

**◈ 검찰 수사권 분리 찬반 ◈**

**문02.** 귀하께서는 검찰은 기소권만 가지고 수사권은 경찰에 줘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1번. 그렇다 2번. 아니다

### 제2장. 외교/안보 부문

**◈ 개성공단 즉각 재개 찬반 ◈**

**문03.** 귀하께서는 개성공단 운영을 즉각 재개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1번. 그렇다 2번. 아니다

**◈ 사드배치 추진 찬반 ◈**

**문04.** 귀하께서는 사드 배치를 계속 진행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1번. 그렇다 2번. 아니다

**◈ 위안부 합의 폐기 찬반 ◈**

**문05.** 귀하께서는 지난 2015년 체결한 일본과의 위안부 합의를 폐기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1번. 그렇다 2번. 아니다

**◈ 한국의 핵무장 찬반 ◈**

**문06.** 귀하께서는 우리나라가 북한의 미사일에 대응하기 위해 핵무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1번. 그렇다 2번. 아니다

**◈ 전시작전 통제권 즉각 환수 찬반 ◈**

**문07.** 귀하께서는 미군으로부터 전시작전통제권을 조기에 환수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1번. 그렇다 2번. 아니다

## 제3장. 경제 부문

**◈ 전경련 해체 찬반 ◈**

**문08.** 귀하께서는 전경련을 해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1번. 그렇다 2번. 아니다

**◈ 공무원 성과연봉제 확대 찬반 ◈**

**문09.** 귀하께서는 공무원의 성과 연봉제를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1번. 그렇다 2번. 아니다

**◈ 업무 능력/성과 기준 '일반해고제' 도입 찬반 ◈**

**문10.** 귀하께서는 업무능력이나 성과 등이 부진한 직원을 해고할 수 있는 일반해고를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1번. 그렇다 2번. 아니다

**◈ 법인세 인상 찬반 ◈**

**문11.** 귀하께서는 법인세를 인상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1번. 그렇다 2번. 아니다

**◈ 노조 임명 '노동이사제' 도입 찬반 ◈**

**문12.** 귀하께서는 노조에서 추천하는 이사를 임명하는 노동이사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1번. 그렇다 2번. 아니다

**◈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찬반 ◈**

**문13.** 귀하께서는 불법행위로 피해자에 손해를 입힌 기업에 발생 피해보다 더 많은 금액을 배상하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1번. 그렇다 2번. 아니다

**◈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인상 찬반 ◈**

**문14.** 귀하께서는 현재 시급 6,470원인 최저임금을 2020년까지 1만원까지 올려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1번. 그렇다 2번. 아니다

**◈ 정부예산 '장기연체 채무(생계형 부채) 탕감' 찬반 ◈**

**문15.** 귀하께서는 정부가 예산을 투입해 생계형 부채 등 장기 연체자의 채무를 탕감해주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번. 그렇다 2번. 아니다

**◈ 재벌 순환출자 금지 찬반 ◈**

**문16.** 귀하께서는 재벌개혁을 위해 순환출자를 금지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1번. 그렇다 2번. 아니다

## 제4장. 사회 부문

**◈ 원자력 발전소 의존도 인식 ◈**

**문17.** 귀하께서는 원자력 발전소의 의존도를 낮춰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현재 수준을 유지해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보기 1~2번 무작위 배열)

1번. 원자력 발전소의 의존도를 낮춰야 한다　2번. 원자력 발전소는 현 수준을 유지해도 괜찮다

**◈ 국가의 기본소득 보장 찬반 ◈**

**문18.** 귀하께서는 기본소득을 국가가 보장해줘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1번. 그렇다　2번. 아니다

**◈ 교육감 직선제 폐지 찬반 ◈**

**문19.** 귀하께서는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1번. 그렇다　2번. 아니다

**◈ 자사고/특목고 폐지 찬반 ◈**

**문20.** 귀하께서는 자사고 및 특목고(과학고, 영재고 제외)를 폐지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1번. 그렇다　2번. 아니다

**◈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 지지 여부 ◈**

**문21.** 귀하께서는 전교조를 합법화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보기 1~2번 무작위 배열)

1번. 그렇다　2번. 아니다

<대선연구2 정책설문 문항>

**C1. 귀하는 원자력 발전소의 의존도를 낮춰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현재 수준을 유지해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원자력 발전소의 의존도를 낮춰야 한다　　② 원자력 발전소는 현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

**C2. 귀하는 전교조를 합법화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합법화해야 한다　　② 합법화해서는 안된다

**C3. 귀하는 다음의 각 진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각 진술을 잘 읽어보시고 "그렇다"와 "아니다"로 말씀해 주십시오.**

| | 그렇다 | 아니다 |
|---|---|---|
| 1) 국가정보원의 국내 정보 수집 업무 기능을 폐지해야 한다 | ① | ② |
| 2) 사드 배치를 계속 진행해야 한다 | ① | ② |
| 3) 지난 2015년 체결한 일본과의 위안부 합의를 폐기해야 한다 | ① | ② |
| 4) 북한의 미사일에 대응하기 위해 핵무장을 해야 한다 | ① | ② |
| 5) 전경련을 해체해야 한다 | ① | ② |
| 6) 업무능력이나 성과 등이 부진한 직원을 해고할 수 있는 일반해고를 도입해야 한다 | ① | ② |
| 7) 법인세를 인상해야 한다 | ① | ② |
| 8) 노조에서 추천하는 이사를 임명하는 노동이사제를 도입해야 한다 | ① | ② |
| 9) 현재 시급 6,470원인 최저임금을 2020년까지 1만원까지 올려야 한다 | ① | ② |
| 10) 기본소득을 국가가 보장해줘야 한다 | ① | ② |
| 11) 공무원을 증원해야 한다 | ① | ② |
| 12) 자사고 및 특목고(과학고, 영재고 제외)를 폐지해야 한다 | ① | ② |

<지방선거연구 정책설문 문항>

## 제1장. 가치관 (경제)

**◈ 정부 기업규제 ◈**

PW_ECON_1) 귀하께서는 두 문장 중 어떤 문장이 더 귀하의 입장에 가깝다고 생각하십니까?

A. 정부의 기업 규제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

B. 정부의 기업 규제는 보통 해가 된다.

**◈ 정부 복지 ◈**

PW_ECON_2) 귀하께서는 두 문장 중 어떤 문장이 더 귀하의 입장에 가깝다고 생각하십니까?

A.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정부의 복지는 정부의 도움에 더 의존하게 만들기 때문에 해롭다.

B. 사람들은 자신들의 기초생활이 보장되기 전에는 가난에서 벗어날 수 없으므로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정부의 복지는 이롭다.

**◈ 한국 경제 체제 ◈**

PW_ECON_3) 귀하께서는 두 문장 중 어떤 문장이 더 귀하의 입장에 가깝다고 생각하십니까?

A. 한국의 경제 체제는 엘리트 계층의 이익에만 호의적이다.

B. 한국의 경제 체제는 대부분의 국민들에게 호의적이다.

## 제2장. 가치관(사회문화)

**◈ 이민자 증가 ◈**

PW_CUL_1) 귀하께서는 두 문장 중 어떤 문장이 더 귀하의 입장에 가깝다고 생각하십니까?

A. 이민자들의 수가 증가하면 한국 사회의 전통적 관습과 가치가 위협 받는다.

B. 이민자들의 수가 증가하면 한국 사회를 더 강하게 만든다.

**◈ 동성애 ◈**

PW_CUL_2) 귀하께서는 두 문장 중 어떤 문장이 더 귀하의 입장에 가깝다고 생각하십니까?

A. 우리 사회는 동성애를 받아들여야 한다.

B. 우리 사회는 동성애를 받아들여서는 안된다.

◈ **국가 안보 vs 사생활·자유** ◈

**PW_CUL_3)** 귀하께서는 두 문장 중 어떤 문장이 더 귀하의 입장에 가깝다고 생각하십니까?

A. 국가 안보를 위해 어느 정도 개인의 사생활과 자유를 포기할 필요가 있다.

B. 국가 안보를 위해 개인의 사생활과 자유를 포기해서는 안된다.

## 제3장. 정책 입장(전국)

◈ **토지공개념** ◈

**N1)** 귀하께서는 "토지공개념"을 헌법에 새롭게 포함하는 것에 찬성하십니까?

01번. 그렇다 02번. 아니다

◈ **포털사이트 댓글 규제** ◈

**N2)** 귀하께서는 포털 사이트 댓글을 법으로 규제하는 것에 찬성하십니까?

01번. 그렇다 02번. 아니다

◈ **특목고 폐지** ◈

**N3)** 귀하께서는 특목고 폐지에 찬성하십니까?

01번. 그렇다 02번. 아니다

◈ **최저임금 인상** ◈

**N4)** 귀하께서는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인상하는 현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찬성하십니까?

01번. 그렇다 02번. 아니다

◈ **국민건강보험 진료범위** ◈

**N5)** 귀하께서는 국가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진료 범위를 확대하는 것에 찬성하십니까?

01번. 그렇다 02번. 아니다

◈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

**N6)** 귀하께서는 2020년까지 공공부문 비정규직 20만 5000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현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찬성하십니까?

01번. 그렇다 02번. 아니다

◈ **가상화폐 규제** ◈

**N7)** 귀하께서는 국가가 가상화폐 거래를 규제하는 것에 찬성하십니까?

01번. 그렇다 02번. 아니다

◈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

**N8)** 귀하께서는 재건축을 통해 얻은 이익이 일정금액을 초과할 경우 이익금의 10~50%를 부담금으로 내도록 하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정책에 찬성하십니까?

01번. 그렇다 02번. 아니다

◈ **근로시간 단축** ◈

**N9)** 귀하께서는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근로기준법 정책에 찬성하십니까?

01번. 그렇다 02번. 아니다

◈ **노동이사제** ◈

**N10)** 귀하께서는 노조가 추천하는 노조임원 유경력자를 기업의 이사회에 의무적으로 포함하는 노동이사제에 찬성하십니까?

01번. 그렇다 02번. 아니다

◈ **공공기관 블라인드 채용** ◈

**N11)** 귀하께서는 공공기관 블라인드 채용에 찬성하십니까?

01번. 그렇다 02번. 아니다

◈ **양성평등 교육 의무화** ◈

**N12)** 귀하께서는 성차별 문화를 극복하기 위해 초·중·고 양성평등 교육을 의무화하는 것에 찬성하십니까?

01번. 그렇다 02번. 아니다

◈ **군 복무기간 단축** ◈

**N13)** 귀하께서는 군 복무기간을 단축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01번. 그렇다 02번. 아니다

◈ **주한미군 철수** ◈

**N14)** 귀하께서는 종전을 선언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면 주한미군이 한반도에서 철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01번. 그렇다 02번. 아니다

◈ **임신중절 허용** ◈

**N15)** 귀하께서는 임신중절(낙태)을 허용해야한다고 생각하십니까?

01번. 그렇다 02번. 아니다

◈ **청년수당 확대** ◈

**N16)** 귀하께서는 청년수당을 확대해야한다고 보십니까?

01번. 그렇다 02번. 아니다

◈ **차량 2부제 실시** ◈

**N17)** 귀하께서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차량 2부제를 실시하는 것이 실효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01번. 그렇다 02번. 아니다

◈ **국공립대 통합** ◈

**N18)** 귀하께서는 서울대를 포함한 모든 국공립대를 통합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01번. 그렇다 02번. 아니다

◈ **탈원전** ◈

**N19)** 귀하께서는 궁극적으로 탈원전을 해야한다고 생각하십니까?

01번. 그렇다 02번. 아니다

◈ **파주 제2 개성공단** ◈

**N20)** 귀하께서는 경기도 파주에 제2 개성공단을 만드는 것에 찬성하십니까?

01번. 그렇다 02번. 아니다

부록 2. 광역단체별 인구사회학적 특성

| | | 서울 | 부산 | 대구 | 인천 |
|---|---|---|---|---|---|
| 성별 | 남성 | 364(48.53%) | 366(48.8%) | 283(51.45%) | 274(49.82%) |
| | 여성 | 386(51.47%) | 384(51.2%) | 267(48.55%) | 276(50.18%) |
| 나이 | 20·30대 | 281(37.47%) | 263(35.07) | 208(37.82%) | 202(36.73%) |
| | 40·50대 | 286(38.13%) | 308(41.07%) | 250(45.46%) | 233(42.36%) |
| | 60대이상 | 183(24.4%) | 179(23.87%) | 92(16.73%) | 115(20.91%) |
| 소득수준 | 월 600만원 미만 | 526(70.13%) | 552(73.59%) | 427(77.64%) | 439(79.81%) |
| | 월 600만원 이상 | 224(29.87%) | 198(26.4%) | 123(22.36%) | 111(20.18%) |
| 교육수준 | 고등학교 졸업 이하 | 149(19.86%) | 192(25.6%) | 127(23.09%) | 162(29.45%) |
| | 대학교 재학 이상 | 601(80.13%) | 558(74.39%) | 423(76.91%) | 388(70.54%) |
| | N | 750 | 750 | 550 | 550 |
| | | 광주 | 대전 | 울산 | 경기 |
| 성별 | 남성 | 172(49.14%) | 181(51.71%) | 178(50.86%) | 376(50.13%) |
| | 여성 | 178(50.86%) | 169(48.29%) | 172(49.14%) | 374(49.87%) |
| 나이 | 20·30대 | 151(43.15%) | 141(40.29%) | 152(43.43%) | 274(36.53%) |
| | 40·50대 | 167(47.72%) | 159(45.42%) | 163(46.57%) | 316(42.13%) |
| | 60대이상 | 32(9.14%) | 50(14.29%) | 35(10%) | 160(21.33%) |
| 소득수준 | 월 600만원 미만 | 264(75.44%) | 264(75.43%) | 264(75.43%) | 578(77.08%) |
| | 월 600만원 이상 | 86(24.57%) | 86(24.57%) | 86(24.57%) | 172(22.93%) |
| 교육수준 | 고등학교 졸업 이하 | 62(17.72%) | 59(16.86%) | 96(27.43%) | 196(26.13%) |
| | 대학교 재학 이상 | 288(82.29%) | 291(83.18%) | 254(72.57%) | 554(73.86%) |
| | N | 350 | 350 | 350 | 750 |

| | | 강원 | 충북 | 충남 | 전북 |
|---|---|---|---|---|---|
| 성별 | 남성 | 175(50%) | 189(54%) | 290(52.73%) | 177(50.57%) |
| | 여성 | 175(50%) | 161(46%) | 260(47.27%) | 173(49.43%) |
| 나이 | 20·30대 | 147(42%) | 161(46%) | 275(50%) | 139(39.71%) |
| | 40·50대 | 165(47.15%) | 156(44.57%) | 234(42.55%) | 164(46.85%) |
| | 60대이상 | 38(10.86%) | 33(9.43%) | 41(7.45%) | 47(13.43%) |
| 소득수준 | 월 600만원 미만 | 269(76.86%) | 277(79.13%) | 434(78.91%) | 277(79.14%) |
| | 월 600만원 이상 | 81(23.14%) | 73(20.86%) | 116(21.09%) | 73(20.86%) |
| 교육수준 | 고등학교 졸업 이하 | 93(26.57%) | 83(23.71%) | 154(28%) | 96(27.43%) |
| | 대학교 재학 이상 | 257(73.43%) | 267(76.29%) | 396(71.99%) | 254(72.57%) |
| | N | 350 | 350 | 550 | 350 |

| | | 전남 | 경북 | 경남 | 제주 |
|---|---|---|---|---|---|
| 성별 | 남성 | 163(46.57%) | 289(52.55%) | 392(52.27%) | 171(48.86%) |
| | 여성 | 187(53.43%) | 261(47.45%) | 358(47.73%) | 179(51.14%) |
| 나이 | 20·30대 | 160(45.71%) | 247(44.91%) | 320(42.67%) | 172(49.14%) |
| | 40·50대 | 157(44.86%) | 253(46%) | 348(46.4%) | 151(43.13%) |
| | 60대이상 | 33(9.43%) | 50(9.09%) | 82(10.93%) | 27(7.71%) |
| 소득수준 | 월 600만원 미만 | 290(82.86%) | 454(82.53%) | 604(80.53%) | 280(80%) |
| | 월 600만원 이상 | 60(17.14%) | 96(17.45%) | 146(19.47%) | 70(20%) |
| 교육수준 | 고등학교 졸업 이하 | 90(25.71%) | 163(29.64%) | 223(29.74%) | 70(20%) |
| | 대학교 재학 이상 | 260(74.29%) | 387(70.36%) | 527(70.26%) | 280(80%) |
| | N | 350 | 550 | 750 | 350 |

## 부록 3. 대통령선거 후보별 정책입장

| | 문재인<br>(더불어민주당) | 홍준표<br>(자유한국당) | 안철수<br>(국민의당) | 유승민<br>(바른정당) | 심상정<br>(정의당) |
|---|---|---|---|---|---|
| 개성공단 즉각 재개 | 찬성 | 반대 | 반대 | 반대 | 찬성 |
| 사드 배치 추진 | 반대 | 찬성 | 찬성 | 찬성 | 반대 |
| 한·일 위안부 합의 폐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한국의 핵무장 | 반대 | 찬성 | 반대 | 반대 | 반대 |
| 전시작전권 조기 전환 | 찬성 | 반대 | 반대 | 반대 | 찬성 |
| 전경련 해체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공무원 성과연봉제 확대 | 반대 | 찬성 | 반대 | 반대 | 반대 |
| 일반해고제 도입 | 반대 | 찬성 | 반대 | 찬성 | 반대 |
| 법인세 인상 | 찬성 | 반대 | 찬성 | 찬성 | 찬성 |
| 노동이사제 도입 | 찬성 | 반대 | 찬성 | 반대 | 찬성 |
|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최저임금 1만원으로 인상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생계형 부채 탕감 | 찬성 | 찬성 | 반대 | 반대 | 찬성 |
| 재벌 순환출자 금지 | 찬성 | 찬성 | 반대 | 찬성 | 찬성 |
| 원자력 발전소 의존도 축소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기본소득 보장 | 찬성 | 찬성 | 반대 | 반대 | 찬성 |
| 교육감 직선제 폐지 | 반대 | 찬성 | 반대 | 반대 | 반대 |
| 자사고 특목고 폐지 | 찬성 | 찬성 | 반대 | 찬성 | 찬성 |
| 전교조 합법화 | 찬성 | 반대 | 찬성 | 반대 | 찬성 |
| 국정원 국내기능 폐지 | 찬성 | 반대 | 찬성 | 반대 | 찬성 |
| 검찰 수사권 분리 | 찬성 | 찬성 | 찬성 | 반대 | 찬성 |

## 부록 4. 제7회 지방선거 후보별 정책입장
## (서울)

| | 더불어민주당 | 자유한국당 | 바른미래당 | 정의당 |
|---|---|---|---|---|
| 정부 기업 규제 | 찬성 | 반대 | 반대 | 찬성 |
| 정부 복지 정책 | 반대 | 반대 | 반대 | 반대 |
| 한국 경제체제의 불공정 여부 | 무응답 | 반대 | 찬성 | 찬성 |
| 이민자 증가 | 반대 | 반대 | 반대 | 반대 |
| 동성애 수용 | 무응답 | 반대 | 반대 | 찬성 |
| 국가 안보 > 개인의 사생활 | 반대 | 찬성 | 찬성 | 반대 |
| 토지 공개념 헌법화 | 찬성 | 반대 | 반대 | 찬성 |
| 포털사이트 댓글 규제 | 찬성 | 찬성 | 찬성 | 반대 |
| 특목고 폐지 | 찬성 | 반대 | 반대 | 찬성 |
| 최저임금 인상 | 찬성 | 반대 | 반대 | 찬성 |
| 국민건강보험 진료범위 확대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 찬성 | 반대 | 찬성 | 찬성 |
| 가상화폐 규제 | 찬성 | 반대 | 반대 | 찬성 |
| 재건축 추가이익 환수 | 찬성 | 반대 | 찬성 | 찬성 |
| 근로시간 단축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노동이사제 도입 | 찬성 | 반대 | 반대 | 찬성 |
| 공공기관 블라인드 채용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양성평등 교육 의무화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군 복무기간 단축 | 찬성 | 반대 | 반대 | 찬성 |
| 주한미군 철수 | 반대 | 반대 | 반대 | 찬성 |
| 낙태 허용 | 반대 | 반대 | 반대 | 찬성 |
| 청년수당 확대 | 찬성 | 반대 | 반대 | 찬성 |
| 차량 2부제 실시 | 찬성 | 반대 | 찬성 | 찬성 |
| 국공립태 통합 | 찬성 | 반대 | 반대 | 찬성 |
| 탈원전 | 찬성 | 반대 | 찬성 | 찬성 |
| 파주 제2개성공단 설립 | 찬성 | 찬성 | 반대 | 찬성 |
| 재건축 규제 강화 | 찬성 | 반대 | 찬성 | 찬성 |
| 청년임대 주택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임대료 인상 제한 및 임대기간 연장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주요도심권 내 교통공간 재편 | 찬성 | 반대 | 반대 | 찬성 |
| 수도 조항 개성 신설 | 무응답 | 반대 | 찬성 | 찬성 |

**(부산)**

| | 더불어민주당 | 자유한국당 | 바른미래당 | 정의당 |
|---|---|---|---|---|
| 정부 기업 규제 | 반대 | 반대 | 찬성 | 찬성 |
| 정부 복지 정책 | 반대 | 무응답 | 반대 | 반대 |
| 한국 경제체제의 불공정 여부 | 찬성 | 반대 | 찬성 | 찬성 |
| 이민자 증가 | 반대 | 반대 | 찬성 | 반대 |
| 동성애 수용 | 반대 | 무응답 | 찬성 | 찬성 |
| 국가 안보 > 개인의 사생활 | 찬성 | 찬성 | 반대 | 찬성 |
| 토지 공개념 헌법화 | 찬성 | 반대 | 반대 | 찬성 |
| 포털사이트 댓글 규제 | 찬성 | 찬성 | 반대 | 반대 |
| 특목고 폐지 | 찬성 | 반대 | 찬성 | 찬성 |
| 최저임금 인상 | 찬성 | 반대 | 반대 | 찬성 |
| 국민건강보험 진료범위 확대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 찬성 | 반대 | 반대 | 찬성 |
| 가상화폐 규제 | 찬성 | 반대 | 반대 | 찬성 |
| 재건축 추가이익 환수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근로시간 단축 | 찬성 | 반대 | 찬성 | 찬성 |
| 노동이사제 도입 | 찬성 | 반대 | 반대 | 찬성 |
| 공공기관 블라인드 채용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양성평등 교육 의무화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군 복무기간 단축 | 찬성 | 반대 | 찬성 | 찬성 |
| 주한미군 철수 | 찬성 | 반대 | 반대 | 찬성 |
| 낙태 허용 | 찬성 | 반대 | 찬성 | 찬성 |
| 청년수당 확대 | 찬성 | 찬성 | 반대 | 찬성 |
| 차량 2부제 실시 | 반대 | 반대 | 찬성 | 찬성 |
| 국공립태 통합 | 무응답 | 찬성 | 찬성 | 찬성 |
| 탈원전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파주 제2개성공단 설립 | 찬성 | 반대 | 찬성 | 찬성 |
| 가덕도 신공항 건설 재추진 | 찬성 | 반대 | 반대 | 반대 |
| 버스중앙차로제 확대 | 반대 | 찬성 | 반대 | 찬성 |
| 기장지역 수돗물 산업단지 공급 | 반대 | 찬성 | 반대 | 반대 |
| 원도심 통합 계획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침례병원 공공병원 전환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대구)

| | 더불어민주당 | 자유한국당 | 바른미래당 |
|---|---|---|---|
| 정부 기업 규제 | 찬성 | 반대 | 찬성 |
| 정부 복지 정책 | 반대 | 반대 | 반대 |
| 한국 경제체제의 불공정 여부 | 찬성 | 반대 | 찬성 |
| 이민자 증가 | 반대 | 반대 | 반대 |
| 동성애 수용 | 반대 | 반대 | 찬성 |
| 국가 안보 > 개인의 사생활 | 찬성 | 찬성 | 찬성 |
| 토지 공개념 헌법화 | 찬성 | 반대 | 찬성 |
| 포털사이트 댓글 규제 | 반대 | 찬성 | 반대 |
| 특목고 폐지 | 찬성 | 반대 | 반대 |
| 최저임금 인상 | 찬성 | 반대 | 반대 |
| 국민건강보험 진료범위 확대 | 찬성 | 찬성 | 찬성 |
|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 찬성 | 찬성 | 반대 |
| 가상화폐 규제 | 찬성 | 찬성 | 찬성 |
| 재건축 추가이익 환수 | 찬성 | 찬성 | 찬성 |
| 근로시간 단축 | 찬성 | 반대 | 찬성 |
| 노동이사제 도입 | 찬성 | 반대 | 찬성 |
| 공공기관 블라인드 채용 | 찬성 | 찬성 | 찬성 |
| 양성평등 교육 의무화 | 찬성 | 찬성 | 찬성 |
| 군 복무기간 단축 | 찬성 | 반대 | 반대 |
| 주한미군 철수 | 반대 | 반대 | 반대 |
| 낙태 허용 | 찬성 | 반대 | 찬성 |
| 청년수당 확대 | 찬성 | 반대 | 찬성 |
| 차량 2부제 실시 | 찬성 | 반대 | 반대 |
| 국공립태 통합 | 반대 | 반대 | 반대 |
| 탈원전 | 찬성 | 반대 | 찬성 |
| 파주 제2개성공단 설립 | 찬성 | 찬성 | 찬성 |
| K2 공군기지·대구민간공항 통합 이전 | 반대 | 찬성 | 반대 |
| 달빛동맹 확대 | 찬성 | 찬성 | 찬성 |
| 도시철도 4호선 트램 건설 | 반대 | 찬성 | 반대 |
| 대구시 청사 이전 | 반대 | 무응답 | 반대 |
| 4대강 사업 댐·보 해체 | 찬성 | 반대 | 찬성 |

**(인천)**

| | 더불어민주당 | 자유한국당 | 바른미래당 | 정의당 |
|---|---|---|---|---|
| 정부 기업 규제 | 무응답 | 반대 | 찬성 | 찬성 |
| 정부 복지 정책 | 무응답 | 반대 | 반대 | 반대 |
| 한국 경제체제의 불공정 여부 | 무응답 | 반대 | 찬성 | 찬성 |
| 이민자 증가 | 무응답 | 찬성 | 찬성 | 반대 |
| 동성애 수용 | 무응답 | 반대 | 반대 | 찬성 |
| 국가 안보 > 개인의 사생활 | 무응답 | 찬성 | 찬성 | 반대 |
| 토지 공개념 헌법화 | 무응답 | 반대 | 찬성 | 찬성 |
| 포털사이트 댓글 규제 | 무응답 | 찬성 | 찬성 | 반대 |
| 특목고 폐지 | 무응답 | 반대 | 찬성 | 찬성 |
| 최저임금 인상 | 무응답 | 반대 | 반대 | 찬성 |
| 국민건강보험 진료범위 확대 | 무응답 | 찬성 | 찬성 | 찬성 |
|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 무응답 | 반대 | 반대 | 찬성 |
| 가상화폐 규제 | 무응답 | 찬성 | 찬성 | 찬성 |
| 재건축 추가이익 환수 | 무응답 | 찬성 | 찬성 | 찬성 |
| 근로시간 단축 | 무응답 | 반대 | 찬성 | 찬성 |
| 노동이사제 도입 | 무응답 | 반대 | 찬성 | 찬성 |
| 공공기관 블라인드 채용 | 무응답 | 찬성 | 찬성 | 찬성 |
| 양성평등 교육 의무화 | 무응답 | 찬성 | 찬성 | 찬성 |
| 군 복무기간 단축 | 무응답 | 반대 | 반대 | 찬성 |
| 주한미군 철수 | 무응답 | 반대 | 반대 | 찬성 |
| 낙태 허용 | 무응답 | 반대 | 찬성 | 찬성 |
| 청년수당 확대 | 무응답 | 찬성 | 찬성 | 찬성 |
| 차량 2부제 실시 | 무응답 | 찬성 | 찬성 | 찬성 |
| 국공립태 통합 | 무응답 | 반대 | 반대 | 찬성 |
| 탈원전 | 무응답 | 반대 | 찬성 | 찬성 |
| 파주 제2개성공단 설립 | 무응답 | 반대 | 찬성 | 찬성 |
| 인천한 입항 제한 | 무응답 | 찬성 | 반대 | 찬성 |
| 매립지 소유권 및 공사 관할권 이전 | 무응답 | 찬성 | 반대 | 반대 |
| 송도 부지 공급 | 무응답 | 찬성 | 찬성 | 반대 |
| 서해평화수역 | 무응답 | 찬성 | 찬성 | 찬성 |
| 원도심 활성화 예산 투입 | 무응답 | 찬성 | 찬성 | 찬성 |

**(광주)**

| | 더불어민주당 | 바른미래당 | 정의당 |
|---|---|---|---|
| 정부 기업 규제 | 무응답 | 무응답 | 찬성 |
| 정부 복지 정책 | 무응답 | 무응답 | 반대 |
| 한국 경제체제의 불공정 여부 | 무응답 | 무응답 | 찬성 |
| 이민자 증가 | 무응답 | 무응답 | 반대 |
| 동성애 수용 | 무응답 | 무응답 | 찬성 |
| 국가 안보 > 개인의 사생활 | 무응답 | 무응답 | 반대 |
| 토지 공개념 헌법화 | 무응답 | 무응답 | 찬성 |
| 포털사이트 댓글 규제 | 무응답 | 무응답 | 찬성 |
| 특목고 폐지 | 무응답 | 무응답 | 찬성 |
| 최저임금 인상 | 무응답 | 무응답 | 찬성 |
| 국민건강보험 진료범위 확대 | 무응답 | 무응답 | 찬성 |
|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 무응답 | 무응답 | 찬성 |
| 가상화폐 규제 | 무응답 | 무응답 | 찬성 |
| 재건축 추가이익 환수 | 무응답 | 무응답 | 찬성 |
| 근로시간 단축 | 무응답 | 무응답 | 찬성 |
| 노동이사제 도입 | 무응답 | 무응답 | 찬성 |
| 공공기관 블라인드 채용 | 무응답 | 무응답 | 찬성 |
| 양성평등 교육 의무화 | 무응답 | 무응답 | 찬성 |
| 군 복무기간 단축 | 무응답 | 무응답 | 찬성 |
| 주한미군 철수 | 무응답 | 무응답 | 찬성 |
| 낙태 허용 | 무응답 | 무응답 | 찬성 |
| 청년수당 확대 | 무응답 | 무응답 | 찬성 |
| 차량 2부제 실시 | 무응답 | 무응답 | 찬성 |
| 국공립태 통합 | 무응답 | 무응답 | 찬성 |
| 탈원전 | 무응답 | 무응답 | 찬성 |
| 파주 제2개성공단 설립 | 무응답 | 무응답 | 찬성 |
|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사업비 증액 | 무응답 | 무응답 | 찬성 |
| 광주역 운영 | 무응답 | 무응답 | 반대 |
| 광주 공항 이전 | 무응답 | 무응답 | 찬성 |
| 달빛동맹 확대 | 무응답 | 무응답 | 찬성 |
| 기아자동차 광주공장 이전 | 무응답 | 무응답 | 반대 |

**(대전)**

| | 더불어민주당 | 자유한국당 | 바른미래당 | 정의당 |
|---|---|---|---|---|
| 정부 기업 규제 | 무응답 | 무응답 | 반대 | 찬성 |
| 정부 복지 정책 | 반대 | 반대 | 반대 | 반대 |
| 한국 경제체제의 불공정 여부 | 무응답 | 무응답 | 찬성 | 찬성 |
| 이민자 증가 | 무응답 | 반대 | 반대 | 반대 |
| 동성애 수용 | 무응답 | 반대 | 반대 | 찬성 |
| 국가 안보 > 개인의 사생활 | 반대 | 찬성 | 찬성 | 반대 |
| 토지 공개념 헌법화 | 찬성 | 반대 | 반대 | 찬성 |
| 포털사이트 댓글 규제 | 반대 | 찬성 | 찬성 | 반대 |
| 특목고 폐지 | 무응답 | 반대 | 반대 | 찬성 |
| 최저임금 인상 | 찬성 | 반대 | 반대 | 찬성 |
| 국민건강보험 진료범위 확대 | 찬성 | 찬성 | 반대 | 찬성 |
|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 찬성 | 찬성 | 반대 | 찬성 |
| 가상화폐 규제 | 무응답 | 찬성 | 반대 | 찬성 |
| 재건축 추가이익 환수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근로시간 단축 | 찬성 | 찬성 | 반대 | 찬성 |
| 노동이사제 도입 | 찬성 | 반대 | 반대 | 찬성 |
| 공공기관 블라인드 채용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양성평등 교육 의무화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군 복무기간 단축 | 찬성 | 찬성 | 반대 | 찬성 |
| 주한미군 철수 | 무응답 | 반대 | 반대 | 찬성 |
| 낙태 허용 | 무응답 | 찬성 | 반대 | 찬성 |
| 청년수당 확대 | 찬성 | 찬성 | 반대 | 찬성 |
| 차량 2부제 실시 | 찬성 | 반대 | 반대 | 찬성 |
| 국공립태 통합 | 반대 | 찬성 | 반대 | 찬성 |
| 탈원전 | 무응답 | 반대 | 반대 | 찬성 |
| 파주 제2개성공단 설립 | 무응답 | 찬성 | 찬성 | 찬성 |
| 도시철도 2호선 트램 | 찬성 | 반대 | 반대 | 반대 |
| 공공 임대아파트 건설 | 반대 | 반대 | 반대 | 찬성 |
| 수도 이전 헌법 개정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마권발매소 폐쇄 | 찬성 | 반대 | 찬성 | 찬성 |
| 도안호수공원 | 무응답 | 찬성 | 반대 | 반대 |

**(울산)**

| | 더불어민주당 | 자유한국당 | 바른미래당 |
|---|---|---|---|
| 정부 기업 규제 | 찬성 | 반대 | 찬성 |
| 정부 복지 정책 | 반대 | 반대 | 반대 |
| 한국 경제체제의 불공정 여부 | 찬성 | 반대 | 찬성 |
| 이민자 증가 | 반대 | 반대 | 반대 |
| 동성애 수용 | 무응답 | 반대 | 찬성 |
| 국가 안보 > 개인의 사생활 | 찬성 | 찬성 | 반대 |
| 토지 공개념 헌법화 | 찬성 | 반대 | 찬성 |
| 포털사이트 댓글 규제 | 찬성 | 찬성 | 반대 |
| 특목고 폐지 | 찬성 | 반대 | 찬성 |
| 최저임금 인상 | 찬성 | 반대 | 찬성 |
| 국민건강보험 진료범위 확대 | 찬성 | 찬성 | 찬성 |
|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 찬성 | 찬성 | 찬성 |
| 가상화폐 규제 | 찬성 | 찬성 | 찬성 |
| 재건축 추가이익 환수 | 찬성 | 반대 | 찬성 |
| 근로시간 단축 | 찬성 | 찬성 | 찬성 |
| 노동이사제 도입 | 찬성 | 반대 | 찬성 |
| 공공기관 블라인드 채용 | 찬성 | 반대 | 찬성 |
| 양성평등 교육 의무화 | 찬성 | 찬성 | 찬성 |
| 군 복무기간 단축 | 찬성 | 반대 | 찬성 |
| 주한미군 철수 | 반대 | 반대 | 찬성 |
| 낙태 허용 | 반대 | 반대 | 찬성 |
| 청년수당 확대 | 찬성 | 찬성 | 찬성 |
| 차량 2부제 실시 | 찬성 | 반대 | 찬성 |
| 국공립태 통합 | 찬성 | 반대 | 찬성 |
| 탈원전 | 찬성 | 찬성 | 찬성 |
| 파주 제2개성공단 설립 | 찬성 | 찬성 | 찬성 |
| 태화강 정원박람회 개최 | 찬성 | 찬성 | 반대 |
| 트램 도입 | 찬성 | 찬성 | 반대 |
| 해상풍력 발전단지 | 찬성 | 찬성 | 반대 |
| 울산국립병원 설립 | 찬성 | 반대 | 찬성 |
| 영남알프스 케이블카 건설 | 반대 | 찬성 | 반대 |

(경기)

| | 더불어민주당 | 자유한국당 | 바른미래당 | 정의당 |
|---|---|---|---|---|
| 정부 기업 규제 | 찬성 | 찬성 | 무응답 | 찬성 |
| 정부 복지 정책 | 반대 | 무응답 | 무응답 | 반대 |
| 한국 경제체제의 불공정 여부 | 찬성 | 반대 | 무응답 | 찬성 |
| 이민자 증가 | 무응답 | 반대 | 무응답 | 반대 |
| 동성애 수용 | 무응답 | 무응답 | 무응답 | 찬성 |
| 국가 안보 > 개인의 사생활 | 무응답 | 찬성 | 무응답 | 반대 |
| 토지 공개념 헌법화 | 찬성 | 반대 | 무응답 | 찬성 |
| 포털사이트 댓글 규제 | 반대 | 반대 | 무응답 | 반대 |
| 특목고 폐지 | 찬성 | 찬성 | 무응답 | 찬성 |
| 최저임금 인상 | 찬성 | 반대 | 무응답 | 찬성 |
| 국민건강보험 진료범위 확대 | 찬성 | 찬성 | 무응답 | 찬성 |
|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 찬성 | 무응답 | 무응답 | 찬성 |
| 가상화폐 규제 | 찬성 | 반대 | 무응답 | 반대 |
| 재건축 추가이익 환수 | 찬성 | 찬성 | 무응답 | 찬성 |
| 근로시간 단축 | 찬성 | 찬성 | 무응답 | 찬성 |
| 노동이사제 도입 | 찬성 | 찬성 | 무응답 | 찬성 |
| 공공기관 블라인드 채용 | 찬성 | 찬성 | 무응답 | 찬성 |
| 양성평등 교육 의무화 | 찬성 | 찬성 | 무응답 | 찬성 |
| 군 복무기간 단축 | 찬성 | 무응답 | 무응답 | 찬성 |
| 주한미군 철수 | 무응답 | 반대 | 무응답 | 찬성 |
| 낙태 허용 | 무응답 | 무응답 | 무응답 | 찬성 |
| 청년수당 확대 | 찬성 | 찬성 | 무응답 | 찬성 |
| 차량 2부제 실시 | 찬성 | 찬성 | 무응답 | 찬성 |
| 국공립태 통합 | 찬성 | 찬성 | 무응답 | 찬성 |
| 탈원전 | 찬성 | 찬성 | 무응답 | 찬성 |
| 파주 제2개성공단 설립 | 찬성 | 찬성 | 무응답 | 찬성 |
| 경기도 분리 | 찬성 | 반대 | 무응답 | 반대 |
| 광역버스 준공영제 | 반대 | 찬성 | 무응답 | 찬성 |
| 보편적 청년복지 | 찬성 | 반대 | 무응답 | 찬성 |
| 무상교복 사업 | 찬성 | 찬성 | 무응답 | 찬성 |
| 통일경제특별구역 | 찬성 | 찬성 | 무응답 | 찬성 |

**(강원)**

| | 더불어민주당 | 자유한국당 |
|---|---|---|
| 정부 기업 규제 | 찬성 | 찬성 |
| 정부 복지 정책 | 반대 | 반대 |
| 한국 경제체제의 불공정 여부 | 찬성 | 찬성 |
| 이민자 증가 | 반대 | 찬성 |
| 동성애 수용 | 무응답 | 반대 |
| 국가 안보 > 개인의 사생활 | 찬성 | 반대 |
| 토지 공개념 헌법화 | 찬성 | 반대 |
| 포털사이트 댓글 규제 | 반대 | 찬성 |
| 특목고 폐지 | 찬성 | 반대 |
| 최저임금 인상 | 찬성 | 반대 |
| 국민건강보험 진료범위 확대 | 찬성 | 반대 |
|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 찬성 | 반대 |
| 가상화폐 규제 | 무응답 | 반대 |
| 재건축 추가이익 환수 | 찬성 | 반대 |
| 근로시간 단축 | 찬성 | 반대 |
| 노동이사제 도입 | 찬성 | 반대 |
| 공공기관 블라인드 채용 | 찬성 | 찬성 |
| 양성평등 교육 의무화 | 찬성 | 찬성 |
| 군 복무기간 단축 | 찬성 | 찬성 |
| 주한미군 철수 | 찬성 | 반대 |
| 낙태 허용 | 찬성 | 찬성 |
| 청년수당 확대 | 찬성 | 반대 |
| 차량 2부제 실시 | 찬성 | 찬성 |
| 국공립태 통합 | 찬성 | 반대 |
| 탈원전 | 찬성 | 반대 |
| 파주 제2개성공단 설립 | 찬성 | 반대 |
| 열병합 발전소 건설 | 반대 | 반대 |
| 캠프페이지 부지 공원화 | 찬성 | 반대 |
| 군부대 위수지역 폐지 | 찬성 | 반대 |
| 철원평화산업단지 | 찬성 | 반대 |
| 2021동계아시안게임 유치 | 찬성 | 반대 |

**(충북)**

| | 더불어민주당 | 자유한국당 | 바른미래당 |
|---|---|---|---|
| 정부 기업 규제 | 무응답 | 찬성 | 반대 |
| 정부 복지 정책 | 무응답 | 반대 | 반대 |
| 한국 경제체제의 불공정 여부 | 무응답 | 찬성 | 찬성 |
| 이민자 증가 | 무응답 | 반대 | 찬성 |
| 동성애 수용 | 무응답 | 반대 | 반대 |
| 국가 안보 > 개인의 사생활 | 무응답 | 찬성 | 찬성 |
| 토지 공개념 헌법화 | 무응답 | 찬성 | 반대 |
| 포털사이트 댓글 규제 | 무응답 | 반대 | 반대 |
| 특목고 폐지 | 무응답 | 반대 | 반대 |
| 최저임금 인상 | 무응답 | 찬성 | 반대 |
| 국민건강보험 진료범위 확대 | 무응답 | 찬성 | 찬성 |
|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 무응답 | 반대 | 반대 |
| 가상화폐 규제 | 무응답 | 반대 | 찬성 |
| 재건축 추가이익 환수 | 무응답 | 찬성 | 반대 |
| 근로시간 단축 | 무응답 | 찬성 | 반대 |
| 노동이사제 도입 | 무응답 | 반대 | 찬성 |
| 공공기관 블라인드 채용 | 무응답 | 찬성 | 찬성 |
| 양성평등 교육 의무화 | 무응답 | 찬성 | 찬성 |
| 군 복무기간 단축 | 무응답 | 반대 | 반대 |
| 주한미군 철수 | 무응답 | 반대 | 찬성 |
| 낙태 허용 | 무응답 | 반대 | 반대 |
| 청년수당 확대 | 무응답 | 찬성 | 찬성 |
| 차량 2부제 실시 | 무응답 | 찬성 | 찬성 |
| 국공립태 통합 | 무응답 | 반대 | 반대 |
| 탈원전 | 무응답 | 찬성 | 찬성 |
| 파주 제2개성공단 설립 | 무응답 | 찬성 | 반대 |
| 행복씨앗학교 예산 복구 | 무응답 | 반대 | 반대 |
| 강호축 개발 | 무응답 | 반대 | 찬성 |
| 청주공항 예산 지원 | 무응답 | 찬성 | 찬성 |
| 꽃 대궐 프로젝트 | 무응답 | 찬성 | 반대 |
| 예방적 살처분 | 무응답 | 찬성 | 찬성 |

**(충남)**

| | 더불어민주당 | 자유한국당 |
|---|---|---|
| 정부 기업 규제 | 찬성 | 반대 |
| 정부 복지 정책 | 반대 | 반대 |
| 한국 경제체제의 불공정 여부 | 찬성 | 찬성 |
| 이민자 증가 | 반대 | 찬성 |
| 동성애 수용 | 반대 | 반대 |
| 국가 안보 > 개인의 사생활 | 찬성 | 찬성 |
| 토지 공개념 헌법화 | 찬성 | 반대 |
| 포털사이트 댓글 규제 | 반대 | 찬성 |
| 특목고 폐지 | 찬성 | 찬성 |
| 최저임금 인상 | 찬성 | 반대 |
| 국민건강보험 진료범위 확대 | 찬성 | 찬성 |
|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 찬성 | 찬성 |
| 가상화폐 규제 | 찬성 | 반대 |
| 재건축 추가이익 환수 | 찬성 | 찬성 |
| 근로시간 단축 | 찬성 | 찬성 |
| 노동이사제 도입 | 찬성 | 반대 |
| 공공기관 블라인드 채용 | 찬성 | 찬성 |
| 양성평등 교육 의무화 | 찬성 | 찬성 |
| 군 복무기간 단축 | 찬성 | 찬성 |
| 주한미군 철수 | 반대 | 반대 |
| 낙태 허용 | 반대 | 찬성 |
| 청년수당 확대 | 찬성 | 찬성 |
| 차량 2부제 실시 | 반대 | 찬성 |
| 국공립태 통합 | 찬성 | 반대 |
| 탈원전 | 찬성 | 반대 |
| 파주 제2개성공단 설립 | 찬성 | 반대 |
| 수도 이전 헌법 개정 | 찬성 | 반대 |
| 친환경발전소 전환 | 찬성 | 반대 |
| 무상급식 확대 | 찬성 | 찬성 |
| 70세 이상 버스 전면 무료화 | 찬성 | 반대 |
| 충남 인권조례 폐지 | 반대 | 찬성 |

**(전북)**

| | 더불어민주당 | 자유한국당 | 민주평화당 | 정의당 |
|---|---|---|---|---|
| 정부 기업 규제 | 반대 | 찬성 | 찬성 | 찬성 |
| 정부 복지 정책 | 반대 | 반대 | 반대 | 반대 |
| 한국 경제체제의 불공정 여부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이민자 증가 | 반대 | 찬성 | 반대 | 반대 |
| 동성애 수용 | 무응답 | 찬성 | 찬성 | 찬성 |
| 국가 안보 > 개인의 사생활 | 반대 | 반대 | 반대 | 반대 |
| 토지 공개념 헌법화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포털사이트 댓글 규제 | 반대 | 찬성 | 반대 | 반대 |
| 특목고 폐지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최저임금 인상 | 찬성 | 반대 | 찬성 | 찬성 |
| 국민건강보험 진료범위 확대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 찬성 | 반대 | 찬성 | 찬성 |
| 가상화폐 규제 | 반대 | 반대 | 찬성 | 찬성 |
| 재건축 추가이익 환수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근로시간 단축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노동이사제 도입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공공기관 블라인드 채용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양성평등 교육 의무화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군 복무기간 단축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주한미군 철수 | 반대 | 반대 | 찬성 | 찬성 |
| 낙태 허용 | 반대 | 반대 | 찬성 | 찬성 |
| 청년수당 확대 | 반대 | 찬성 | 찬성 | 찬성 |
| 차량 2부제 실시 | 반대 | 찬성 | 찬성 | 반대 |
| 국공립태 통합 | 반대 | 찬성 | 찬성 | 찬성 |
| 탈원전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파주 제2개성공단 설립 | 찬성 | 찬성 | 반대 | 찬성 |
| KTX전북혁신도시역 | 무응답 | 반대 | 무응답 | 반대 |
| 새만금신공항 | 찬성 | 찬성 | 반대 | 반대 |
| 전주 종합경기장 부지 | 반대 | 찬성 | 찬성 | 찬성 |
| 대한방직 공장 부지 | 무응답 | 반대 | 반대 | 반대 |
| 해외 자동차업체 매각 | 찬성 | 찬성 | 반대 | 반대 |

**(전남)**

| | 더불어민주당 | 바른미래당 | 민주평화당 | 정의당 |
|---|---|---|---|---|
| 정부 기업 규제 | 찬성 | 찬성 | 찬성 | 무응답 |
| 정부 복지 정책 | 반대 | 반대 | 반대 | 무응답 |
| 한국 경제체제의 불공정 여부 | 반대 | 찬성 | 찬성 | 무응답 |
| 이민자 증가 | 반대 | 반대 | 반대 | 무응답 |
| 동성애 수용 | 반대 | 찬성 | 반대 | 무응답 |
| 국가 안보 > 개인의 사생활 | 찬성 | 찬성 | 찬성 | 무응답 |
| 토지 공개념 헌법화 | 찬성 | 찬성 | 찬성 | 무응답 |
| 포털사이트 댓글 규제 | 찬성 | 반대 | 찬성 | 무응답 |
| 특목고 폐지 | 반대 | 찬성 | 찬성 | 무응답 |
| 최저임금 인상 | 찬성 | 찬성 | 찬성 | 무응답 |
| 국민건강보험 진료범위 확대 | 찬성 | 찬성 | 찬성 | 무응답 |
|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 찬성 | 반대 | 찬성 | 무응답 |
| 가상화폐 규제 | 찬성 | 반대 | 찬성 | 무응답 |
| 재건축 추가이익 환수 | 찬성 | 찬성 | 찬성 | 무응답 |
| 근로시간 단축 | 찬성 | 찬성 | 찬성 | 무응답 |
| 노동이사제 도입 | 찬성 | 찬성 | 찬성 | 무응답 |
| 공공기관 블라인드 채용 | 반대 | 찬성 | 찬성 | 무응답 |
| 양성평등 교육 의무화 | 찬성 | 찬성 | 찬성 | 무응답 |
| 군 복무기간 단축 | 찬성 | 반대 | 찬성 | 무응답 |
| 주한미군 철수 | 반대 | 반대 | 반대 | 무응답 |
| 낙태 허용 | 반대 | 찬성 | 찬성 | 무응답 |
| 청년수당 확대 | 반대 | 찬성 | 찬성 | 무응답 |
| 차량 2부제 실시 | 반대 | 찬성 | 반대 | 무응답 |
| 국공립태 통합 | 반대 | 찬성 | 찬성 | 무응답 |
| 탈원전 | 반대 | 반대 | 찬성 | 무응답 |
| 파주 제2개성공단 설립 | 찬성 | 찬성 | 찬성 | 무응답 |
| 흑산공항 건설 | 찬성 | 찬성 | 찬성 | 무응답 |
| 생활폐기물 연료 사용 | 반대 | 반대 | 반대 | 무응답 |
| 전남도 산하 기관 확대 | 찬성 | 반대 | 반대 | 무응답 |
| 한전공대 나주시 유치 | 찬성 | 찬성 | 찬성 | 무응답 |
| 제2 행정부지사직 신설 | 찬성 | 찬성 | 찬성 | 무응답 |

**(경북)**

| | 더불어민주당 | 자유한국당 | 바른미래당 | 정의당 |
|---|---|---|---|---|
| 정부 기업 규제 | 찬성 | 반대 | 반대 | 찬성 |
| 정부 복지 정책 | 반대 | 반대 | 반대 | 반대 |
| 한국 경제체제의 불공정 여부 | 찬성 | 반대 | 반대 | 찬성 |
| 이민자 증가 | 반대 | 반대 | 반대 | 반대 |
| 동성애 수용 | 찬성 | 반대 | 반대 | 찬성 |
| 국가 안보 > 개인의 사생활 | 반대 | 찬성 | 반대 | 반대 |
| 토지 공개념 헌법화 | 찬성 | 반대 | 찬성 | 찬성 |
| 포털사이트 댓글 규제 | 반대 | 찬성 | 반대 | 반대 |
| 특목고 폐지 | 찬성 | 찬성 | 반대 | 찬성 |
| 최저임금 인상 | 찬성 | 반대 | 반대 | 찬성 |
| 국민건강보험 진료범위 확대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 찬성 | 반대 | 찬성 | 찬성 |
| 가상화폐 규제 | 찬성 | 반대 | 반대 | 찬성 |
| 재건축 추가이익 환수 | 찬성 | 반대 | 찬성 | 찬성 |
| 근로시간 단축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노동이사제 도입 | 찬성 | 반대 | 반대 | 찬성 |
| 공공기관 블라인드 채용 | 찬성 | 반대 | 찬성 | 찬성 |
| 양성평등 교육 의무화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군 복무기간 단축 | 찬성 | 반대 | 반대 | 찬성 |
| 주한미군 철수 | 찬성 | 반대 | 반대 | 찬성 |
| 낙태 허용 | 찬성 | 반대 | 찬성 | 찬성 |
| 청년수당 확대 | 찬성 | 반대 | 반대 | 찬성 |
| 차량 2부제 실시 | 찬성 | 반대 | 찬성 | 찬성 |
| 국공립태 통합 | 반대 | 반대 | 반대 | 찬성 |
| 탈원전 | 찬성 | 반대 | 찬성 | 찬성 |
| 파주 제2개성공단 설립 | 찬성 | 반대 | 찬성 | 찬성 |
| 취수원 이전 | 반대 | 반대 | 반대 | 반대 |
| 성주군 사드 배치 | 반대 | 찬성 | 반대 | 반대 |
| 핵연료 임시저장시설 | 반대 | 반대 | 찬성 | 반대 |
| K2공군기지·대구민간공항 이전 | 찬성 | 찬성 | 찬성 | 반대 |
| 포항 지열발전소 중단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경남)

| | 더불어민주당 | 자유한국당 | 바른미래당 | 정의당 |
|---|---|---|---|---|
| 정부 기업 규제 | 무응답 | 반대 | 반대 | 찬성 |
| 정부 복지 정책 | 무응답 | 반대 | 반대 | 반대 |
| 한국 경제체제의 불공정 여부 | 무응답 | 찬성 | 반대 | 찬성 |
| 이민자 증가 | 무응답 | 반대 | 반대 | 반대 |
| 동성애 수용 | 무응답 | 찬성 | 찬성 | 찬성 |
| 국가 안보 > 개인의 사생활 | 무응답 | 찬성 | 반대 | 반대 |
| 토지 공개념 헌법화 | 무응답 | 반대 | 반대 | 찬성 |
| 포털사이트 댓글 규제 | 무응답 | 찬성 | 찬성 | 반대 |
| 특목고 폐지 | 무응답 | 반대 | 반대 | 찬성 |
| 최저임금 인상 | 무응답 | 반대 | 반대 | 찬성 |
| 국민건강보험 진료범위 확대 | 무응답 | 찬성 | 찬성 | 찬성 |
|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 무응답 | 반대 | 찬성 | 찬성 |
| 가상화폐 규제 | 무응답 | 반대 | 찬성 | 찬성 |
| 재건축 추가이익 환수 | 무응답 | 찬성 | 반대 | 찬성 |
| 근로시간 단축 | 무응답 | 반대 | 반대 | 찬성 |
| 노동이사제 도입 | 무응답 | 반대 | 반대 | 찬성 |
| 공공기관 블라인드 채용 | 무응답 | 찬성 | 찬성 | 찬성 |
| 양성평등 교육 의무화 | 무응답 | 찬성 | 찬성 | 찬성 |
| 군 복무기간 단축 | 무응답 | 찬성 | 반대 | 찬성 |
| 주한미군 철수 | 무응답 | 반대 | 반대 | 찬성 |
| 낙태 허용 | 무응답 | 찬성 | 찬성 | 찬성 |
| 청년수당 확대 | 무응답 | 찬성 | 반대 | 찬성 |
| 차량 2부제 실시 | 무응답 | 반대 | 찬성 | 찬성 |
| 국공립태 통합 | 무응답 | 반대 | 반대 | 찬성 |
| 탈원전 | 무응답 | 반대 | 반대 | 찬성 |
| 파주 제2개성공단 설립 | 무응답 | 반대 | 찬성 | 찬성 |
| 진주의료원 재개원 | 무응답 | 반대 | 반대 | 찬성 |
| 무상급식 지원 확대 | 무응답 | 찬성 | 찬성 | 찬성 |
| 혁신학교 확대 | 무응답 | 반대 | 찬성 | 찬성 |
| 지리산 케이블카 | 무응답 | 찬성 | 찬성 | 찬성 |
| 김해공항 확장 | 무응답 | 찬성 | 반대 | 찬성 |

**(제주)**

| | 더불어민주당 | 자유한국당 | 민주평화당 | 정의당 |
|---|---|---|---|---|
| 정부 기업 규제 | 찬성 | 반대 | 무응답 | 찬성 |
| 정부 복지 정책 | 반대 | 찬성 | 무응답 | 반대 |
| 한국 경제체제의 불공정 여부 | 찬성 | 찬성 | 무응답 | 반대 |
| 이민자 증가 | 반대 | 찬성 | 무응답 | 반대 |
| 동성애 수용 | 찬성 | 반대 | 무응답 | 반대 |
| 국가 안보 > 개인의 사생활 | 찬성 | 찬성 | 무응답 | 찬성 |
| 토지 공개념 헌법화 | 찬성 | 반대 | 무응답 | 찬성 |
| 포털사이트 댓글 규제 | 찬성 | 찬성 | 무응답 | 찬성 |
| 특목고 폐지 | 찬성 | 반대 | 무응답 | 반대 |
| 최저임금 인상 | 찬성 | 반대 | 무응답 | 반대 |
| 국민건강보험 진료범위 확대 | 찬성 | 찬성 | 무응답 | 찬성 |
|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 찬성 | 찬성 | 무응답 | 찬성 |
| 가상화폐 규제 | 찬성 | 반대 | 무응답 | 반대 |
| 재건축 추가이익 환수 | 찬성 | 찬성 | 무응답 | 찬성 |
| 근로시간 단축 | 찬성 | 반대 | 무응답 | 찬성 |
| 노동이사제 도입 | 찬성 | 반대 | 무응답 | 반대 |
| 공공기관 블라인드 채용 | 찬성 | 찬성 | 무응답 | 찬성 |
| 양성평등 교육 의무화 | 찬성 | 찬성 | 무응답 | 찬성 |
| 군 복무기간 단축 | 찬성 | 반대 | 무응답 | 찬성 |
| 주한미군 철수 | 반대 | 반대 | 무응답 | 반대 |
| 낙태 허용 | 반대 | 찬성 | 무응답 | 반대 |
| 청년수당 확대 | 찬성 | 반대 | 무응답 | 찬성 |
| 차량 2부제 실시 | 찬성 | 찬성 | 무응답 | 반대 |
| 국공립태 통합 | 찬성 | 반대 | 무응답 | 반대 |
| 탈원전 | 찬성 | 반대 | 무응답 | 반대 |
| 파주 제2개성공단 설립 | 찬성 | 반대 | 무응답 | 찬성 |
| 부동산 투자이민제 지속 | 반대 | 반대 | 무응답 | 찬성 |
| 제주 제2공항 건설 | 반대 | 찬성 | 무응답 | 찬성 |
| 영리병원 허용 | 반대 | 찬성 | 무응답 | 무응답 |
| 제주형 대중교통 우선차로제 | 반대 | 반대 | 무응답 | 찬성 |
| 쓰레기 요일제 지속 | 찬성 | 반대 | 무응답 | 찬성 |

부록 5. 광역단체별 설문문항 추정값

| 문항 | 서울 | 부산 | 대구 | 인천 | 광주 | 대전 |
|---|---|---|---|---|---|---|
| 정부 복지 해로움 | 1.389 | 1.640 | 1.554 | 2.087 | 3.492 | 2.295 |
| 이민자 한국 사회 위협 여부 | 2.209 | -0.934 | -2.490 | 2.262 | -2.349 | -1.227 |
| 국가 안보가 자유보다 중요 | 1.560 | 2.006 | -0.603 | -0.494 | 23.442 | -0.239 |
| 포털 댓글 규제 | -1.424 | 2.904 | 2.659 | 2.531 | 4.770 | 5.378 |
| 정부의 기업규제 | 1.261 | 1.546 | 1.207 | 1.788 | 2.044 | 1.955 |
| 한국 경제 불공정 여부 | 1.819 | 2.059 | 2.092 | 3.265 | 2.609 | 1.831 |
| 동성애 수용 여부 | 0.197 | 0.496 | 0.441 | -0.144 | -0.438 | -0.208 |
| 토지공개념 | 0.584 | 0.676 | 0.476 | 0.858 | 1.324 | 0.663 |
| 특목고 폐지 | 0.536 | 0.977 | 0.853 | 1.270 | 1.366 | 1.255 |
| 최저임금 1만원 인상 | 0.443 | 0.287 | 0.136 | 0.572 | 0.754 | 0.556 |
| 건강보험 진료범위 확대 | 1.816 | 2.078 | 1.859 | 2.088 | 1.532 | 1.676 |
|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 0.447 | 0.448 | 0.253 | 0.817 | 0.889 | 0.616 |
| 가상화폐 규제 | 1.779 | 1.891 | 1.447 | 1.826 | 1.702 | 1.476 |
| 부동산 초과이익환수제 | 1.023 | 1.186 | 0.732 | 1.709 | 1.526 | 1.398 |
| 근로시간 단축 | 0.876 | 0.881 | 0.972 | 1.166 | 1.094 | 1.186 |
| 노동이사제 | 0.220 | 0.311 | 0.134 | 0.706 | 0.741 | 0.461 |
| 공공기관 블라인드채용 | 1.185 | 1.424 | 1.152 | 1.314 | 1.226 | 1.273 |
| 양성평등 교육 의무화 | 1.860 | 1.835 | 1.778 | 2.026 | 1.764 | 1.957 |
| 군 복무기간 단축 | -0.233 | -0.164 | -0.287 | -0.198 | 0.677 | -0.168 |
| 주한미군 철수 | -0.272 | 0.198 | -0.008 | -0.087 | 1.204 | -0.579 |
| 임신중절(낙태) 허용 | 2.302 | 3.125 | 2.086 | 1.424 | 1.378 | 1.504 |
| 청년수당 확대 | 0.029 | -0.051 | -0.133 | 0.185 | 0.849 | 0.385 |
| 미세먼지 저감조치(2부제) 실시 | 0.109 | 0.283 | -0.420 | 0.757 | 1.017 | -0.033 |
| 국공립대 통합 | -0.561 | -0.275 | -0.394 | 0.503 | 1.787 | -0.237 |
| 탈원전 | 0.264 | 0.517 | 0.270 | 0.388 | 0.762 | 0.263 |
| 파주 제2개성공단 | 0.248 | 0.164 | -0.135 | 0.818 | 0.722 | 0.473 |

| 문항 | 울산 | 경기 | 강원 | 충북 | 충남 | 전북 |
|---|---|---|---|---|---|---|
| 정부 복지 해로움 | 1.513 | 1.721 | 1.109 | 2.313 | 2.138 | 1.496 |
| 이민자 한국 사회 위협 여부 | -1.802 | -1.482 | -1.029 | -3.020 | 0.974 | 1.660 |
| 국가 안보가 자유보다 중요 | -0.600 | 1.004 | -2.051 | -15.236 | -0.120 | -0.308 |
| 포털 댓글 규제 | 2.330 | 9.209 | 5.907 | 2.659 | 1.854 | -1.019 |
| 정부의 기업규제 | 1.473 | 1.501 | 1.541 | 1.944 | 1.761 | 2.702 |
| 한국 경제 불공정 여부 | 2.188 | 2.346 | 2.359 | 2.091 | 2.383 | 1.618 |
| 동성애 수용 여부 | -0.088 | -0.580 | -0.383 | 1.753 | 0.503 | 0.930 |
| 토지공개념 | 0.708 | 0.915 | 0.549 | 0.992 | 1.088 | 0.917 |
| 특목고 폐지 | 0.715 | 0.772 | 0.682 | 1.376 | 1.309 | 0.958 |
| 최저임금 1만원 인상 | 0.318 | 0.547 | 0.760 | 0.616 | 0.575 | 0.686 |
| 건강보험 진료범위 확대 | 2.443 | 2.134 | 2.519 | 1.958 | 1.980 | 1.635 |
|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 0.656 | 0.675 | 0.629 | 0.714 | 0.794 | 0.724 |
| 가상화폐 규제 | 1.419 | 3.046 | 2.093 | 1.927 | 1.762 | 2.107 |
| 부동산 초과이익환수제 | 1.142 | 1.813 | 1.144 | 1.999 | 1.287 | 1.237 |
| 근로시간 단축 | 0.930 | 1.157 | 1.271 | 1.132 | 1.478 | 1.048 |
| 노동이사제 | 0.427 | 0.323 | 0.620 | 0.825 | 0.752 | 0.699 |
| 공공기관 블라인드채용 | 1.601 | 1.306 | 1.243 | 2.011 | 1.752 | 1.093 |
| 양성평등 교육 의무화 | 1.745 | 2.016 | 1.934 | 2.062 | 1.854 | 1.404 |
| 군 복무기간 단축 | -0.220 | 0.212 | -0.209 | -0.033 | -0.006 | 0.316 |
| 주한미군 철수 | 0.658 | 0.416 | 0.336 | -0.558 | -0.395 | -0.174 |
| 임신중절(낙태) 허용 | 2.533 | 2.190 | 1.750 | 2.109 | 1.761 | 3.863 |
| 청년수당 확대 | -0.019 | 0.309 | 0.136 | 0.128 | 0.234 | 0.118 |
| 미세먼지 저감조치(2부제) 실시 | -0.295 | -0.034 | 1.191 | 1.933 | -0.246 | 1.373 |
| 국공립대 통합 | -0.068 | 0.313 | -0.262 | -0.600 | 1.713 | -0.505 |
| 탈원전 | 0.655 | 0.299 | 0.500 | 0.416 | 0.842 | 0.636 |
| 파주 제2개성공단 | 0.336 | 0.627 | 0.140 | 0.163 | 0.417 | 0.653 |

| 문항 | 전남 | 경북 | 경남 | 제주 |
|---|---|---|---|---|
| 정부 복지 해로움 | 1.736 | 1.717 | 1.807 | 2.856 |
| 이민자 한국 사회 위협 여부 | 1.529 | -1.341 | -2.501 | -4.630 |
| 국가 안보가 자유보다 중요 | 0.478 | 1.315 | -0.296 | 1.375 |
| 포털 댓글 규제 | 1.643 | -0.231 | 1.603 | 1.745 |
| 정부의 기업규제 | 1.739 | 1.557 | 1.916 | 1.815 |
| 한국 경제 불공정 여부 | 2.554 | 1.882 | 2.037 | 1.860 |
| 동성애 수용 여부 | 1.054 | 0.522 | 1.358 | 1.633 |
| 토지공개념 | 1.003 | 0.404 | 0.804 | 0.616 |
| 특목고 폐지 | 1.338 | 0.714 | 1.083 | 0.438 |
| 최저임금 1만원 인상 | 1.042 | 0.328 | 0.481 | 0.637 |
| 건강보험 진료범위 확대 | 1.832 | 1.512 | 2.160 | 1.663 |
|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 0.869 | 0.722 | 0.367 | 0.762 |
| 가상화폐 규제 | 1.146 | 1.195 | 1.818 | 2.092 |
| 부동산 초과이익환수제 | 1.277 | 1.209 | 1.193 | 0.821 |
| 근로시간 단축 | 1.103 | 0.842 | 0.938 | 1.204 |
| 노동이사제 | 0.450 | 0.154 | 0.297 | 0.616 |
| 공공기관 블라인드채용 | 1.358 | 1.506 | 1.589 | 1.348 |
| 양성평등 교육 의무화 | 1.658 | 1.560 | 1.840 | 1.349 |
| 군 복무기간 단축 | 0.175 | -0.220 | -0.066 | 0.314 |
| 주한미군 철수 | 0.017 | -0.607 | -0.305 | 0.310 |
| 임신중절(낙태) 허용 | 2.046 | 1.883 | 1.839 | 2.114 |
| 청년수당 확대 | 0.493 | 0.373 | -0.036 | 0.633 |
| 미세먼지 저감조치(2부제) 실시 | 0.212 | -0.266 | -0.060 | 0.839 |
| 국공립대 통합 | 1.373 | -0.594 | -0.441 | -0.284 |
| 탈원전 | 0.679 | 0.204 | 0.353 | 0.621 |
| 파주 제2개성공단 | 1.003 | 0.109 | 0.013 | 0.505 |

부록 6. 지방선거 후보자의 실제 정책입장과 유권자의 인식

| ■서울 | 정의당 | 더불어민주당 | 바른미래당 | 자유한국당 |
|---|---|---|---|---|
| 유권자 인식(0~10 점) | 3.387 | 3.627 | 5.945 | 7.603 |
| 유권자 인식(퍼센타일) | 25 | 25 | 68 | 87 |
| 실제 정책입장(퍼센타일) | 1 | 6 | 76 | 90 |
| **■부산** | 정의당 | 더불어민주당 | 바른미래당 | 자유한국당 |
| 유권자 인식(0~10 점) | 3.412 | 3.499 | 5.861 | 7.531 |
| 유권자 인식(퍼센타일) | 24 | 24 | 70 | 90 |
| 실제 정책입장(퍼센타일) | 1 | 5 | 60 | 87 |
| **■대구** | 더불어민주당 | 바른미래당 | 자유한국당 | |
| 유권자 인식(0~10 점) | 3.4 | 5.571 | 7.485 | |
| 유권자 인식(퍼센타일) | 21 | 65 | 87 | |
| 실제 정책입장(퍼센타일) | 3 | 37 | 83 | |
| **■인천** | 정의당 | 더불어민주당 | 바른미래당 | 자유한국당 |
| 유권자 인식(0~10 점) | 3.458 | 3.493 | 5.687 | 7.498 |
| 유권자 인식(퍼센타일) | 32 | 32 | 73 | 89 |
| 실제 정책입장(퍼센타일) | 1 | 14 | 51 | 92 |
| **■광주** | 정의당 | 더불어민주당 | | |
| 유권자 인식(0~10 점) | 3.634 | 3.969 | | |
| 유권자 인식(퍼센타일) | 34 | 34 | | |
| 실제 정책입장(퍼센타일) | 1 | 10 | | |
| **■대전** | 정의당 | 더불어민주당 | 바른미래당 | 자유한국당 |
| 유권자 인식(0~10 점) | 3.449 | 3.597 | 5.851 | 7.626 |
| 유권자 인식(퍼센타일) | 29 | 29 | 74 | 89 |
| 실제 정책입장(퍼센타일) | 1 | 14 | 95 | 60 |
| **■울산** | 더불어민주당 | 자유한국당 | | |
| 유권자 인식(0~10 점) | 3.474 | 7.706 | | |
| 유권자 인식(퍼센타일) | 28 | 95 | | |
| 실제 정책입장(퍼센타일) | 2 | 87 | | |
| **■경기** | 정의당 | 더불어민주당 | 바른미래당 | 자유한국당 |
| 유권자 인식(0~10 점) | 3.411 | 3.516 | 5.919 | 7.623 |
| 유권자 인식(퍼센타일) | 26 | 26 | 72 | 89 |
| 실제 정책입장(퍼센타일) | 1 | 6 | 86 | 59 |

| ■강원 | 더불어민주당 | 자유한국당 | | |
|---|---|---|---|---|
| 유권자 인식(0~10 점) | 3.271 | 7.563 | | |
| 유권자 인식(퍼센타일) | 29 | 90 | | |
| 실제 정책입장(퍼센타일) | 1 | 93 | | |
| **■충북** | 더불어민주당 | 바른미래당 | 자유한국당 | |
| 유권자 인식(0~10 점) | 3.491 | 5.92 | 7.771 | |
| 유권자 인식(퍼센타일) | 31 | 75 | 91 | |
| 실제 정책입장(퍼센타일) | 4 | 84 | 54 | |
| **■충남** | 더불어민주당 | 자유한국당 | | |
| 유권자 인식(0~10 점) | 3.536 | 7.451 | | |
| 유권자 인식(퍼센타일) | 32 | 92 | | |
| 실제 정책입장(퍼센타일) | 18 | 79 | | |
| **■전북** | 정의당 | 더불어민주당 | 민주평화당 | |
| 유권자 인식(0~10 점) | 3.283 | 3.546 | 4.597 | |
| 유권자 인식(퍼센타일) | 38 | 38 | 53 | |
| 실제 정책입장(퍼센타일) | 10 | 34 | 37 | |
| **■전남** | 정의당 | 더불어민주당 | 민주평화당 | 바른미래당 |
| 유권자 인식(0~10 점) | 3.411 | 3.514 | 4.814 | 6.097 |
| 유권자 인식(퍼센타일) | 36 | 36 | 45 | 91 |
| 실제 정책입장(퍼센타일) | 4 | 58 | 18 | 64 |
| **■경북** | 정의당 | 더불어민주당 | 바른미래당 | 자유한국당 |
| 유권자 인식(0~10 점) | 3.425 | 3.567 | 5.598 | 7.329 |
| 유권자 인식(퍼센타일) | 21 | 21 | 74 | 91 |
| 실제 정책입장(퍼센타일) | 1 | 1 | 67 | 95 |
| **■경남** | 더불어민주당 | 바른미래당 | 자유한국당 | |
| 유권자 인식(0~10 점) | 3.599 | 5.664 | 7.469 | |
| 유권자 인식(퍼센타일) | 24 | 72 | 90 | |
| 실제 정책입장(퍼센타일) | 4 | 85 | 85 | |
| **■제주** | 더불어민주당 | 바른미래당 | 자유한국당 | |
| 유권자 인식(0~10 점) | 3.537 | 5.986 | 7.483 | |
| 유권자 인식(퍼센타일) | 35 | 82 | 93 | |
| 실제 정책입장(퍼센타일) | 3 | 84 | 89 | |

## Abstract

# A Study on the Ideological Positioning of the Candidates in the Korean Election Campaigns: Median Voters vs. Clarity



Youha Shim

Department of Communication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What positioning do candidates take in Korean elections? There can be two hypotheses for this. First, it can be hypothesized that candidates will position themselves closer to the position of median voters. In other words, candidates are likely to take their position as close as possible to the position of median voters, since minimizing the policy distance from the largest number of voters will be advantageous in winning the election. On the other hand, according to the Directional Model, voters make their voting decisions in two stages: first, they decide on which camp they support, and then they vote for the candidate with the most extreme tendencies in the camp.

In this study, the candidates who ran in the 19th presidential election in 2017 and the 7th local election in 2018 were asked about their ideological positions on some 15-30 policy issues and the results were collected to examine the ideological positioning of the candidates running for two major elections in Korea during the campaign period. And then, a self-study was conducted for regular voters asking their positions on the same policy issues, while the same questionnaire was included in the 2017 Korean Social Survey. The item response model was applied here so that the policy positions of each voter and candidate could be compared on the same axis.

To begin with, it was examined how the candidates' positioning strategies were drafted during the election process. To this end, the candidates' policy propensity scores were obtained first, and then the scores were compared with the distribution of voters' policy

propensity scores to see whether the candidates' positioning was closer to the 'direction model' or the 'proximity model.' The comparison of the scores indicated that among the candidates from the two major parties, the Democratic candidates placed more emphasis on clarity in both the presidential and local elections. On the other hand, the candidates from the Liberty Korea Party positioned themselves in a relatively conservative position, appealing to the average or middle-class voters supporting the Liberty Korea Party rather than to clarity. The difference between these camps can be interpreted as originating from the fact that this study was conducted at a time when regular voters had highly negative views on the conservative camp in the aftermath of the impeachment of former President Park Geun-hye.

Next, it was investigated whether the fiercer the competition for clarity of the candidates became in the more contested regions in the local election. The results showed that both the parties tended to adopt more neutral strategies in regions where they won the presidential election by a large margin in votes, that is, in regions with low competition. In particular, the candidates from the Liberty Korea Party showed this tendency more clearly. Also, the candidates tended to compete for clarity with no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he two major parties.

Then, how much different will this positioning of the candidates be from the actual policy preferences of voters? In other words, what are the implications of this competition for clarity for representative democracy? In this study, the actual voting results were compared with the election results obtained assuming that voters cast a policy vote. The results from this analysis showed that there is a big discrepancy between the actual election results and the election results based on a policy vote. This implies that the polarized positioning of candidates acts as an impediment to the perceived representation of candidates in representative democracy.

Do the voters perceive the candidates' extreme policy positions? It was examined in this study how much the candidates' ideological tendencies perceived by voters are consistent with the actual ideological tendencies of the candidates. For this, the 'Questions on Ideological Tendencies of the Candidate that the Respondent Perceives' listed in the questionnaire (0-10 point scale) were measured and analyzed. It was found that in the case of the 19th presidential election, there was a significant gap between the ideological positions of the candidates perceived by the voters from the two major political parties and the actual positions of the candidates' policy preferences. In particular, the voters perceived the candidates from the Democratic Party to be more moderate than they actually were, while they perceived the candidates from the Liberty Korea Party to be more extreme than they really were. Similarly, in the local election, the voters recognized the Democratic Party

candidates as more moderate than they actually were, whereas they recognized the Liberty Korea Party candidates as extreme. In the local election, however, the candidates from the Liberty Korea Party responded that they were actually extreme, which was similar to the voters' perception of them. This systematic error in perception may be due to the phenomenon of projection where the atmosphere of judging the conservatives that was widely spread in Korean society in 2017 made the respondents evaluate the policy positions of their preferred candidates as 'moderate' and their counterparts as 'extreme.' In other words, it seems that rather than making voting decisions based on the policy positions of the candidates, the voters perceived the candidates they supported to be more moderate than they actually were, while they perceived the candidates they did not support to be more extreme than they really were.

In conclusion, it seems that there is a keen competition for clarity among the political elites, and there is a systematic error in the voters' perceptions of the actual policy positions of the candidates. On the other hand, this competition for clarity had obvious implications for representative democracy. There was a clear gap between the policy preferences of the elected candidates and those of the voters. As a result, political elites seem very likely to present highly polarized options, thereby aggravating political polarization among voters and repeating a vicious cycle that further deepens the overall political polarization.

**Keywords**: candidate positioning, median voters, competition for clarity, political polarization, item response theory(IRT), issue voting, spatial model

***Student Number*** *: 2013-22841*